

발간등록번호

11-1541000-000422-10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2011. 4.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목 차

I. 행사 개요	1
II. 2011년 업무계획	5
1. 서면보고서	7
2. Presentation (PPT)	163
3. 만화로 보는 업무계획	191
III. 보도자료	237
1. 보도자료	239
2. 2011 업무보고 관련 문답자료	257
IV. 언론 보도내용	289
V. 국회 상임위 보고(3.4)	311

I

행사 개요

행 사 개 요

□ 일시 : 12.27(수) 16:00~17:30(90분)

○ 시작행사 : 10분(참석자 소개, 모두말씀 등)

※ 사전행사(15:30~16:00) : 15분(구제역 상황실 방문)

○ 업무보고 : 20분(농림수산식품부 업무 보고)

○ 토 론 : 60분(마무리말씀 포함)

□ 장소 : 농림수산식품부 대회의실

□ 보고내용 : 2011년도 업무계획

⇒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가축질병 대응체계개선 등 농어업 위험관리 역량강화·농어업 성장동력 확충, 농어촌지역 활성화 등 핵심 추진 과제

□ 보고형식

○ 보고자 : 장관

○ 업무보고(파워포인트) 후, 다음 주제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

- 농수산물 가격불안 해소방안(한식세계화 추진)

Ⅱ

2011년 업무계획

1. 서면보고서
2. Presentation (PPT)
3. 만화로 보는 업무계획

1. 서면보고서

2011년도 업무계획

2011년도 업무계획

-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2010. 12. 27.



잘 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목 차 ❖

I. 2010년 추진실적 평가	13
II. 2011년 여건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	21
III. 주요 추진과제	27
1. 농어업 분야 위험관리 강화	29
(1) 가축질병 대응 강화	29
(2) 농수산물 가격 불안 해소	31
(3) 쌀 수급안정 및 가공산업 발전	36
(4) 재해 등 위험관리 강화	40
(5)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	43
(6) 농식품 안전·품질 관리 강화	47
2. 성장동력 확충	55
(1) 농식품 R&D 개편	55
(2)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57
(3) 국제곡물 가격상승 대응 및 해외 농림어업 개발	65

(4)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71
(5) 종자·생명산업 육성	75
(6) FTA / DDA 협상 대응	79
3. 농어촌 지역 활성화	83
(1) 인력육성 및 귀농·귀촌 활성화	83
(2) 농어촌 사회 안정	87
(3) 농어가 경영안정장치 확충	91
(4)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93
(5) 보조금 지원 방식 개편	97
(6) 민간투자 활성화	98
(7) 협동조합 선진화	100
(8)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103
IV. 과제별 주요일정	105
< 참고 > 2010년 업무계획 추진실적	115
< 별첨1 > 2011년 농촌진흥청 업무계획	125
< 별첨2 > 2011년 산림청 업무계획	145

I . 2010년 추진실적 평가

1. 성과

□ (농림어업 생산액)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농림어업 생산액의 지속적인 증가로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

* 농림어업 생산액 : ('05) 41.3조원 → ('07) 41.6 → ('08) 46.0 → ('09) 49.9

○ 음식점 원산지 표시, 쇠고기 이력제 등 주요 정책이 축산물, 과실류 등의 생산 증가와 농가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진 결과

* 축산업 생산액 : ('05) 11.8조원 → ('07) 11.3 → ('08) 13.6 → ('09) 16.5

□ (농어가 경영안정) 농어가 경영마인드 확산 및 재해보험 등 소득·경영 안정장치 내실화

○ 민·관 합동 비용절감 운동본부 설립, 비용절감 종합대책 수립 등 농어가 경영마인드의 확산체계를 구축

○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07 : 21개 → '09 : 34 → '10 : 41)

○ 농기계 은행사업 등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 밭(이용 농가) : ('07) 16천호 → ('10) 80 / 논(작업 대행) : ('08) 7천ha → ('10) 77

□ (식품산업·수출) 사상 최대 규모의 농식품 수출실적 달성 및 고부가가치·글로벌 식품산업 육성 기반을 확충

○ '10년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60억불 내외 전망(12.15일 기준 55억불), 기존의 연간 사상 최대치('09년, 48억불) 초과, 일본 추월

- 식품산업 구조가 수출지향형으로 변모하기 시작

* 주요 가공식품 생산량 대비 수출비중 : ('06) 6.1% → ('08) 6.6 → ('09) 7.2

○ 김치연구소 설립(3월),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 마련(7월) 및 코리아 푸드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11월)

- 한식세계화 가능성 확인 및 국내 외식기업 해외진출 가속화
 - * 외식 해외진출: ('05) 44개 업체 221개 점포 → ('08) 51, 797 → ('10.11) 56, 993
- 쌀가공산업 활성화 방안('09.8) 추진 이후 시장 확대 기반 마련
 - * 가공용 쌀 소비량(쌀가루 소비량) : ('07) 18만톤(3만톤) → ('10p) 30(8)
- (규제 개혁) 농식품분야 규제개혁 가속화로 강한 농림수산 식품산업 육성을 뒷받침
 - 영농여건불리 농지 소유제한 완화, 음식점 원산지표시 확대 등 현장 체감형 규제개혁 실시(3년간 총 318건 규제 개선)
 - 농산어촌현장 애로개선(6월), 식품산업 관련 규제합리화(10월) 등
 - * 농림수산식품부, 2010년 규제개혁 최우수부처로 선정(12월)
- (수산업) 신수산 정책 추진 등을 통한 수산업 성장 기반 구축
 - 수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한 제3차 수산진흥대책('10~'14) 수립
 - 지도·경제사업 부문 통합 등 수협법 개정·시행(10월)
 - 러시아와 수산협력 강화로 명태, 오징어 등 조업쿼터 확대
 - * 러시아 수역 어획쿼터 : ('10) 60,565톤 → ('11) 63,966
- (식품 안전) 친환경 농산물 생산 확대 및 소비자 알 권리 증진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10p)은 191천ha(전체면적 대비 11.0%)로 최근 5년('06~'10) 동안 약 30%의 지속적인 증가세 유지
 -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및 이력관리제 확대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이 강화되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 쌀, 배추김치, 배달용 치킨 등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 의무화(8월)
 - 국산('09.6월)에 이어 수입산 쇠고기 이력관리제 시행(12월)

□ (미래 준비) 생명자원을 활용한 생명산업 발전 토대 마련 및 농식품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기반 구축

- 생명산업 大展(6.17~19) ,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8.5) 등으로 생명산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농식품모태펀드의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본격 투자 준비
 -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5.26), 투자관리 전문기관 지정 및 농식품모태펀드 결성(9.30, 597억원)

□ (농어촌) 제2차 농어촌 삶의 질 향상계획('10~'14)의 본격 추진 등 범정부적 농어촌 발전전략 마련

-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 운영 기틀 마련
 - * 농어촌 서비스 기준 : 주거, 보건 의료 등 8개 분야 31개 항목
- 지역의 현안과제를 주민이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 정책 강화
 - *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방안(4월), 고용부와 협력강화를 위한 MOU(10월)
- FAO아태총회(9.27~10.1), G-20 정상회의 등과 연계, 한국적 전통 경관을 보유한 농어촌 대표명소 20곳을 선정하여 홍보

□ (생산기반) 기후변화 대응, 수질 개선 등 안정영농 기반 구축

- 저수지 뚝 높이기, 농경지 리모델링의 차질 없는 추진
 - * 저수지 뚝 높이기(총 113지구) 91지구 및 농경지 리모델링(총 140개소) 134개소 착공
- 새만금 방조제공사 완공(4월), 내부개발 추진을 위한 농업용지구간 방수제(54km)공사 착공(7~9월)
 - * 세계 최장 방조제로서 기네스월드레코드 등재(8월)

2. 반 성

- (농식품 물가불안) 국제곡물 가격 상승, 이상기상 등에 따른 농식품 수급불안 및 물가상승에 대한 효과적 대응 미흡
 -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물가가 큰 폭으로 상승
 - * 소비자 물가지수(11월, 전년 동월 비) : 3.3% 상승 / 농축수산물 17.9% 상승
 - 채소류 수급안정 긴급대책 추진으로 급격한 가격상승은 어느 정도 안정되었으나, 높은 가격 변동성에 대한 완화시스템 미흡
 - * 채소류 물가 : (8월) 140.8 → (9월) 203.7 → (10월) 206.5 → (11월) 155.7
- (쌀산업 구조 개선 미흡) 연속된 풍년에 따른 수급불안에 대해 선제적 대응에는 어느 정도 성과, 구조적인 대응은 미흡
 - 수확기 이전 수급안정 대책의 선제적 확정·발표(8월)를 통해 추가적인 쌀값 하락을 막고, 농업인의 심리적 안정을 유도
 - * 산지쌀값 : ('10.1월) 140,855원/80kg → (8월) 131,900 → (11월) 136,760
 - 구조적 과잉에 대한 근본적 대응방안 마련 미흡 및 쌀 관세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 미도출
- (농협법 개정 지연)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농협법 개정안 처리 지연
 - 농협과는 지속적인 협의·조정을 통해 이견을 대부분 해소
 - 금년 2월 국회에 상정된 농협법 개정안은 원 재구성 등의 국회일정 등으로 인해 상임위 계류 중

□ (새로운 유형의 재해대응 미흡) 연초부터 발생한 여러 재해에 대해 사후적 대응 위주로 대처하는 한계 노출

○ 동해(凍害), 일조량 부족, 벼 백수피해, 낭충봉아부패병 등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재해·질병 발생

- 피해복구를 위해 현장점검 및 재난복구비 지원 등 신속히 대응

○ 기상이변에 대한 예측 및 사전적 대응 체계가 아직은 미흡

□ (구제역 방역 대응 미흡) 연초 발생한 구제역을 계기로 방역 체계를 대폭 강화하였으나, 경북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발생

○ 상반기 발생한 구제역(1월, 4월)을 비교적 조기에 종식하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로부터 구제역 청정지위 회복(9.27일)

* (한국) 4.8일 발생, 6.19일 종식(72일) / 일본 4.9일 발생, 7.27일 종식(109일)

- 가축질병 발생요인을 최소화하고, 발생시 신속한 초동대응체계 확립을 위해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방안 마련(7월)

○ 방역체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북 안동지역을 중심으로 구제역 추가 발생(11.28일)·확산

□ (농어촌 관련 부처간 연계·협력 미흡) 부처별 지원정책의 분산 추진으로 지자체의 효율적·체계적인 사업화에 한계

○ 향토산업 육성사업(농식품부), 지역연고산업 육성사업(지경부) 등 향토자원 산업화를 각각 지원하고 있어 연계·협력 미흡

○ 지자체의 사업계획 수립·추진시 사업간 통합·연계 고려 부족

Ⅱ. 2011년 여건 전망 및 중점 추진방향

1. 여건 전망

□ FTA 추진, DDA 협상 재개 등 시장 개방 가속화

○ 한·EU FTA 발효('11.7), 한·미 FTA 비준 준비, 한·중 FTA 협상 개시 등 양자간 협상 진척 및 확대 전망

○ 최근 담보 상태인 DDA 협상도 본격적으로 재개될 움직임

* 2011년을 DDA 타결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지 표명(G-20 정상회의)

□ '10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국제곡물가격 상승 추세가 내년에 계속 이어지는 등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강세 예상

* 국제 밀가격 : ('10.1) 192\$/톤 → ('10.6) 176 → ('10.9) 272 → ('10.12) 307

* 세계곡물 기말재고율(USDA) : ('09) 20.9% → ('10p) 22.4% → ('11p) 19.3

○ 글로벌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각국의 보호주의적 정책 강화, 자원확보 경쟁 및 자원무기화 가능성 증대

□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녹색성장 및 생명자원의 중요성 증대

* OECD 보고서('09) : 2030년 IT 혁명을 넘어서는 바이오경제시대 도래 전망

* 중국은 생물종자 분야를 7대 친환경 미래신흥전략사업으로 장려('10)

□ 내년 각국의 재정건전화 경향, 세계경제 성장속도 둔화 등은 우리 농림수산식품 분야에도 새로운 대응 과제 부여

* 세계경제('10 → '11) : 4.6% → 4.3(IMF) / 4.4 → 3.6(SERI) / 3.8 → 2.7(LGERI)

○ 농식품분야 보조금 개편 등을 통한 효율적 자원 배분 강화

○ 민간부문 투자 촉진, R&D 확충 등을 통한 식품·외식분야 중심의 내수·수출 성장전략 마련

〈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 ① 국민들의 농업·농촌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지지도는 매우 높음
 - 도시민의 88.4%가 국가경제에서 앞으로도 농업이 중요하다고 인식
- 반면, 농업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낮은 상황(관심층 30.7%)
 - 가장 관심 있는 분야로 '안전한 식품 공급'과 '농산물 가격'을
 - '안전한 식품 공급', '식량의 안정적 공급', '자연환경 보전'을 중요한 농업·농촌의 역할로 인식
 - ② 2010년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
 - 한식세계화 등 식품산업 육성, 농식품 수출확대를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 쌀 재고문제, 농산물 수급, 협동조합 개혁 분야는 낮게 평가
 - ③ 농가경영 주된 위협요인은 생산비 증가(28.6%)와 인력부족(18.4%)
 - ④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에 대하여도 높은 평가
 - 수입산 대비 가격,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우(78.9%), 쌀(75.8), 돼지고기(68.0) 등의 경쟁력을 높게 평가
 - 식품구매시 채소는 안전성, 육류·곡물은 원산지를 중시
 - ⑤ 농업인의 직업 및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향상되고 있으나, 노후준비는 매우 부족한 상황
 - 직업 만족도 34.0%('09. 32.1), 주거 만족도 : 36.8%('09. 30.0)
 - 노후준비 : 준비 없음(12.0%), 노후대책 충분(7.7%)
- ※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도시민·농업인·전문가 2,380명 설문조사(10.10~11월)

2. 중점 추진방향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위험관리 강화

- ▶ 가축질병 대응 강화
- ▶ 농수산물 가격불안 해소
- ▶ 쌀 수급안정 및 가공산업 발전
- ▶ 재해 등 위험관리 강화
- ▶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
- ▶ 농식품 안전·품질관리 강화

성장동력 확충

- ▶ 농식품 R&D 개편
- ▶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 ▶ 해외 농림어업 개발
- ▶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 ▶ 종자·생명산업 육성
- ▶ FTA / DDA 협상 대응

농어촌 지역 활성화

<농어촌 활력 증진·복지 지원>

- ▶ 인력육성 및 귀농·귀촌 활성화
- ▶ 농어촌 사회 안정
- ▶ 농어가 경영안정장치 확충
- ▶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보조금 등 지원체계 개편>

- ▶ 보조금 지원방식 개편
- ▶ 민간투자 활성화
- ▶ 협동조합 선진화
- ▶ 조직역량 강화

Ⅲ. 주요 추진과제

1. 농어업 분야 위험관리 강화

1 가축질병 대응 강화

◇ 축산농가 책임의식 고취, 출입국 관리 강화, 상시 예찰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

- 질병발생시 초동 대응태세 확립, 질병 확산 차단

□ 농가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차단방역, 환경관리 등 기본 소양을 갖춘 자만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제 도입(축산법 개정 추진 중)
 - 소규모 농가까지 일정시간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
-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고용 신고, 교육 및 소독 의무화, 미 이행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추진)
 - 최초 채용 및 자국 방문후 입국시 소독 및 격리기간(5일) 준수 등
- 최초 발생 확인 농장은 매몰 보상금 삭감, 생계안정비와 가축 재입식자금 지원을 제외하는 방안 검토 추진

□ 축산농장 등 가축 사육 시설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 및 관계자에 대한 방역의무 강화

-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탑승자 포함)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과 기록관리 의무화 확대
 - * 소독 및 기록관리 의무대상 : (현행)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 운반자 → (확대) 수의사, 인공수정사, 컨설턴트 등 모든 출입자 및 차량
- 질병 전파 방지, 발생시 신속한 이력추적 등을 위해 가축거래 상인 신고제 도입, 미신고 상인 가축 거래 금지(축산법 개정)

□ 축산 관계자 해외여행 관리 및 국경 검역·검사 강화 추진

- 축산농가가 가축질병 발생국을 경유하거나 당해 국가에서 입국시 신고 및 소독 의무화(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추진 중)
 - 해외 여행 후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소독 등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 발생국 여행 후 질병 발생 시 가축사육시설 폐쇄명령, 보상금 삭감
- 법 개정 전까지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와 세관의 협조를 받아 소독필증을 받아야만 공항만을 나갈 수 있도록 조치
 - 공항만에 홍보요원을 배치하여 수화물도 소독하도록 유도

□ 구제역 및 AI 발생 대비, 종축 분산관리 체계 구축

- 축산관련 연구기관(축산과학원, 축산기술센터) 부지 등을 활용하여 종축 분산사업소 설치·운영
 - 한우 : 서산, 무주 → 12년까지 2개소(경북, 대관령) 추가 조성
 - 젓소 : 경기 고양 → 11년까지 2개소(영양, 천안) 추가 조성
 - 돼지·닭·오리 : 지자체 축산기술센터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종축 상호 교환 및 질병발생시 분산체계 구축(축산과학원)

□ 악성 가축질병 발생시 초기 대응 체계 강화

- 지자체 가축방역관의 검사능력 제고를 위해 구제역 등 주요 가축 질병 임상관찰 및 검사요령 교육 강화
 - * 지자체 위생시험소에 항원 진단키트 공급 추진
- 초기 신속한 매몰처리를 위해 악성가축 발생시 초동대응팀과 동시에 초기매몰처리팀을 현장에 투입

2 농수산물 가격불안 해소

가 수급불안 품목의 가격 안정

◇ 주요 품목에 대한 단계별 수급안정 시스템 구축으로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여 물가 안정화 추진

- 농업관측, 계약재배 등 사전적 수급안정 시스템을 중점 보완
 - 기상변화 등에 따른 시나리오별 시세예측모형을 개발·활용하여 농업관측의 실효성 제고
 - 추진체계 강화(전담팀 신설) 및 정보제공 대상을 유통업체로 확대
 - 기상급변기(7~10월) 관측속보 수시발행 등 관측정보 활용도 제고
 - 계약방식 개선, 농협중앙회 참여 확대 등 계약재배 내실화
 - 계약물량 : (현행) 생산량의 10% 수준 → ('11년) 15%(무·배추 20%) → ('15년) 50% 수준
 - 계약방식 : 일손 부족으로 농가가 선호하는 포전매매 방식도 병행
 - 관측결과 공급부족 전망시 추가계약 등 계약재배 규모 확대
 - * (경계) 국내 계약 + 농가자율 확대 / (위기) 국내·해외계약 + 농가자율 확대
 - 소규모 조합의 판매사업 대행을 통한 판로 확보, 채소전문작업단 구성을 통한 포전매매 방식 도입 등 농협중앙회의 역할 확대
 - 주요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 기능 제고를 위한 비축규모 확대
 - 국내산 양념류(고추, 마늘)와 수산물 비축 확대
 - * 양념류 비축율 : ('10) 수요량의 3%(수입산) → ('11) 수요량의 5%(국내산 포함)
 - * 수산물 비축율 : ('10) 0.5% → ('11) 1%

□ 가격 급등락 시 긴급 수급조정을 통해 가격 변동폭 완화

- 도매시장 경매가격 급등락을 완화하기 위한 가격조정제도 도입 등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추진
 - 대상 품목을 한정하되, 제도 도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완방안 강구
 - * 농안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상반기)
- 위기경보 시 시장접근물량 증량 및 할당관세 적용 등의 행정절차 간소화
 - * (현행) 협의 및 개정절차 시일 2~3개월 → (개선) 15일 이내
- 가격 폭락시 계약재배 농가에 대한 최저보장가격 기준 현실화
 - 저장성이 낮은 품목의 최저가격을 현실화된 경영비 수준으로 인상하되, 무임승차 방지를 위해 계약재배 참여농가에 한해 적용

□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 가격수준별 위기대응 체계 구축

- 위기 정도에 따른 단계별 매뉴얼을 마련, 매뉴얼에 기초하여 즉각 대응조치가 실행될 수 있는 체계 정비
- 품목별 가격안정대를 설정, 가격 수준에 따라 대응경보 발령
 - 평균가격 대비 실제가격의 변동율을 기준으로 가격안정대 설정
 - 가격의 상승·하락 폭에 따라 주의·경계·위기 단계로 구분

<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예시) >

	상승시	하락시
주의단계	수입 가능성 검토, 규격외품 출하 등	출하자 자율조절, 작목전환 등
경계단계	계약물량 공급확대 등	계약물량 가공(저장)용 공급 등
위기단계	해외물량 도입, 가격조정명령 등	유통명령, 산지 저장·폐기 등

- 배추·무에 우선 적용('11년), 주요 서민물가 품목으로 확대('12년)

나 유통방식 다양화 및 유통 효율화

◇ 유통방식의 다양화·선진화로 불합리한 유통비용요인을 제거하여 유통의 효율화 추진

< 유통비용 비교 사례:고랭지배추('09.8) >

◆ 도매시장 경유출하 : 1,950원(포기당) / 농협계통 출하 : 1,310 (33% 절감)

□ 유통방식 다양화 및 물류 효율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B2B 활성화를 통해 대형유통업체 및 외식업체 등의 직거래 확대 유도

○ 수요자별 요구품목·물량을 사전 예약, 확인된 수요량에 기초하여 공급자와 연결하는 생협 방식의 직거래 확산

* 현행 사이버거래소 회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

○ 농업인이 주체가 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중심이 되는 Local-food 개념의 직거래장터 확충

* 사례) 원주시 농업인 새벽시장 : '09년 개장, 연간 매출액 75억원, 방문객 22만명

○ 도매시장 하역체계 개선 및 IT와 연계한 운송물류 시스템 도입을 통한 물류비용 절감

- 우선 하역 효율화 효과가 높은 배추품목에 대해 하차 경매제 시범사업 추진('11년, 가락시장)

□ 산지 조직화·규모화를 촉진하여 농가 경영안정화 달성

- 조합간 품목연합을 통해서 주산지 농협들에게 top-down 방식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농가의 조직화 및 조합간 통합 유도
 - 별도로 운영되는 APC·원예브랜드육성·물류비 지원 등을 조합 간 품목연합 중심으로 지원
 - * 정부 자금 지원 3년 후 공동계산매출액 10억 이상 증가 못할 시 지원 중단
- 농가의 조직화 및 경영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 조직력 강화, 상품의 균일 표준화, 체계적 마케팅 등 교육('11년 농협, aT 교육원에 과정 개설)

□ 거래방식의 선진화로 가격변동폭 완화와 투명성 확보

- 도매시장 거래방식을 농가의 선택에 따라 경매, 정가·수의 매매 방식으로 다양화
- 유통주체간 대금정산조직을 신설하여 거래 투명성 확보
- 도매시장법인 등의 경쟁촉진·규모화를 위해 평가제 강화

□ 수산물 산지유통 효율화를 위한 다기능 위판장 도입 및 시설 개선

- 3단계에서 6단계까지 기능을 겸비한 다기능 위판장 도입 준비
 - * (현행) 양륙 선별 경매(3단계) → (개선) 가공 포장 유통 기능 겸비(6단계)
- 시설현대화를 통해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 도모
 - * 노후화된 위판장 105개소 시설 개선('11~'16년)

다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

◇ 농어업인, 유통 종사자,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유통질서속의 거래제도 선진화 달성

< 대형유통업체 부당요구 사례 >

- ◆ 쌈채류 납품 산지조직에 취급품목 이외의 김장용 배추 저가 납품 강요
- ◆ 축산품 납품 산지조직에 창립행사시 원가미만 납품 강요

□ **공정거래 관행 유도를 위한 제도 및 관련법령 정비**

- '농수산물 거래에 관한 고시(할인행사 제한, 판매대금 지급기한 등)'
신설 검토(공정위 협의)
- 산지유통종합평가 과정에서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내역(할인 행사,
납품가격) 제출 의무화
- aT에 설치되어 있는 「공정거래지원센터」 기능 강화
-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하여 현장조사를 정례화(분기별 1회)

□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실효적 수단 강화**

- 생산자 교육, 불공정한 거래관행 대응 매뉴얼 배포 등을 통해
산지의 능동적인 대응역량 강화
- 소비자단체를 통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와
사회적 책임을 유도
- 소비지 업체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근절을 위해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생산자단체간 '농수산물 공정거래 협의체' 구성 추진

3 쌀 수급안정 및 가공산업 발전

가 쌀산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시행

◇ 2015년까지 벼 재배면적 축소,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소비 확대, 유통 효율화 등을 통해 쌀 수급균형 달성

○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 마련, '11년부터 본격 추진

□ 쌀 수요에 맞춰 쌀 생산량을 줄일 수 있도록 밥쌀용 벼 재배 면적을 '15년까지 70만ha 수준까지 축소

* 벼 재배면적(밥쌀/전체)(천ha) : ('10) 856 / 892 → ('11) 808 / 844

○ '13년까지 4만ha의 논에 콩, 옥수수, 조사료 등을 재배하여 매년 20만톤씩 쌀 공급량을 감축

* 타 작물 재배(40천ha) : 조사료 10천ha, 콩 8, 채소등 17, 다년생작물 5

○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에도 벼 이외에 타작물 재배

* 매입비축 농지면적(천ha) : ('10) 0.5 → ('11) 1.5(1,500억원) → ('15) 5.5

○ 조기관세화를 통해 '15년 이후 매년 6만톤의 수입쌀 감축

- 2012년 관세화를 위한 논의를 2011년에 마무리

* 쌀 MMA 물량(천톤) : ('11) 348 → ('12) 368 → ('13) 388 → ('14) 409

□ 현재 쌀생산량의 6% 수준인 가공용 소비를 '15년에 일본 수준인 15%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쌀 가공식품산업 적극 육성

○ 이명박정부 이후 쌀가공 활성화를 통한 소비촉진기반은 마련된 상태

구 분	이전('07년)	→	이후('10년)
쌀 가공업체수(개소)	556	⇒	761
가공용 쌀 소비량(만톤)	18		30
쌀가공산업 자금지원(억원)	0		1,600

○ '15년까지 쌀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5대 분야 55개 과제 R&D 지원

5대 분야	기능성·가공용 품종 개발	쌀 제품 가공기술	가공기기 개발	쌀·부산물 이용 신소재 개발	쌀 가공제품 품질제고 기술
핵심 기술	당뇨예방, 성장 촉진, 양조용, 가루용 등(12종)	쌀가루가공, 면류·장류 가공 등(15종)	간편식 조리기 등(8종)	용기, 쌀 단백질 등 제품·기능성 소재(8종)	유통기한 연장, 품질유지 등(12종)

○ 쌀 가공업체의 안정적 원료공급체계 구축

- (1단계) 가공업체에 정부 쌀을 3년간 할인 공급('11년 38만톤)
- (2단계) 가공용 쌀 전용재배단지 조성 : ('11) 1천ha → ('15) 30천ha

○ '15년까지 쌀 수출을 10만톤 이상으로 확대

- (1단계) 정부 쌀 할인공급(가공품 위주) → (2단계) 초다수성 쌀(10톤/ha) 전용재배단지 조성, 생산단가를 낮춰 쌀도 해외시장 공략
- * 쌀 수출량(가공품 포함) : ('09) 4천톤 → ('11) 5만톤 이상 → ('15) 10만톤 이상

○ 쌀가공산업진흥법을 제정, R&D·자금·감세 등 지원근거 마련

- * 공공부문 쌀 제품 사용권장 및 대중화 추진

□ 쌀 대표가격 형성기능 강화를 위한 사이버상 도매거래 활성화

- RPC 등 산지업체 : 벼 매입자금 배정시 산지거래량 기준 외에 사이버 거래소 출하물량을 감안하여 차등화
- 소비지업체 : 거래수수료(거래금액의 0.3%) 면제 및 물류비 지원

□ 산지유통주체 육성으로 시장교섭력 제고

- 농협중앙회 주도, 또는 광역단위 쌀 전문조합 설립 등을 통해 산지 쌀을 제값 받고 팔아줄 수 있는 기반 구축
- RPC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규모별로 유형화하고 벼 매입 자금 등을 차등지원, 진입·퇴출기준도 강화
- 쌀 자조금을 조성(산지유통업체·정부 공동), 자율 수급조절 기능 강화

나 식량자급률 제고

◇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재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자급률 향상 대책 마련·추진

□ 국제곡물가격 파동, 식품 소비추세 변화 등 정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07년에 설정한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추진

* '07년 설정 '15년 자급률 목표치 : 주식용 식량 54.0%, 곡물 25.0%, 칼로리 47%

○ 전문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농업인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식량자급률 목표치 상향 조정 및 '20년 목표치 설정

* 자급률 재설정 및 새로운 목표치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10.5~12월)

○ 쌀 위주의 곡물자급률 개념 중심에서 종합적인 식품자급률 지표로서 칼로리 자급률 개념 중심으로 전환

* 곡물 이외 채소류, 과일류, 육류, 수산물 등을 포함한 종합 개념

□ 자급률이 낮은 밭작물과 사료작물 중심으로 국내생산 확대 지원 등 자급률 제고대책 중점 추진

○ 밀, 콩 등 중장기 밭작물 산업육성 방안 마련(3월)

- 주산단지, 경영체 중심으로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생산기반 확대

○ 사료자급률 제고를 위해 청보리 등 조사료 재배 확대

- 조사료 재배면적 : ('10) 245천ha → ('11) 316 → ('12) 370

- 겨울철 유휴농지 활용 및 논에 벼 대신 사료작물 재배 유도

* 사일리지 제조비 3만원/톤, 30ha 이상 집단화시 수확 기계·장비구입비 1.5억원 지원 등

다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 농작업 대행 확대, 사업간 통합모델 발굴 등 임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영농효율화 도모

□ 발농사용 농기계 임대사업(정부) 활성화로 기계화율 향상

○ 파종 등 기계화가 낮은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기계화율 제고

* 농작업 기계화율 : 경운·정지 96%, 파종·이식 11, 비닐피복 22, 밭 수확 8

○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25개(125억원) 추가 설치('10까지 150개소 → '11까지 175개소)

□ 일손부족 해소 및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벼농사용 농기계 은행사업(농협)의 농작업 대행 확대 및 일관작업 체계 구축

○ 농작업 대행이 가능한 책임운영자(농가)와 직영조합(농협) 확대

* 책임운영자 / 직영조합 : ('10) 7천명 / 19개 조합 → ('11) 10천명 / 70개 조합

- 농작업 대행면적을 대폭 확대, 영세·고령농가의 영농부담 경감

* 농작업 대행 : ('10) 77천ha(벼 재배면적의 8%) → ('11) 140천ha(15%)

○ 사업 대상 농작업 범위확대 일관작업 체계를 구축, 생산비 절감 및 수익모델 창출

* ('10) 경운, 이앙, 수확 중심 → ('11 이후) 공동육묘, 헬기방제 등 추가, 일관체계 구축

□ 발농사용 임대사업과 벼농사용 은행사업의 효율성과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양사업간 통합모델 발굴·보급 추진

○ 지자체에서 부속작업기를 지역농협(직영조합)에 장기 임대하는 방식 도입(1월) 등 농작업 대행 활성화 기반 마련

4 재해 등 기타 위험관리 강화

가 농림어업 재해관리 시스템 개선

◇ 이상기후에 대응하여 농어업재해 범위를 확대하고, 재해 지원을 강화하여 농어가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

□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농어업재해 제도개선 및 지원강화

- 신종재해 출현 대응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추진(6월)
 - 폭염 및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농업재해 범위에 신규로 포함하고, 최근('10.1~4월) 발생한 일조량 부족 피해를 명문화
- 농어업 재해복구지원단가 현실화 및 농축산영농자금 지원
 - 농작물 재해복구 산정기준단가를 순차적으로 현실화 추진
 - * 단가현실화 계획 : ('10) 65% → ('11) 70 → ('12) 75 → ('13) 80
 - 대규모 피해시 특별융자 및 既대출 융자금 상환연기 등 지원

□ 재해에 강한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업시설 개발·보급 추진

- 지역 및 작목 특성에 맞는 원예특작 규격시설 제정·보급
- 대설, 강풍 등에 대비한 내재해형 시설보급 지원 확대
 - * 내재해형 원예·축사시설 지원('10 : 1,244억원 → '11 : 1,685억원)

□ 재난정보 종합시스템 구축 및 재해관리 체계 정비

- 풍수해, 어선, 산불, 가축질병 등 재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대응할 수 있는 종합재난정보시스템 구축('11~'13)
- 분산관리되는 재해보험과 재해복구 정책의 통합관리 방안 마련

나 재해예방 기반시설 확충

◇ 극한 홍수 및 가뭄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농어업기반시설 정비

□ 저수지, 양·배수장 등 수리시설의 안전성 제고

○ 대형 저수지(저수량 500만톤 이상) 물넘이 보강 우선 추진

* '10년 까지 12개소 완료, '11년 시행 16개소, '12년 이후 7개소(총 35개소)

○ 홍수배제 능력이 부족한 저수지(637개소) 및 양·배수장(140개소) 등에 대해 '17년까지 기능보강 추진('11 : 400지구 시행)

* 전국 수리시설 69천 개소 중 39천 개소(56%)가 30년 이상 경과

□ 해수면 상승 등에 대비, 배수갑문·방파제 등 주요시설 구조 개선

○ 영산강·아산호 등 배수갑문 확장으로 홍수배제 능력 제고

* 영산강('09~'12), 아산호('08~'13), 삽교호('11년 예비타당성조사)

* 삽교호의 경우 홍수량이 '79년 설치 당시보다 31% 증가(초당 5,460m³→7,145)

○ 상향조정된 설계파고를 적용, 국가어항 방파제 보강·관리 강화

* '11년 : 보강계획수립(37개 항), 정기점검(110개 항), 정밀안전점검(10개 항)

○ 기존 저수지 뚝높이기를 통해 재해예방 및 지역용수 공급(2.8억톤)

* 4대강 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효과 제고(113개소 추진중)

□ 체계적 물 개발·관리를 위한 농어촌용수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12월)

○ 저수지, 양배수장 등 시설 및 수량·수위·수질 정보 등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가뭄·홍수 등 재해발생시 신속 대응

○ 지역별 물 수급상황 분석을 통한 합리적 농어촌용수 개발·관리

다 어선 안전사고 예방

◇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구조체계 구축

○ 어선사고 건수 : ('10) 480건 → ('14) 240건(50% 저감)

□ 노후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기준 설정 및 강화

○ 노후어선에 대해서는 선체 두께 계측 등 선령별 안전검사 기준 강화

* 21년 이상 노후어선 비율('09) : 척수 기준 12%, 톤수 기준 47%

○ 주요 고장부위인 기관의 검사 및 전기설비의 절연성능 시험 강화

* (가칭) 노후어선의 안전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9월)

○ 어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업지도사무소 기능 강화 및 전문 안전교육 과정 신설 추진

□ 인명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속한 구조체계 구축

○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자동위치발신장치 설치범위 확대(어선법 개정)

* (현행) 길이 45m 이상 어선과 13인 이상 승선 낚시 어선 → (개선) 전 어선

○ 사고 발생시 어선원의 생존을 제고를 위해 구명조끼 및 구명뗏목 보급 확대

□ 선체불량으로 인한 사고 발생 방지를 위해 노후어선 대체 및 기관·장비 현대화

○ 노후화된 어선을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어선으로 대체 지원 추진

○ 노후 원양어선 현대화 확대 지원('10 : 164억원 → '11 : 297)

5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

가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생산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품종·기술개발 등 적응 역량 확충

-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 선제 대응을 위해 예측·평가 능력 강화
 - 기상이변에 따른 피해최소화를 위해 농업기상정보 정밀도 향상
 - 웹기반 지대별 농업기상정보 생산 및 제공 체계 개선
 - * 농업기상정보 : ('10) 월 2회, 문서서비스 → ('11) 월 3회, 웹서비스
 -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품질 영향평가 실시 및 예측모형 개발
 - 영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작물별 대응방안 마련
 - * 작물 영향평가 : ('10~'11) 4작목(벼, 마늘, 감자, 참다래)
 - 벼, 마늘 등 작물 및 어종별 생산예측 모형 개발
 - * 작물별 : ('11) 2종 → ('15) 3 / 어종별(누계) : ('11) 1개(멸치) → ('12) 2 → ('16) 5
- 기후변화에 적응이 가능한 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 아열대화 등에 적응 가능한 新작물 도입 및 대체 품종개발
 - 열대·아열대 작물 도입, 특성 검정 및 참다래 국산품종 보급 확대
 - * ('10) 망고, 패션프루트, 오크라 등 15종 → ('11) 23 → ('12) 30종 이상(누계)
 - * 국산품종(참다래) 보급면적 : ('10) 90ha → ('11) 150 → ('12) 200 이상
 - 상품성 향상을 위한 고온 적응성 품종 및 내재해성 품종 개발
 - * ('10) 5과종 7품종 → ('11) 5과종 8품종(고온기 착색양호사과 등)(누계)

○ 작물재배지 복상 등 재배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재배기술 개발

- 작물 주산단지 변동 모니터링 및 지도 작성, 작물별 재배적지 선정, 최적 재배관리 지침서 발간 및 보급 등 추진

* 모니터링 및 지도작성 : ('10) 4작목(사과, 배, 포도, 복숭아) → ('11) 2(감, 감귤)

* 작물별 재배적지 선정 및 재배관리 지침서 발간('11~'16) : 사과 등 7작목

□ 유해생물 발생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기대응체계 구축

○ 병해충 저항성 품종 개발 및 외래병해충 감시시스템 구축

* 품종개발('11) : 7품종(벼줄무늬잎마름병, 밀 붉은곰팡이병 저항성 등)

* 외래병해충 예측시스템 : ('11) 지중해과실파리 등 5종 → ('12) 3 → ('13) 3

○ 해파리 등 유해생물에 대한 국제 공조 및 피해 경감 기술개발

- 한·중·일 국제공조를 통해 중국 측 해역에서 우리나라 연안으로 유입되는 해파리의 발생정보 공유 및 사전차단 방안 강구

* 한·중·일 해파리 국제워크숍 개최(10월 중)

- 부직포 도포 등을 통한 해파리 구제기술개발 및 불가사리 제거 기구 개발·보급 등 추진

□ 기후변화의 체계적 대응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 농림수산식품분야 기후변화 대응 총괄 조정기능 강화

- 전담조직 확대·강화, 기후변화정책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기관간 정책 연계성 강화 및 새로운 사업 발굴

○ 농어민, 지자체 등의 인식제고를 통해 주체별 대응력 강화

-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자체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포지엄 등 개최

나 탄소감축 역량 강화

◇ 농림수산물식품분야 온실가스 관리 인프라 구축으로 탄소시장 설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상쇄사업 본격 준비

- 종합적 정보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통계시스템 고도화 추진
 - 기존의 농림수산물식품분야 온실가스 배출통계 산정시스템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체계에 따라 재정비(6월)
 - 감축목표 설정·관리 등 온실가스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통계 DB 구축('11~'13년)
- 국가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 '11년 목표관리업체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목표 설정(9월)
 - * 관리업체 지정(6월), 목표설정협의체 구성(7월)·운영, 감축잠재량 평가·감축방안 등 농식품분야 목표설정 방안 연구(~8월)
 - 목표관리대상 예비업체 등에 컨설팅, 교육 등 지원('11 : 2.3억원)
-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탄소배출권 거래제 등에 대비, 농림수산물식품분야 상쇄(offset)사업 활성화
 - 농림수산물식품분야 상쇄프로그램 개발, 검·인증체계 설계 등을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상쇄시범사업 설계(~12월)
 -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이 산림부문 활동을 통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운영」 활성화
 - 조림에서 도시숲 조성 등으로 사업유형 확대, 참여기업을 온실가스 多배출 기업으로 다변화하는 등 사업활성화 도모

다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확대

◇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12년까지
농어업 에너지 사용량 10%(2,490억원) 절감

□ 농어업 분야 에너지 절감 시설 보급 확대 및 합리적 이용 추진

○ 농업용 온실 대상 다겹 보온커텐 등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확대

* 보급 면적(누계) : ('10) 6,004ha → ('11) 7,154 → ('12) 8,264

○ 어선 대상 LED 집어등 설치 및 저효율 노후 기관 교체

* LED 집어등 설치 : ('10) 133척 → ('11) 217 → ('12) 217

* 노후기관 교체 : ('10) 27천 마력 → ('11) 35천 → ('12) 35천

○ 면세유 공급 차등화 등 합리적 에너지 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 에너지 절감시설 지원대상에 시간계측기를 포함하고, 절감시설
설치 여부에 따라 농업용 면세유 공급 차등지원

- 에너지 절감시설(다겹 보온커텐)의 부실시공 방지방안 마련·시행(1월)

* 농진청 개발 특허제품 또는 동등한 수준의 시설을 설치토록 권장

□ 온실가스 감축 및 유류사용 대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본격 보급

○ 지열 냉·난방시설 지원 대상을 축·수산분야까지 확대(1월)

○ 목재펠릿 수요창출 및 공급능력 확대로 산업화 기반 마련

- 공공시설, 주민편의시설, 산업체 등으로 목재펠릿 수요 다변화

* '11년 말까지 연간 22만톤 생산능력 확보 및 농산어촌 주택보일러 11천대 보급

○ 해양투기 금지('12년)에 대비,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확대

* ('10) 3개소 → ('11까지) 6개소 → ('13까지) 15개소

6 농식품 안전·품질관리 강화

가 친환경 농업 육성

- ◇ 1차 산업(생산)의 한계를 벗어나 가공·유통 등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통해 친환경농업의 새로운 도약 추진
 -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는 환경 조성, 소비 촉진 유도

□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기반 확대로 저탄소 안전농산물 생산

- 시군단위 친환경광역단지(600ha이상, 신규 7개소, 누계 32) 및 마을단위 친환경농업지구(10ha, 신규 16, 누계 1,036) 지정 확대
-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및 녹비작물종자 공급 확대를 통해 화학비료 사용량 절감 및 흙 살리기 운동 전개
 -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부하, 토양·수질 변화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환경자원 관리시스템 을 구축·운영(12월)

□ 고부가가치 친환경(유기)농산물 가공산업의 기반 확충

-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제품 다양화 및 품질 관리 등을 위한 맞춤형 가공시설 설치('11 : 10개소)
- 산·학·연·관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가공기술 및 기술상용화 등 가공식품의 사업화 모델 개발 등 지원

* 우수경영체와 민간투자자 연계, 간담회 및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및 전문유통업체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확대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매취자금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생산자단체 → (개선) 생협 포함 식품·유통·외식업체까지 확대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 확대를 위해 농협(산지의 거점 조직화)과 생협(소비자의 조직화)의 연계 체제 구축

* 농협의 도농교류 활동과 생협의 소비자 교육·홍보 활동 제휴 등 추진

* 생협 : 소비자와 생산자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한 직거래 활동 전개, 안전에 대한 소비자 요구 반영 및 가격 안정 도모(조합원수 : 50만명, 친환경 매출액의 약 7%)

□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는 환경 조성

○ 친환경농식품 가격 정보, 인증 정보, 국내외 수급 현황 등을 소비자에게 통합 제공하는 친환경 종합정보 DB 구축(11월)

○ 재포장 유통업체 등에 대한 의무인증제를 도입하고, 인증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제화된 심사매뉴얼 제정·운영(9월)

* CCP(Critical Control Point) 심사매뉴얼 : 인증의 적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항목 및 취약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국제적 심사 기법

□ 친환경·동물복지형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접직불제 대상 확대

* 축종 확대 : 4종(한·육우, 젓소, 돼지, 닭) → 5종(오리 추가)

○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을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개정안 국회 제출, 3월)

* 산란계용 인증기준을 마련(6월)하여 시범사업 우선 추진(7월)

나 학교·지역사회를 통한 녹색식생활 확산

- ◇ 민간 주도의 식생활 운동 본격 확산 및 건강한 식문화 정착
 - 미래세대의 건강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학교급식의 우수 식재료 공급망 구축과 연계, 학교단위 교육에 집중

【녹색식생활 교육 전개】

- 교육기관·체험공간 지정,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확충
 -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식생활 교육기관 및 농어촌 체험기회 제공을 위한 우수 체험공간 지정 확대
 - 교육·체험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검토
 - 초·중·고 교사, 영양(교)사 등을 교육 전문인력으로 양성
 - * 초·중·고 교사(식생활 교육기관 직무연수), 영양(교)사(식생활 교육기관, 전국 급식 학교담당·교사 교육), 예비교사(교육대학교 대상 녹색식생활 교육 사업)
 - 지자체 단위로 지역 식생활교육 위원회를 구성, '지역 식생활 교육기본계획 수립' 및 조례 제정 유도
 - * 12개 시·도 기본계획 수립 중(3개 시·도 완료), 7개 시·도 조례 제정 추진 중
- 환경·건강·배려를 고려하는 다각적인 녹색 식생활 교육 실시
 - 가정식생활수첩 보급(100만부), 공익광고 제작, 학술행사 등 지원
 - 초·중·고등학생 대상 연구학교·방과후 교실·농어촌 체험 등 지원
 - 교육 전문인력, 교육교재, 커리큘럼, 교육·체험비용 등 지원
 - * 연구학교(10개), 방과후 교실(70개), 농어촌 체험(20,000명)

-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등을 통한 민간 주도의 운동 확산
 -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 민간 단체·업체의 푸드마일리지 정보 제공 유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등 지속 전개

【학교급식 종합지원체계 구축】

- 우수 농수산물의 학교급식 공급확대 및 모범사례 확산을 위해 관련 정부지원 사업을 일괄 지원하는 시범사업(5개소) 추진
 - 우수 농수산물 계약재배·공동구매 등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이 구축된 모범 지자체를 시범사업자로 선정(1월)
 - 직거래 매취, 시설 개·보수, 저온유통 등 5개 분야 관련 사업을 시범지역에 일괄 지원

□ 학교급식 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마련(6월)

- 시범사업 시행주체(지자체·교육청·생산자단체 등), 농식품부, 교과부 등이 참여하는 식재료 공급망 개선 협의체를 구성(2월)
- 중장기적으로 현행 학교 단위 수급체계를 인접 시·군의 학교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 거점 체계로 개편 추진
 - 현행 유통·물류시설(APC·RPC·LPC,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지역 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최대한 활용

□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우수 농수산물 직거래(계약재배 등) 및 공동구매 활성화 추진

- 효율적인 계약재배 및 공동구매를 위해 지역산 제철 농수산물을 활용한 표준식단체 보급(교과부·교육청 협조)

식생활 교육 해외 선진 사례

- **【일본】 식육기본법**(‘05.7월 시행) 및 **식육추진기본계획**(‘06.3월 수립)에 의거, 민관 협력 하에 **범국민운동**으로 식생활 교육 전개
 - 식육추진회의(의장: 내각총리대신)에서 5년 단위로 「식육추진기본계획」 수립
 - 국가, 지자체, 식생활 교육 관련 각종 민간단체 및 자원봉사자 등이 연계하여 식생활 교육 추진운동 전개
 - * 식육월간(6월)·식육의 날(매월 19일) 지정, 어린이 비만예방 추진, 임산부·유아 영양지도, 농림어업 체험, 식품폐기물 재생 체험 등
- **【프랑스】 어린이들의 미각 형성 및 조리를 중심으로 하는 식생활 교육이 국민운동**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지원
 - 미각 주간(매년 10월 둘째주) 운영 및 요리미각예술 5개년 계획을 추진하여 미각 교육 실시
 - 농업·지역요리 체험을 위한 그린투어리즘·교육농장제도 활성화
- **【영국】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로컬푸드 운동과 연계한 식생활 교육 실시**
 - 모든 학교에서 로컬푸드를 이용한 요리 수업 의무화, 텃밭을 활용한 도시농업 확산, 농민직거래장터 활성화
- **【미국】 비만 예방을 위한 영양교육 및 체험을 통한 식생활 교육 실시**
 - ‘미국인을 위한 식생활지침’을 1980년부터 5년마다 보급
 - 학교에서 교실 농업 운동(Agriculture in Classroom) 및 팀 뉴트리션(Team Nutrition) 등 실시
- **【이태리】 슬로푸드 운동을 전개하고 다양한 미각체험·교육 실시**
 - 슬로푸드 운동을 통해 전통 식문화 보존 및 지역 우수 식재료 소비 촉진

다 | **농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 위험평가, 위험관리, 위험정보교류의 균형적인 발전을 통하여 과학적이고 소비자 지향적인 농식품 안전관리 추진

- 과학적인 안전관리의 기반이 되는 위험평가 기능 대폭 강화
 - 잔류허용치 (재)설정이 필요한 축산물·수산물의 유해물질을 선정하여 위험평가 추진(하반기)
 - * 대상 물질 : 중금속(납, 비소), 미생물(노로바이러스, 비브리오장염), 화학물질(비스페놀A) 등
 - 품목별로 분산된 위험평가를 표준화하고 전문성을 강화
 - 위험평가 표준화 고시 제정(8월), 연구기술 개발 확대 및 외부 전문 인력풀(30여명, 9월) 구성
 - * 위험평가(Risk Assessment) : 식품의 위해 가능성과 심각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과학적인 절차로서 소비자 신뢰확보에 필수적
- 위해요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위험관리 선진화 추진
 - 생산·유통단계의 사전예방적 위해관리 시스템 확충
 - 농작물용 고독성 농약 사용 및 축산 항생제 사료첨가 전면 중단(7, 11월)
 - * '10년 농작물용 고독성 농약(12종), 축산항생제(9종) 사용
 - HACCP 적용대상 확대(식용란) 및 사업장점검 강화, GAP 관리 시설 확충('10 : 542개소, 산지 유통시설 중 14.1% → '11 : 600, 16.2)
 - * 축·수산 HACCP 생산비중 확대(축산 생산량 70%→ 75, 177 → 204개 양식장)
 - 수산물 생산해역(60개소)을 청정·준청정·관리·금지로 구분하여 차등화된 위생관리 실시(정착성 수산동식물 생산해역 등급설정 기준 고시, 1월)

- 지자체에 수산물 안전 분석장비 지원 등 안전관리의 효율성 제고
 - * '11) 3개소, 6억원 지원 → '13까지) 12개소, 142억원 지원
- 오염우려 지역(산업단지, 폐광산 등)의 농지·용수 등 재배환경에 대한 오염실태 조사 및 안전관리 로드맵 설정 추진(6월)
- 안전성 검사는 취약분야 중심, 총 93천건(농산 72, 축산 12 수산 9)

○ 축·수산물에 대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 해외 문제 축산작업장 중심의 사후관리 강화(11개국 13회 이상)
- 수산물 위생약정체결 확대 및 등록공장 현지 위생 점검
 - * 위생약정 :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 뉴질랜드, 대만 등으로 확대

□ 농수산물식품검역검사청 신설에 따른 검역선진화 방안 수립·추진

- 효율적 조직 운영방안 수립 및 과학적 원리와 국제기준과 조화되는 검역제도 개선방안 마련(9월)

□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위험정보교류의 활성화 추진

- GMO, 방사선조사식품 등 신식품 관련 국제동향 전파
- 식품안전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위반내역 내용·공개절차 등을 통일하기 위하여 13개 관련법령 정비 작업 착수
 -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등
- 소비자단체와 협력 사업을 강화하여 소비자 교육, 어린이·청소년 대상 식품안전 체험 프로그램 등 운영
- 식품안전 이슈에 대한 공동대응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식약청, 지자체 등 관련 기관간 정기 협의회 개최

라 소비자 권리 강화

◇ 농식품의 특성과 품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핵심수단인
인증·표시제를 개선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선택권 강화

-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도록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인증체계를 정비하여 믿을 수 있는 인증 시스템 구축
 - 유기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일원화(12월)하고 농산·수산물로
분리된 3종(전통식품·식품명인·지리적 표시)을 우선 통합(8월)
 - * 통폐합이 필요한 유사인증제도는 관련기관 의견수렴 후 '13년까지 정비
 - 인증제별 다양한 로고 사용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줄이기
위해 국가 농식품 인증 통합로고 도입 추진(12월)
 - 인증업무를 민간으로 이관하고 정부는 인증기준 설정 등 제도
보완, 인증기관 지정, 민간 인증기관 관리·감독 기능에 집중
- 소비자 희망을 반영하여 수산물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 추진
 - 대중적 수산물(횃감용, 매운탕용 등)에 대한 의무적 음식점
원산지 표시 시행 추진(원산지법 시행령 개정, 12월)
 - * 소비자인식도 조사('10.6) : 음식점 원산지 표시 확대 찬성 77.1%
 - * 대상품목(안) : 참돔, 점농어, 지노래미, 뱀장어, 미꾸라지, 아귀, 흥어 등
-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하여 축산물 등급 표시방법 개선
 -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등급 표시 시 해당 식육의 등급종류를
모두 나열한 다음, 해당 등급에 '○'로 표시하도록 함(7월)
 - * 등급표시 : (현행) 등급 : 1 → (개선) 등급 : 1⁺⁺, 1⁺, ① 2, 3, 등

2. 성장동력 확충

1 농식품 R&D 개편

가 R&D 투자 확대 및 총괄 기획 기능 강화

◇ 방향성 있는 R&D 투자를 확대하고, R&D 총괄 조정·기획 기능을 강화하여 투자 효율성 제고

- R&D 투자규모를 대폭 확충(전년대비 11.2% 증가)하고 방향성 있는 R&D 투자로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토대 마련
 - 농정현안(쌀소비축진, 가축질병 등)에 대응하고 미래수요(기후변화, 종자 생명산업, 바이오매스, 한식세계화 등)를 대비
 - 국가기반 구축(유전자원확보, 식량안보 등)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 * ('10) 7,752억원(농식품부 2,377, 양청 5,375) → ('11) 8,623억원(2,797, 5,826)
- 다부처 대형 R&D사업 공동기획을 적극 추진하고 기획역량 강화를 위하여 “부·청 공동기획단” 구성
 - 다부처 공동 R&D기획에 적극 참여하여 외연 확대
 - * Golden Seed 프로젝트(부·청), 생명자원소재산업화-이어달리기(교과부·농진청), 바이오정보산업(국과위, 지경부·복지부), 지능형환경관리(국과위, 4개부처) 등
 - 농식품부 R&D 기획단을 부·청 공동기획단으로 확대 개편
- 농림수산식품분야 R&D 총괄·조정(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기능 강화를 위한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개정 추진
 - 부·청, 산하기관간의 역할 재정립 및 명확화를 위한 농림수산식품 R&D 추진체계 개편 추진
 - * 농식품부(총괄·기획), 농진청·산림청(사업 수행), 실용화재단·수산자원사업단(산업화)

나 R&D 실용화·산업화 촉진

◇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도 제고 및 우수기술의 실용·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제 구축

□ 기 개발된 기술의 실용·산업화를 위한 R&D자금 지원 강화

○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 확대

* ('10) 60억, 농림바이오 → ('11) 80억, 농림수산식품 분야로 수산·식품 포함

○ 우수기술보유 기업에 신용보증 및 저리 융자지원 도입(12년 시행)

□ 민간 R&D기반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제품생산 대행 조직을 육성하고 현장우수기술을 발굴·지원 추진

○ 작물 병리검정 등 전문성을 요하는 공통기반기술의 전문 R&D대행조직(CRO) 및 민간 위탁생산조직(CMO) 육성(10억원)

* CRO(연구) :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예) 네덜란드 Key Gene사 : 분자마커개발 등 대행

* CMO(생산) :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 민간의 우수기술을 발굴, 과학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현장에 보급하기 위한 ‘현장우수기술개발사업’ 도입(10억원)

□ 연구성과의 활용촉진을 기술거래 활성화 및 “성과관리종합 계획” 수립(상반기)

○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거래기관(실용화재단) 역량 강화

○ 부·청 통합성과관리체제 구축, 성과활용 중심 평가지표 개발

* 2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2011~201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및 농식품 R&D 성과의 효율적 관리·활용을 위한 연구용역(4월) 결과를 반영

2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가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

◇ 전통·발효·기능성 식품 등 전략품목 중심으로 세계화 역량을 제고하고,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 확대

【인프라 강화 및 제도 정비】

□ 국가식품클러스터(전북 익산) 조성 본격 추진

- 단지개발계획 수립('11, LH공사), 국가산업단지 지정·착공('12)
-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설립 및 3대 R&D센터(기능성평가·품질안전·식품패키징) 설계 등 기업유치·지원체계 구축
 - 국내외 식품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자체는 개발지역에 대한 주택, 교통, 교육인프라 등 정주기반 사전 준비
- 투자유치설명회, 투자에이전시(주한유럽상공회의소, Kotra 등) 등을 통해 해외 선도 식품기업(anchor)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 전개
 - * 네슬레, 다논 등 식품기업과 R&D공동연구사업 추진 등을 통해 유치동력 마련

□ 전략품목 개발을 위한 R&D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성장잠재력이 높고, 웰빙트렌드에 부합하는 전통·발효, 기능성 식품 등의 글로벌 상품화 기술개발 등에 집중
 - * 고부가식품 연구개발 지원 확대('10 : 183억 → '11 : 248)
 - 세계김치연구소를 통해 김치 등 발효기술 연구를 강화
 - * 연구소 시설은 '12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 추진(광주)

- 민간주도 식품인력 양성 기반 강화 및 고부가 전문인력 확충
 - 제조·가공 및 품질·위생관리, 외국인 종사인력의 적응훈련 등 현장 생산인력 교육을 위한 민간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추진
 - * 교육기관 지정 요건·절차·관리방안 마련(6월)
 - 웰빙·전통식품 등 고부가 핵심 기술분야 R&D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연계 기업애로기술 해결형 교육과정(석사급) 확대
 - * ('10) 5개 대학 → ('11) 10개 대학(5개소 신규선정)

□ 중소 식품기업 애로해결·경영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 구축

- 중소기업 경영상담·진단, 정부지원사업 정보제공, 현장기술 지도 등을 수행하는 식품산업진흥지원센터 시범 운영
 - 현재 운영중인 식품·외식기업상담센터(aT)의 기능을 통합, 대학·연구소·유관기관·전문가그룹의 네트워크 구축·활용
 - * 네트워크 사업모델 마련(6월), 시범 운영(1개소, 하반기), 본사업 추진('12)
- 식품외식종합자금을 신설, 식품기업·외식업체 등의 시설 현대화, 원료수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
 -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11년 700억원 지원
 - *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3~4%를 적용, 시설자금은 10년, 운영자금은 1~2년 융자

【전략분야 지원】

□ 김치·우리술·천일염 등 전통·발효식품을 글로벌 상품으로 육성

- 김치는 품질 표준화(맛 등급화) 및 맞춤형 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상품김치 소비 확대
 - 내·외국인 대상 김치 전시·체험행사 전개 및 김치요리 레시피 개발 보급

○ **술 품질인증제 시행(1월)**을 통해 우리 술의 품질 및 시설 수준의 현대화·고급화 촉진

- 술 품평회(9월) 및 햅쌀막걸리 출시(11월) 등 우수제품 발굴·홍보

○ **천일염은 염전시설 현대화 및 성분·효능 연구 확대를 통해** 게랑드 소금에 버금가는 세계 명품 소금으로 육성

- 염전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 염전의 표준모델을 개발·보급하고, 염전원부를 작성, 염전관리시스템을 구축

* 영세한 염 생산자를 대상으로 염전시설 개선 등의 정책자금 지원(100억원) 및 염전 컨테스트를 개최하여 우수 염전 사례 확산

- 소금 품질인증제 도입을 통해 품질 고급화('11년 시범사업 추진)

□ **고부가 식품 신 시장 창출 및 연관 산업 육성기반 구축**

○ **기능성 식품 소재 발굴 및 임상시험 지원 등을 통한 시장 확대**

- 각 기관에 산재된 기능성소재 정보를 종합한 DB를 구축하고 식품기업들이 제품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

- 인체적용시험 전단계인 동물·독성시험단계까지 임상시험 확대 지원

-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 등을 통한 우수 건강기능식품 선정기회 확대,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 인지도 확대

* ('10) 원예, 전통식품 브랜드 등 4개 분야 → ('11) 기능성식품 추가 5개 분야

○ **수입의존도가 높은 식품기자재의 국산화 대체 등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3월)**

- 식품기계 성능평가 시스템 구축, 우수 식품기계 인증제 도입 등

나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강화 및 농어업의 2·3차 산업화 촉진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지역전략식품산업의 성과 확산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11 : 100개 → '12 : 200)

- 성장단계별(창업-중·소-중견기업 등)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우수 기업 집중 지원으로 성공사례 도출

* 정책금융지원, R&D투자, 창업촉진 및 규제완화, 내수시장 확대 지원 등

- 농업창업보육센터(10개소) 를 활용한 융합기업 창업지원 확대

-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융합 촉진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하반기)

* 농어업경영체육성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의 관련 규정 개정 또는 (가칭) 농어업·중소기업 협력법 제정 추진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평가 및 사업관리 강화

- 사업단의 성과 평가와 인센티브 예산 연계 강화

- (현행) 개소당 3년간 평균 27억원 지원 → (개선) 3년간 25억원 / 최대 2년간 9억원 추가(우수사업단) 지원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사업의 성과거양을 위한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사업단협의회를 통한 사업단간 협력 체계구축 및 성공사례 확산

□ 농어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 활성화 지원 확대

- 창업 관련 인허가 등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매뉴얼 보급(1월)

- 지역별 고품질·우수 제품 발굴, 마케팅 등 시장창출 지원

* KFE 등 박람회 전시 및 식품포털 등을 통한 시범판매코너 운영 등

다 한식세계화 및 외식산업 발전기반 구축

- ◇ 한식당 해외 진출, 한식에 대한 인식개선과 현지화를 통해 현지 우량고객 확보 등 한식세계화 본격화
 - 한식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 국내 외식산업 발전기반 구축

□ 전략지역·품목을 설정하여 현지 식습관과 시장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한식세계화 추진

- '11년은 시장성·확장성 등을 감안하여 북미, 동아시아를 전략지역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

* 북미(뉴욕, LA), 동아시아(중국, 일본, 베트남)

- 비빔밥, 불고기, 갈비 등 기업의 해외 진출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조사·컨설팅·마케팅 및 식재료 표준화 등 집중 지원

* 전략품목(안) : 비빔밥(CJ, BIF), 불고기(불고기브라더스), 갈비(벽제갈비) 등

□ 지역별 선호에 맞게 맛과 메뉴, 서비스 방식을 현지화하여 한식과 한식당의 매력도 제고

- 지역적 특성, 한식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 전략 품목에 대한 현지화 장애요인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 맛, 소스, 서비스, 반찬 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 팀 구성(4월)

* 미국 내 월별 한식 경험도는 8%로 태국 15%, 일본 20%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현지화 부족 및 위생문제 등이 주요 원인('09, 美 리서치회사 Mintel 조사)

- 한식조리 특성화학교 운영활성화(우송대, 전주대 등) 및 국제 한식조리학교 지원('11~'13, 전북) 등을 통해 전문인력 양성

□ **한식이 지닌 이미지(한식 BI, Well-being & Harmony) 활용 극대화**

-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종합 홍보대행사**를 통한 해외홍보
 - (북미) 가장 동양적이고 정성담긴 깊은 맛,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
 - (동아시아) 현대적인 이미지, 몸에 좋은 보양 음식
 - * 제일기획과 Edelman(세계 최대 규모의 홍보회사)공동으로 사업 전개 중
- **민·관 협력방식의 플래그쉽 한식당 설립(뉴욕)**을 통해 고품격 한식 전파 추진
 - 연구용역('10.11~'11.3)을 토대로 민·관 협력모델, 운영방식, 메뉴 구성, 홍보 등 설립계획 마련(4월)
 - 국내 외식기업과 현지 한식당의 투자 및 운영 참여 유도

□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외식기업 해외 청년인턴 제도(200명, 11년)를 도입**, 청년고용 창출 및 외식분야 글로벌 인재 양성
- **외식경기지수, 식재료 유통합리화, 우수 외식사업자 지정 등을 포함하는 외식산업진흥대책 마련(하반기)**
 - * 외식산업진흥법 국회법사위 통과('10.12월)
 - * 외식경기지수 : 매출액, 고객수, 투자계획 등 외식산업 성과 및 미래전망을 보여주는 실증 지표이며, 미국 NRA(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레스토랑 협회)는 매월 RPI(Restaurant Performance Index, 외식성과지수)를 발표
 - 식재료 규격 표준화, B2B 확대를 통한 식재료 유통효율화
 - 식품트렌드 및 소비자 수요를 반영한 가정식 대체식품(Home meal replacement), 반가공조리식품(Ready to cook) 등 새로운 시장 육성

라 | 농식품 수출 확대

◇ 연평균 16% 증가세('08년 이후)를 이어 '11년 76억불 달성(27% ↑)

* 수출실적·목표 : ('09) 48억불 → ('10) 60 내외 → ('11) 76 → ('12) 100

○ 현지인 시장 공략 확대 및 고품질·안전 수출기반 조성

□ 일본·중국·미국 등 주력시장의 현지인 마켓 진입 확대 및 ASEAN·EU 등 신흥시장 마케팅 강화를 통해 시장 다변화

○ 주력 시장의 현지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를 통해 대량 수출을 확대하고, 교민 중심에서 현지인 시장으로 확산

* aT와 대형유통업체간 MOU를 체결, 직거래망을 구축하여 업체들의 진출 지원

○ ASEAN의 한류 열풍을 활용한 마케팅 강화 및 유망 품목 발굴

* 싱가포르(김스낵, 딸기, 단감), 베트남(인삼), 필리핀(우유, 조제분유) 등

○ 유럽·중동 등 신규 시장에 대한 시장 조사·시험 수출 추진

* 중동 지역 수출 여건 조사, 현지 재외공관과 연계한 홍보행사 등

□ 향후 3년 내 최대 수출국이 예상되는 대중국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여 대중국 무역적자 해소 및 한·중 FTA 대비

* 중국 농식품 수입 연 17.4% 증가(최근 5년간), 한국 농식품 수출 40% 증가('10년)

○ 물류·마케팅 기능이 결합된 해외수출전진기지를 구축(청도, 하반기 착공)하여, 대중국 공략 거점 역할 수행

* 상설 전시, 바이어 상담 등 추진 및 소량 주문·적기 납품 요구 대응

○ 중국내 최대 식품박람회인 SIAL CHINA 2011(5월)에 주빈국으로 참가, 우리 농식품의 우수성·안전성 집중 홍보

* 한국 식문화 홍보관, 학술 세미나, 이벤트 등 한국 농식품 붐 조성

□ 안정적 물량 공급 등을 위해 수출업체 조직화·규모화 및 단지 조성

○ 품목별 수출협의회를 활성화하여 시장개척 역할 수행 유도

* 품목별 수출협의회 : ('09) 12품목 → ('10) 16 → ('11) 20

○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결합된 품목별 수출선도조직 지속 확대

* 수출선도조직 : ('09) 10품목 13조직 → ('10) 17, 21 → ('11) 18, 22

○ 신선 농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지향형 농어가를 양성

- 생산단계 품질관리(농진청, 산림청), 해외 마케팅(aT), 검역협상·안전관리(검역·검사기관) 기능의 협의체를 출범(3월)하여 집중 지원

○ 안전·고품질 수산물 수출인프라 확충을 위해 수산물 수출 가공단지(부산 감천항내, '13년 완공) 건립 추진('11년 시설공사)

□ 수출 지원 체계 개편을 통해 자생력 배양 및 성과 제고

○ 단순 보조 성격의 수출물류비 지원은 단계적으로 감축해 나가는 한편, 안전·품질관리 등 수출 인프라 강화 지원 확대

* 물류비 지원기준 : ('10) 표준물류비의 45%(중앙 15, 지방 30) → ('11) 35(10, 25)

- 물류비 지원대상은 성과평가제를 도입, 신규 시장개척 및 수출 효과가 높은 품목 중심으로 개편

○ 체계적인 마케팅 지원을 위해 기존 분기별로 추진되던 판촉·홍보지원 사업 등을 연초에 일괄 선정하여 사업 성과 제고

- 수출업체들의 연간 계획을 토대로 국가별·품목별 쏠림 현상 조정

○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수출지원사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해 일관된 계획 하에 판촉·홍보, 바이어초청 등 추진

* 대규모 바이어초청(6·11월), Foodex JAPAN(3월), SIAL CHINA(5월) 등 권역별 대표 박람회 참가 및 해외 대형유통업체 판촉 행사 시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3 국제곡물 가격상승 대응 및 해외 농림어업 개발

가 국제곡물 가격·수급불안 대응 강화

◇ 국제곡물가 수급 및 가격 동향의 상시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입·공급 체계 구축

- 기상변화, 물류, 에너지, 환율 및 수급동향 등 국제곡물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 국제곡물정보분석협의회(농식품부, 유통공사, 민간전문가로 구성) 운영을 통해 곡물가 및 수급동향 분석
 - * 해외aT센터(10개소), 해외모니터(23명), 정보사이트(38개) 등 적극 활용
 - 선물가격, 재고율, 원유가 등 선행변수를 기초로 하여 매월 국제곡물시장 위기발생 가능성 사전예측(EWS)
 - 단계별(정상,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대응 매뉴얼에 따른 조치 시행
-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으로 해외곡물 안정적 확보 추진
 - 유통공사와 민간기업간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미국) 법인 설립 및 유통시설(산지·수출EL) 확보(상반기)
 - * 초기단계 원활한 투자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자금 일부 출자(200억원)
 - 현지법인을 통해 곡물 주산지를 대상으로 계약재배를 실시, 콩·옥수수 등 10만톤 수입(하반기) 및 연차별 확대 추진
- 국제곡물가 상승시 관계부처와 협의, 사료·식품 원료 할당 관세(관세율 인하) 대상 품목 확대를 통해 물가안정 도모
 - * 사료원료(겉보리, 옥수수, 대두, 주정박 등), 식용원료(밀, 매니옥칩, 맥아 등)

나 국제 농림수산 협력 확대

◇ 수원국과의 상호이익 증대,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사업 개선 및 추진으로 협력사업의 성과 제고

- G20 개발 아젠다 계기, '11년을 농림수산분야 협력사업 도약의 시기로 하여 농림수산분야 ODA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 농업·수산·산림 등 전 분야 ODA 통합지원 체계 마련
 - 식량안보, 자원외교 등을 종합 고려, 개도국과 우호적 경제협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기본방향 정립
 - * 해외개발사업과 연계 및 비구속적 원조 기준 마련 등
 - 효율적인 양자간·다자간 협력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체계 개편 및 KOICA 등 유관기관 연계 강화
- 수원국 정책여건 등을 감안한 맞춤형 사업절차, 매뉴얼 마련
 - 개도국과 우리의 정책여건을 고려한 사업추진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사업발굴, 사업선정, MOU 체결 등 매뉴얼 작성
- 농림수산분야 ODA 전문가 Pool 및 사업 품질관리 체계 구축
 - 전문성,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ODA 전문가 Pool을 구축하여, 협력사업 내실화 기반 마련
 - 협력사업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종료시까지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환류

□ 협력대상국 확대 및 협력사업 규모화·내실화 추진

- 인프라(물적자원)와 전문가 파견 등(인적자원)을 패키지화하여 지원하는 기획협력사업 대상국 지속 확대 및 규모화 추진
 - KOICA 등 유관기관과 연계, 대상국별 협력사업 규모화 추진
 - * '10년 현재 DR 콩고, 모잠비크, 필리핀, 캄보디아와 기획협력사업 추진 중
- 조업권 등 수산자원 확보와 연계된 수산분야 ODA 확대
 - 아프리카 및 남미 주요 연안국과 양식기술 협력사업을 전개, 연안국 수산·양식기술 지원 및 해외수산자원 개발 도모
 - * 페루 양식전문가 파견('11), 튀니지('08~'11), 알제리('08~'13) 양식기술 이전
 - 나우루협정당사국(PNA)인 솔로몬에 어항개발 사업타당성 조사('10.12~'11.10) 추진
 - *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솔로몬정부에서 어항개발 ODA사업 신청 예정
- 수원국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농업기술 지원 강화
 -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 ('10) 10개국 → ('11) 15(에티오피아 등 5개국)
 - * 아시아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AFACI) : ('10) 14개 사업 → ('11) 20
 - *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 사업 본격화(3월, 총회 개최)

□ 식량안보, 녹색성장 등 국제적 현안 대응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NGO와의 협력 강화

- FAO, IFAD, 빌 게이츠 재단 등과 공동 협력사업 발굴 추진
 - * 아세안 및 아프리카 개도국을 대상으로 공동 협력사업 추진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 추진 및 국제연합 사막화 방지협약(UNCCD) 제10차 총회(10월)의 성공적 개최
 - AFoCO 회원국과 MOU 체결 및 인력양성 등 협력프로그램 운영
 - * ('10) 4개국(1.2억원) → ('11) 8개국 이상 (23억원)

다 상생적 농림수산 자원 개발

◇ 불안정한 세계 식량상황 대응 등을 위한 해외 농림수산자원 개발로 안정적인 식량·수산·산림자원 확보

○ 개발 대상국에 도움이 되는 상생적 개발로 국가간 우호도 제고

□ (농업) 안정적 확보 체계 구축 및 개발 대상국가 확대

* 예산 : ('09) 240억원 → ('10) 240억원 → ('11) 320억원

* 진출(누계) : ('09) 5개국 10기업 → ('10) 7개국 18기업 → ('11) 9개국 22기업(잠정)

○ 농장개발 운영방식에 유통거점(저장·가공·물류시설) 확보,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경영모델 적극 추진

* '10년 현재 농장형 14개 기업(78%), 유통형 4개 기업(22%)

○ 해외 확보물량의 안정적인 유입을 위한 외교적 노력 및 진출 지역 다변화로 기상이변 등에 따른 수출 제한 등에 대처

- 투자대상지 선정시 투자국의 과거 수출제한 등 이력 검토

□ (수산) 자원 외교 강화 및 해외어장 개발 확대

○ 한·러, 한·일, 한·중 등 주변국과 자원외교를 강화하여 안정적이고 균형적인 조업조건 유지

- 극동지역에 대한 투자 진출 등 한·러간 수산분야 교류 협력 강화로 안정적인 명태 조업쿼터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 명태 쿼터 : ('08) 28.5천톤 → ('09) 39.0 → ('10) 46.8 → ('11) 40.0 + 7(잠정)

- 한·중 어업협상을 통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방지대책의 조속한 실현 추진 및 우리 EEZ 및 NLL 부근 불법어업 단속 강화

□ (산림) 산림자원 외교 다변화, 대상국 확대 추진

○ 진출지역 및 자원의외교 다변화로 '11년 해외조림 25천ha 실시

* '93부터 '10년까지 228천ha 해외조림 추진(11개국 21개 기업)

- 필리핀과의 신규 산림협력 체결(3월) 및 협력국과의 교류 확대

* '10년까지 인니, 파라과이, 튀니지 등 12개국과 산림협력 체결

○ 정상외교로 확보한 인니, 캄보디아 40만ha 조림사업 추진

* 투자기업에 정책자금, 조사비용 및 조림허가 취득 지원으로 조기 조림사업 착수

*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운영으로 신규사업, 투자수익모델 발굴

□ 민간 중심 농림수산자원 개발과 ODA를 연계하여 상생적 개발효과를 제고하고, 국제사회의 개발관련 논의 적극 참여

○ 정부간 사전 협력으로 토지확보 후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추진방식(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도입 추진

* 한·필리핀 정상회담('09.5.30) 계기로 필리핀의 요청에 의해 추진 중인 '필리핀 복합산업단지(MIC)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KOICA, '10.4~'11.3)와 연계

○ 농림수산자원 개발시 ODA와 연계하여, 개발 대상국과의 우호도 증진 및 자원의 안정적 확보 제고

○ '국제농업투자 원칙' 제정 참여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로, 국익 및 국격을 동시에 제고

* World Bank 주축으로 FAO 등 국제기구가 연계되어, '11 상반기에 '국제 농업투자 원칙' 제정 예정

* 우리부는 FAO 아·태지역 의장국 지위로 '국제농업투자 원칙' 제정시 적극 참여

◆ 민·관 합동(PPT) 필리핀 복합산업단지(MIC)조성 추진

- 농업을 중심으로 관련 제조업, 녹색 에너지 발전사업 등이 포괄된 복합산업단지(MIC:Multi-Industry Cluster)
 - 정부間 협력으로 대규모 토지 임차 후, 지역별로 농업을 주축으로 특색 있는 산업이 결합된 단지 조성
 - 우리의 풍부한 개발경험을 활용, 필리핀의 풍부한 농업잠재력을 토대로 여타 주변 산업과 녹색에너지 발전사업 등을 발전
- 현지여건을 감안, 곡물분야부터 착수 후 점진적으로 전·후방 산업을 연계하여 규모화 복합화
 - (개발분야) 건조·저장시설(10만톤) 조성, 농장개발(3천ha), 지역 농산물 계약재배(12천ha)·수집(15천ha) 등
 - (협력분야) 농업기술, 농촌개발, 교육, 도로, 소수력발전 등
 - ※ 현지조사 결과 민간참여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고려하여 사업 규모 및 내용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
- '09.5.30, 한·필리핀 정상회담 계기로 필리핀의 요청에 의해 추진 중인 “필리핀 복합산업단지(MIC)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KOICA, '10.4~'11.3)와 연계 추진
 - '10.7~12 : MIC적지 선정을 위한 민 관 합동 현지조사 실시
 - '10.11.25 : 한 필리핀 MIC개발협력포럼 개최(서울)
 - '11.2 : 필리핀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11~'15)”에 포함(예정)
 - '11 상반기 : 민간투자자 모집 및 사업모델 마련
 - '11 하반기 : 사업 착수

4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가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수산자원 관리강화

◇ 친환경적이고 자율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지속 가능한 수산업 생산기반을 조성

【연근해어업의 패러다임 전환】

-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구조로 전환하여 지속가능 어업 실현
 - 노후어선 감척시 적정규모의 친환경 유류절감형 선진화 어선 신조 등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 * 감척계획 : ('09) 1,724척(1,295억원) → ('10) 1,165(775) → ('11) 684(412)
 -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11 : 300척, 43억원), 어린고기 탈출장치 개발 추진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 어업관리 시스템 구축
 - 정부 주도의 일률적 관리를 지양, 지자체 권한이양 추진
 - 대상 과제 선정(3월), 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6월)
 - 업종간·지역간 어업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조정 결과의 효력을 보장할 수 있는 분쟁 조정기구 도입 추진
- 감척 위주의 구조조정 정책을 미래지향적인 다양한 어업구조 선진화로 개편
 - 감척 외에 어업의 종류 통합·변경,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 조정, 어선 경영규모 적정화 등 구조 개선 방식을 다양화
 -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10.12, 법제처 심사)

【체계적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 수산자원관리 기본계획('11~'15)에 따라 연근해어업은 TAC, 마을어업은 어촌계 자율관리로 체계화

○ TAC(총허용 어획량 제도) 대상 어종(11개 어종) 중 지역성이 강한 품목(제주소라, 흑산홍어)은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

○ 자율적 자원관리를 선도하는 자율관리공동체가 어촌 변화의 중심체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혁신 유도

* 자율관리공동체 : ('10까지) 전 어촌계의 38% (840개) → ('11까지) 46 (925)

- 벌교·보성 지역 자율관리 공동체간 참고막 연합 등 2개 연합체 시범 구성, 대형유통업체와 직거래 MOU 추진

□ 바다숲, 바다목장 등 정부 주도의 수산자원조성사업은 전담 기구 출범(수산자원사업단, '11.1)을 계기로 효과성·전문성 제고

○ 조성된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레저 프로그램과 연계, 수익 창출을 통해 지속가능한 자원조성체계 구축

○ 인공어초 적지조사 및 사후관리 조사, 수산종묘 방류사업 실태조사 등 체계적 분석 추진

* '11년 사업계획 : 바다목장(260억원, 17개소/신규 4개소), 바다숲(130억원, 12개소/ 650ha), 우량종묘방류(12억원)

□ 수산자원 서식여건 등 어장환경 모니터링 지속 추진

○ 어장 오염도 및 수용력 산정을 위한 전국적 어장환경 실태조사

* ('08~'11) 남해 → ('12년 이후) 동해, 서해

○ 어장환경 상시측정 관리제도 및 어장환경 평가제 도입 등 어장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6월)

나 양식산업 성장동력 확충

◇ 양식산업의 지속가능성과 신(新)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외해 양식 개발 확대 및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 추진

□ 고부가가치 외해양식어업 확대를 통한 수출전략품목 육성

○ '12년까지 외해가두리 양식어장을 15개소로 확대

* ('10) 6개소(참다랑어4/참돔 등 기타2) → ('11) 11(6/5) → ('12) 15(8/7)

○ 참다랑어 완전양식을 위한 5개년 계획('10~'14) 추진

* 어미군 사육관리 및 종묘생산 기술 개발('11년, 24억원)

□ 친환경 양식기반 구축 및 양식어업 경쟁력 강화

○ 양식장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지하해수(16℃) 사용 양식기술 보급 및 발전소 온배수 활용 난류성 어종 양식기술 개발 추진

○ 친환경 고효율 배합사료 사용률 확대('10년 16% → '11년 18%)

□ 갯벌의 적극적 이용 및 관상어 산업 육성 방안 마련

○ 갯벌을 활용하여 수출 잠재력이 큰 갯벌 참굴, 해삼 시범 양식 및 갯벌양식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

○ 고부가가치 관상어 산업 육성대책(2월) 마련

□ 내수면 양식기술 개발 등 내수면 자원활용 기반 구축

○ 고부가가치 어종인 뱀장어 치어(국제적 수출 금지종)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완전양식연구단 구성(국립수산과학원, 1월)

○ 충남 금강에 참계를 이용한 내수면 목장화 타당성 검토

다 원양산업 경쟁력 제고

◇ 원양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재정지원과 원양산업 총조사를 실시하고 원양어선의 현대화를 지속 추진

□ 수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및 신어장 개발 지원

○ 원양기업 등의 해외 수산시설(양식, 가공 등) 투자 지원(2개소)을 통해 해외 수산자원의 개발 거점으로 육성

* 사업자 선정 공고(1월) → 신청(2~3월) → 선정·지원(6월)

○ 수산자원 관리와 지속적 이용이 가능한 해외신어장 개발을 위해 해외어장 자원 조사 지속 추진(2개소)

* 수요조사(1월) → 사업자 선정(2월) → 자원조사 추진(3월~)

□ 해외 수산투자 정보 기반 구축을 위해 원양산업 총조사 실시

○ 기초조사('10.7~'11.1)를 토대로 원양산업 관련 업체에 대한 총조사를 실시(4~11월)

○ 원양어업 관련사업 및 해외합작 수산사업(어업, 양식업, 가공업, 유통업)의 운영현황 등을 파악, 원양산업 통계 인프라 구축

□ 원양어선 현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정비

○ 신규 참치 선망어선(2척, 연내 완공) 지원을 차질 없이 마무리

- 참치연승, 대형트롤선 업종에 대해서는 신규 건조 또는 중고선 도입을 위한 금융지원체계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지원

* 참치선망어선 21년 이상 노후화 비율 : 한국(79%), 일본(22), 중국(0)

○ 오징어채낚기, 꽁치 봉수망 등 기타 업종의 노후 선박에 대해서는 엔진·냉동시설 등 설비 현대화 지원('11 : 10억)

5 종자·생명산업 육성

가 종자산업 육성 기반 확충

◇ 민간 육종기반 확충, 유통종자의 품질 강화 등을 통해 종자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 민간육종 인프라 구축으로 육종의 다변화 및 활성화 도모

○ 육종세대 단축, 신품종 조기육성을 위한 방사선육종센터 구축(~'13)

- 기본·세부설계를 완료하고, 시설공사 시작('11 : 40억원)

* 방사선육종센터 : 132억원(연구실·실험실 등 3,000㎡), 한국원자력연구소

○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으로 신품종 육종의 시너지효과 도모

- '15년까지 562억원을 투자하여 20개 육종연구 민간기업을 유치

* 민간육종연구단지 : ('11) 설계, ('12~'13) 시설공사, ('14~'15) 장비구입 및 입주

□ 종자 수출 및 수입대체 품종개발을 위한 R&D 투자 확대

○ 유용 유전자원 탐색, 분자마커 개발 등 민간육종분야 지원 확대('10 : 192억원 → '11 : 242)

- 종자수출 등 차별화된 성과를 위한 Golden Seed Project 추진('12~)

○ 로열티 확보 등을 위한 해외출원 및 국외 적응성시험 확대

* 해외출원 : ('10) 6개국/76품종 → ('11) 6/90, 적응성시험 : ('10) 4/15 → ('11) 5/23

□ 유통종자의 품질 강화 등 종자산업 육성 기반 구축

○ 종자보증·DNA 검정 등 종자 품질관리 시스템 강화

* 종자산업법 을 종자산업 육성법 과 식물신품종보호법 으로 분리

- 융복합연구센터(ARC), 석·박사인턴제 등을 통한 **육종인력 양성**
 - 채소류 육종연구센터 지정(서울대)·운영 중('10~'19, 연 10억원 지원)
- 육종기술지원센터(농진청) 운영으로 육종기술관련 서비스 지속
 - DNA마커 개발 및 분석, 병해충 검정 및 교육지원 등
- (축산) **종돈장간 우수 유전자원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 민간 자율의 “**종돈개량 네트워크 추진위원회**”를 구성(1월), 유전자원 교류·선발·보급분야에 대해 종돈개량 통합관리
 - 유전능력 우수종돈(산자수 기준, 상위 1%) 도입 및 국내 우수 종돈 선발·보급을 통해 국내 종돈 능력 향상 유도
 - 종돈장 네트워크 구축사업 품종 확대(듀록 → 요크셔, 랜드레이스)
 - **전문 종돈장(7개소) 육성, 피라미드형 종돈 생산체계 구축**
 - 원종돈(GGP)과 종돈(GP)을 분리하여 생산하는 전문종돈장 그룹에 시설·운영자금 지원(50~100억원/개소)
 - 돼지 인공수정센터(AI센터)를 권역별로 통합하여 생산, 유통 등을 전문화할 경우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9억원/개소 이내)
- (수산) **품종보호 시행 대비 해조류 신품종 개발 확대**
 - 수입대체 및 수출전략 품종의 이원화 체제로 개발
 - * 김, 미역 등 신품종 개발 확대 : ('10) 7품종 → ('11) 9
 - 신품종 여부 확인을 위한 출원품목 표준심사기준 마련(12월)
- (산림) **우수 산림 종자·묘목 생산으로 산지를 녹색자원화**
 - 백합나무 등 기후변화 대응 수종의 종자 및 묘목 생산 확대
 - * 바이오순환림 묘목 : ('10) 12백만본 → ('11) 19 / 백합나무 클론 : ('10) 30만본 → ('11) 60

나 생명자원의 확보 및 산업화

◇ 다양한 농림수산 생명자원 확보 및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생명자원을 활용한 신소재 개발 및 생명산업 육성

- 농림수산 생명자원의 확보, 특성평가 및 DB 구축 등을 통해 바이오산업 소재 등 다양한 연구·개발을 위한 기초 정보 확충
 - 세계적 수준의 농림수산 유전자원을 확보하고, 보유 유전자원에 대한 유전적 형질 등 특성평가를 지속 추진
 - * 유전자원 확보 : ('10) 67만점 (세계 6위) → ('11) 72 → ('20) 95 (5위)
 - * 특성평가 : ('10) 41% → ('11) 48 → ('20) 63
 - 생명자원 종합정보시스템(DB)을 구축, 수요자에게 자원정보의 검색에서 분양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11~'13)
- 고부가 신소재 개발 등 생명산업 R&D 확대 및 기반 구축
 - 생명자원인 동식물, 미생물을 활용한 천연의약 신소재 등 생명산업기술개발 연구 ('11 : 522억원)
 - 농생명 원천기술개발을 위한 차세대 바이오그린 21사업 착수
 - * '11~'20(10년간) 8,306억원 지원, 차세대 유용 유전자 발굴, 바이오 식·의약 소재 등
 - 식음료·의약품·화장품 등 제품 개발 및 생산 지원을 위한 천연색소산업화 지원센터 건립('11~'13, 50억원)
 - 곤충생산단지 및 학습체험시설 등 조성('11 : 17억원)
- 생명산업 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성과 확산을 위한 홍보 추진
 - 생명산업 우수 연구성과의 상품개발을 위한 사업화 지원('11 : 80억원)
 - 기술·정보 교류 및 홍보 등을 위한 생명산업대전 개최(11월)

다 도시농업 활성화

- ◇ 법적·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및 도·농 상생 발전의 도시농업 활성화 추진
 - 여가적·체험적 농사활동과 인공광원을 활용한 미래첨단형 수직빌딩농장을 육성하는 도시농업종합계획 마련

□ 도시농업에 대한 지원,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도시농업공원 설치, 기본계획 수립 등의 법적 근거 마련

- *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제정(하반기)
- * 외국의 예 : 얼롯먼트법(영국), 클라인가르텐법(독일), 시민농원법(일본)

- 지자체별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 도시농업 활성화 도모

- * 서울, 부산 등 6개 지자체 조례 제정·시행, 대구, 경기 등 10개 지자체 준비

□ 도시농업종합계획 및 지자체별 시행계획을 마련, 본격적인 도시농업 활성화 체계 정비

- 도시농업공동체의 구성·운영을 통해 도시의 빈 공간을 활용하는 옥상농원(Community Garden), 스쿨 팜(School Farm) 등 조성

- 도시농업관리사 양성, 도·농간 교류 촉진, 생활농업경진대회 등 민간주도 도시농업운동을 전개·확산

□ 인공광원과 최첨단농법을 활용하는 수직빌딩농장(식물공장) 등 미래형 도시농업 육성 기반 확충

- 인공광원 활용 식물재배기술 등 기초 연구에 대한 R&D 확대

- * 연구용 식물공장을 건립('10.10월, 농촌진흥청)하여 기초기술 연구 기반 마련

6 FTA / DDA 협상 대응

가 FTA 협상 대응

◇ 선진 거대경제권과의 FTA 발효에 대비한 농어업 체질 개선과 동북아 지역무역협정 움직임에 전략적 대응

- 미국, EU와의 FTA 비준 대비, 호주·뉴질랜드·콜롬비아·터키 등과 본격 협상 및 중국과의 협상 개시결정 대비

□ 국내 농정여건 및 농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FTA 개방수준을 확대하되, 대 국민 공감대 확산 노력 병행

- (중국) 농수산물의 민감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적극 강구 및 사전적 대응 강화

- 중국시장의 잠재력을 고려, 농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한 기회로 활용

- * 우리나라 농수산물 교역액(261억불)중 중국의 비중 : ('09) 16.1% 수준(42억불)
- * 한·중 FTA 협상 개시 전 민감분야 처리방안 사전 협의('10.9월, '11.1월(잠정))

- (한·중·일 산관학) 식량안보·식품안전 분야 협력방안 등 연구

* 환태평양 경제연대 협정(TPP)에 미국, 호주 및 일본의 참여 동향에 대응

- (호주, 뉴질랜드) 쇠고기, 낙농품 등 민감품목에 대하여 협상력을 집중하고, 연구·인적 교류 협력 확대

* 대 호주 농수산물 수입 ('09) : 쇠고기 482백만불, 밀 222, 낙농품 87

□ FTA를 통해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개도국과의 협력사업 확대 및 농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에 기여토록 노력

나 FTA 대응 경쟁력 제고

- ◇ 경쟁력을 제고하고 소득기반을 확충하여 개방시대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
 - '07년 마련된 한미 FTA 보완대책을 토대로 대처하되, 이후 FTA 추진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보완

□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수립된 한·미 FTA 보완 대책('07.11월)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한국 농어업의 대응력 강화

- 품목별 경쟁력 강화, 농수산업 체질개선, 단기적 피해보전 제도 운용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대책사업 지속 추진
 - 10년간('08~'17) 투·융자계획(21.1조원)에 부합하도록 예산확보 및 신규 사업 지속 발굴
 - 농어업인 단체 등의 요구사항, 각 FTA별 영향분석, 대책 추진 경과 등을 고려,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 한·EU FTA를 계기로 보완된 축산업 경쟁력 대책 중점 추진

-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 우수 종축 공급, 학교우유급식 확대, 각종 백신 지원, 가공원료유 지원, 농가 조직화 등에 중점
- 환경부담 경감을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 구축 확대
 - 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누계) : ('10) 56개소/3 → ('11) 70/6
 - 액체비료 품질 향상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부숙도 기준 제정 및 살포 가능 지역 확대(농경지·초지 → 골프장·임야 추가)
- 돼지고기 등급기준 보완, 항생제 사료 첨가 금지, 양돈장 이동 관리시스템 구축 등 제도개선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

다 FTA 피해보전 제도 개선

◇ FTA 체결국에서의 급격한 수입증가에 따른 피해에 대비, 단기적 피해보전장치를 마련하여 농업인 불안감 해소

□ 한 미 및 한 EU FTA 발효에 대비, 소득보전직불제 및 폐업지원제도의 운용을 위해 FTA특별법 하위법령 개정(6월)

○ 현행 법령상 시행기간을 연장, 소득보전직불은 협정발효 후 7년, 폐업지원은 협정발효 후 5년간 운용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시행기간 : 소득보전직불 2010년 말까지, 폐업지원 2008년 말까지

□ 수입급증으로 인한 피해보전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개선(6월)

○ 소득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사전지정에서 사후지정으로 변경

- 직불금 산정방식은 가격에서 단위면적당 조수입으로 기준 변경

- 피해보전 비율은 현행 80%에서 85%로 상향 조정

◆ 농가당 직불금 : 생산면적(마리) × (기준조수입 -当年조수입) × 85%

* 기준조수입 : (품목별 직전 5개년 조수입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평균 조수입) × 80%

○ 폐업지원제도의 대상품목 선정방식 및 발동요건 개선

- 고정투자가 이루어지고 장기간 생산이 이루어지는 품목 중 수입 피해영향을 분석하여 지원여부 결정

- 과도한 신청 방지를 위해 지원금 산정방식을 순수익 기준으로 변경

◆ 농가당 폐업자금 : 폐업면적(마리) × (조수입 - 경영비 - 자가노력비 - 토지용역비 - 자본용역비) × 3년

라 DDA 협상 대응

◇ 2011년 협상타결 가능성에 대비하여 농수산업 민감성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

- WTO 사무총장이 '11년 DDA 협상 타결을 위하여 새로 제시한 협상 계획에 따라 DDA 협상이 가속화될 전망
 - 향후 협상은 '11.3월말까지 수정 세부원칙 마련, 6~7월말까지 세부원칙 타결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
 - * G-20 서울 정상회의 및 APEC 요코하마 정상회의에서 '11년 DDA 타결에 대한 각국의 정치적 의지를 확인한 바 있음
- 농업분야 세부원칙 협상에서 주요 관심사항 중심으로 실익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품목별 개방계획 협상에도 적극 대비
 - 특별품목·민감품목 등 핵심사항에 대해 수입국그룹(G10) 및 개도국그룹(G33)과 공조를 강화하여 우리 입장을 최대한 반영
 - 품목별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농민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 특별·민감품목 선정 등 이행계획서 작성 준비
 - 개도국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도국그룹(G33)과 공조를 강화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여건 조성을 추진
- 수산분야는 면세유 등 민감 이슈에 대해 일본·EU·대만 등과 공조 체계를 강화하면서 우리 입장에 대한 지지를 확대
- 협상 타결시, 향후 확대될 수출 시장을 겨냥하여 주요 수출 농수산물식품의 경쟁력을 제고

3. 농어촌 지역 활성화

1 인력 육성 및 귀농·귀촌 활성화

가 미래 농어업인력 육성

◇ 진입 준비 - 신규 창업 의 인적자원 관리체제로 개편, 미래의 핵심 농어업 인력을 적극 육성

□ 젊고 유능한 신규인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 유인대책 추진

○ 농대생 대상 영농정착교육과정 운영, 농고생 대상 현장훈련 및 진학우대 등 안정적 후계인력 양성교육 기반 마련

* 현장과 연계한 기술습득 및 창업 프로그램 운영(10개 농고, 11개 농대)

- 선진어업기술 인력 확보를 위해 수산계 고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9개교) 등 현장실습 중심의 업종별 품목별 교육 확대

○ 농수산업 인턴제 효과 제고를 위해 전담운영기관 지정(2월) 등 관리시스템 내실화

- 인턴 사전 교육 등을 실시하고 우수 선도농어가의 발굴 관리

□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식 개선

○ 후계농업인 자금지원을 자율신청방식으로 전환, 불확실한 사업계획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투자 유도

* (현행) 개인별 대출한도액 배정 / 사업 당해연도 지원 → (개선) 2억원 한도 내 자율신청 / 3년간 대출 가능

○ 후계어업인이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 인원 및 지원규모 : ('10) 504명, 200억원 → ('11) 1,000, 400

* 정예어업인 양성 기반 마련을 위한 수산업 진흥법 제정(국회 상임위, '10.12월)

나 농어업 교육·컨설팅 정비

◇ 현장수요에 맞춘 교육·컨설팅을 통해 우수 인적자원을 육성하고, 농기업을 경영을 선진화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업교육 운영으로 교육 효율성 제고

○ 농업교육기관 프로그램 공모를 통한 교육을 실시하고 만족도 역량변화 등 성과측정을 통해 교육효과 제고

□ 교육기반 확충 및 평생학습체계 확립

○ 전국대표실습장, 선도농가실습장 등 교육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교육기관 간 연계 활성화로 현장학습기반 구축

* ('10년 현재) 전국대표실습장 8개소, 선도농가실습장 45개소

○ 품목별 교육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평생학습체계 확립

* 단계별(진입, 성장, 전문), 등급별(초급, 중급, 고급) 교육과정 개발 운영

□ 농어업경영체의 조직화 규모화 유도를 위해 전문경영인력을 육성하고 조직 법인 중심으로 컨설팅 비중 확대

○ 전문경영인력에 대한 농기업 수요조사를 실시(1월)하고, 타산업 분야 출신 우수인력에 대한 맞춤형 교육 실시

* 전문경영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DB 구축 등 체계적 관리

○ 생산기술 위주의 농어가단위 컨설팅 비중을 줄이고, 품목대표 조직, 연합사업단 등 조직·법인 비중 확대

* 개별농어가 : ('10) 86% → ('11) 50%, 조직 법인 : 14% → 50%

다 귀농(어)·귀촌 지원대책 정비

◇ 정보제공 교육, 농어업 창업지원을 통해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 정착 유도

□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농촌유치활동 확대

○ 지자체별 전담창구를 구성, 이주희망 도시민의 이주 준비, 정착 등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전담창구 : ('07) 10개 시·군 → ('10) 22 → ('11) 24 → ('13) 30

○ 귀농 귀촌 상담가를 양성하여 귀농인의 농촌정착을 지원

- 귀농귀촌 설계, 정보제공 등을 담당할 (가칭) '귀농 귀촌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과정 개설(6월)

* 시군의 귀농지원센터에 배치하여 이주 희망자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 및 지역정보 제공 등의 역할 담당

□ 귀농·귀어희망자 대상의 다양한 정착 지원 방안 마련

○ 새로운 수요(대기업 퇴직예정자, 제대군인 대상 등)에 맞춘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등 귀농 귀어 교육프로그램 확대

○ 귀농·귀어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영농·영어자금 등 지원

- 농지구입, 시설설치, 양식장구입, 어선구입, 주택신축 등 초기 영농 영어기반 마련을 위한 융자 지원('11 : 600억원)

- 빈집정보 제공, 농지은행의 농지 임대 등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제공

* 민간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전국의 농어촌 빈집정보를 일괄제공(6월)

라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을 통한 활력증진

- ◇ 정예인력 10만명을 육성,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 창출
 - 중앙과 지자체에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각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 전개

□ 핵심리더를 육성하여 농어촌 사회 변화를 주도

- 핵심리더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
 - 지도자 소양, 마을경영, 조직운영, 마을발전계획수립 등 교육
- 핵심리더 주도하에 농어촌의 획기적 변화 도모
 - 의식개혁, 경영혁신, 특성화 마을 조성, 공동체활성화 등

□ 핵심리더를 중심으로 각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농어촌 활력 창출 추진 운동 전개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추진기구(범국민운동본부) 설치
 - 각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범국민운동 전개
- 농어촌의 마을단위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 운영

□ 농어촌에 활력있고 희망찬 분위기 확산

- 마을간 경쟁 촉진을 위해 (가칭)“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 시상
 - 잘하는 마을을 중심으로 정책자금 등 집중 지원
- 1사1촌 운동 등과 연계하여 대국민 홍보 강화

2 농어촌 사회 안정

가 농어촌 공공서비스 지원정책 강화

◇ 농어촌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범부처적 지원 체계 확립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체계적으로 점진 개선할 수 있도록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

○ 효율적 운용을 위해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농어촌 서비스기준 협의회 구성 운영(3월~)

* 농어촌서비스기준 설정 조정, 달성정도 점검, 개선방안 등 협의

○ 주거 교통 교육 보건의료 등 8개 분야의 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평가(10월), 삶의 질 향상 계획에 반영

□ 정부 정책이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조정하는 농어촌영향평가제 시행

○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 농어촌영향평가 지침 통보(3월)

* i) 소규모 분산거주 등 농어촌 특성 고려 ii) 지역경제, 경관, 생활 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포함

○ 1~2개 정책을 선정(4월), 영향평가를 통한 대안 제시(12월)

* 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삶의질법 개정, 6월 국회제출)

□ 삶의 질 향상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진체계 개편

○ 주요 정책과제(2개)에 대한 심층평가 실시, 정책 보완

* 세부사업(133개) 추진실적 평가(3월), 주요과제 현장 심층평가(상·하반기)

나 농어촌 복지지원 확대

◇ 고령농 및 농어촌 취약계층 등에 대한 생활 밀착형 복지 지원으로 사회안전망 확충

□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여가활동 지원 확대

○ 농지연금제도 시행(1월부터 신청 접수 및 연금 지급)

- 영농경력 5년이상, 소유농지 3만㎡이하인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원
- * 65세이상 농가의 30.8%가 농지연금 가입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 * 70세의 농업인이 2억원의 농지를 담보로 가입시 매월 77만원 수령

○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 은퇴농가(65~70세)에 대한 소득지원 제도 활성화

- * 농업인이 매도·임대할 경우 ha당 월 25만원 지원('11 : 623억원)
- 45세 이하의 농업인도 경영이양농지를 양수할 수 있도록 확대
- * ('10) 전업농업인, 전업농육성 대상자, 농업법인 → ('11) 45세 이하의 농업인 (3년이상 농업경영) 추가
- 경영이양을 통한 소득지원 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 농촌 노인의 건강생활, 학습·사회활동 등 지원 강화

- * 농촌건강장수마을 조성 : ('05~'10) 500개소 → ('11까지) 582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등 사회안전망 지속 확대

○ 연금 가입자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지자체 워크숍 개최, 농업인 대상 홍보 리플릿 배포 등)

- * 건강보험료 지원(436천세대 / 1,544억원), 연금보험료 지원(219천명 / 869억원)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강화 및 영유아 양육비 부담 경감**

- 대학 졸업 후 취업난 등을 감안, **학자금 용자 거치기간 연장(1→2년)**
 - * 대학생 학자금 무이자 용자지원 예산 : ('10) 505억원 → ('11) 605억원
- 학자금 용자 지원대상을 방송대, 사이버대 등 원격대학으로 확대
 - * 관련 기관 협의를 거쳐 '11년 지침 개정
- 취학전 시설 미이용 아동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35% → 45) 확대**
 - * 지원비율 : 시설 이용 / 미이용 ('10년) 70% / 35% → ('11년) 70 / 45

□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강화 및 농어촌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 경영능력 및 리더쉽 향상 등 **여성농어업인의 전문 인력화**
 - * 제3차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11~'15) 수립·추진
-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영농교육 및 농촌정착지원 과정 운영**
 - * 기초농업 및 1:1 맞춤형 농업교육(각 500명), 농촌정착지원과정(1,100명) 운영
- **영농 도우미 지원조건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개선**
 - 영농 도우미 지원대상 확대 : 10일 이상 입원 → 5일 이상 입원

□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어선원 처우개선 추진**

- **외국인 선원 숙소 건립(사무실, 휴게실, 샤워실, 체육실 포함)**
 - 100명 기준 숙소를 전국 주요 어항에 10개소 건립('10년부터 매년 1~2개소)
 - * 외국인 어선원 이탈율 : 20톤 이상 어선 20.6%, 어업 31.1%
- 어선주가 해상노동조합에 납부하는 **외국인선원특별회비(1인당 연 60만원)인하를 중재 조정, 실질임금인상 및 복지향상 유도**
 - * 특별회비 납부액 : ('08) 1,726백만원 → ('09) 2,027 → ('10p) 3,000

다 농어촌 맞춤형 지역개발 및 주거여건 개선

◇ 생활권을 고려한 정주권 개발, 지역유형별 맞춤형 개발모델 적용 등 지역주민 주도 상향식 맞춤형 지역개발 추진

○ 민간과 협력해 소외계층의 주거 개선 지속

□ 농어촌 주민의 생활권역과 동선을 고려해 중심지와 마을을 연계하여 개발하는 맞춤형 정주권 개발체계 구축

○ 산업·정주 등을 포괄하는 통합형 지역개발 모형을 보급(2분기), 지역별로 유형별 개발전략(도시·농촌·도농연계형 등) 수립 유도

* 통합형 지역개발모델 정립을 위한 연구용역(농촌경제연구원, '10.12)

○ 중심지와 배후마을 개발전략을 포괄하는 시군 단위 5개년 중장기 계획('10~'14)을 시행하고,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축

- 정부, 시·도 합동 상시 모니터링 및 평가결과 차년도 예산편성 반영

□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소외계층 주거복지 사업 지속 추진

○ 주택개량(8천호) 용자 지원 및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 추진

* 농어촌뉴타운 조성(총 5개소) : 기반공사 완료 및 주택건축 착수('11년)

○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재 감축을 위한 부처 연계사업 추진

- 농식품부 :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대상에 주택개량 용자 우선 지원

- 환경부 : 슬레이트 종합대책 수립 및 처리비 지원

* '11년 슬레이트 지원사업 2,500동(28억원)을 농어촌에 우선 배정

○ 시민단체·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추진하는 농어촌 집 고쳐주기 사업을 민관협력 복지사업의 모델로 활성화

* 농어촌 집 고쳐주기 추진계획 : ('08) 38가구 → ('10) 165 → ('11) 230

3 농어가 경영안정장치 확충

◇ 재해·경영·작업위험의 효과적 대응을 위한 재해보험 등 지원체계를 확대·정비하여 농어가 경영안정 도모

□ 농어업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시행지역 확대

○ 농어업 재해보험의 대상품목 확대(41개 → 50)

* '11대상 품목(50개) : (농작물) 30품목, (가축) 15축종, (양식수산물) 5어종

○ 시범품목의 시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콩, 양파 등 5개 품목)

○ 시설보험(비닐하우스) 대상 확대(連桐 추가), 시범품목('10 : 4품목 → '11 : 8) 및 사업지역('10 : 11시군 → '11 : 20) 확대

□ 보장재해 및 보장수준 확대 등 상품개선으로 위험관리 내실화

○ 과수품목은 특정재해 보장방식에서 종합위험 보장방식으로 연차적으로 전환, 보험기간 연장 및 자기부담비율 다양화

* 추위에 약한 2개 품목(복숭아, 포도)부터 종합위험방식으로 전환('11)

* (기간연장) 발아기~수확기 → 연중 / (자기부담비율) : 20~30% → 15%형 추가

○ 양식수산물재해보험(조피볼락)은 가두리양식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을 주 계약으로 하는 등 계약방법 개선(5월)

□ 자산매각을 통한 부채상환 등 농어가의 자구노력 중점 지원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을 통한 경영위기 농가의 상시지원 체제 구축·운영('11 : 2,400억원)

- 일시적 경영위기에 빠진 농어가의 기존 채무를 장기 저리 자금으로 대체하는 **농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규모 확대**

* 지원규모 : ('10) 600억원 → ('11) 700 (3%, 3년 거치 7년 분할)

□ **농어업인 재해공제 활성화를 위해 보상수준 및 가입대상 확대**

- **농업인 재해공제 보상수준을 산재보험 수준으로 지속 확대**

* 사망시 공제금(백만원) : ('10) 40~60 → ('11) 50~70 → ('14) 100

- **어업인 재해공제 가입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하고, 지역별·가입자별 특성을 고려한 보험의 보장범위 개선**

- 어업에 상시 종사하지 않는 배우자를 재해보험 가입대상에 포함
- 보장기준이 되는 재해의 범위를 현실성 있게 개선 추진

* 경운기, 트랙터 등으로 갯벌 내에서 이동 중 사고에 대해서도 재해보장

□ **농작업 재해경감을 위한 장비·기계 개발 및 교육 강화**

- **농작업 편이장비 및 보호장비(포도가지 유인기 등 3종) 개발 보급**

* 농작업 안전모델마을 조성(40개소),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143개소)

- **농작업 안전관리지침 및 체험 프로그램(포도, 고추, 참외) 개발**

- **농용트랙터용 블랙박스(도난방지 및 구조신호 전송장치 통합형) 개발**

* 사고검출 및 기록, 시동방지, 위치추적, 긴급호출 등

- **농기계 작업 사고, 교통사고의 현황분석 및 교육자료 제작·보급**

4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가 향토자원 산업화

◇ 부처간 협력에 의한 체계적 지원 및 창업여건 개선 등을 통해 향토자원 발굴 및 산업화 촉진

□ 특화된 지역 농산물, 경관, 전설 등 농어촌 유·무형 향토자원을 산업화하고, 융·복합화를 통한 산업 다변화 추진

- * 충북 영동 : 와인 생산 및 포도와 와인을 접목한 관광상품(와인트레인) 개발
- 와인트레인 내방객수 : ('07) 8,750명 → ('09) 10,475(영동군 인구 : 50,918)

□ 향토산업 관련 부처·기관간 연계·협력으로 정책 시너지 제고

○ 농식품부·지경부 MOU(1월)를 기반으로 공동지원단 구성, 기획부터 평가까지 일관된 지원체계 운영 및 투자효율성 제고

- MOU 체결을 계기로 향토산업 관련 부처간 연계·협력 강화

- * 향토자원 발굴(농진청) — 가공·마케팅 등 산업화(농식품부) — R&D(지경부) — 지식재산권화(특허청) — 향토자원 DB구축(행안부)

○ 시·군·상공인단체·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농어촌자원산업화 TF를 운영하고, 대학 테크노파크 등과 연계 협력 강화

□ 창업보육·수요창출 지원 등 신규 창업 및 마케팅 여건 개선

○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시제품 생산·품질개선·기술교육 및 보급 등 '농가단위 창업보육지원센터'로 육성

- * 창업보육 지원센터 : ('10) 4개소 → ('11) 8 → ('12) 12

○ '바이어의 날' 운영 등 농어촌산업박람회(6월)를 향토산업 제품의 최대·최고의 전시장으로 발전, 안정적 판로 확보 지원

나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및 도농교류 저변 확대

◇ 농어촌 관광 인프라 확충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도시학생의 농어촌 체험기회 확대

○ 농어촌 체험관광 900만명 방문 목표로 추진('10년 774만명)

□ 지역의 자연 생태자원, 음식,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 특색있는 관광 인프라 확충

○ 기존 체험마을과 연계할 수 있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거점 지역에 향토음식, 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 한우 테마 불고기팜(울주군), 정원생태공원(합천군) 등 11개 지구 신규 조성 착수

○ 방앗간, 마을서원, 폐교 등 문화자원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농어촌 관광문화 공간 조성

* 6개 시·군(횡성, 옥천, 서산, 완주, 의성, 서귀포) 대상 시범 조성('09~'11)

□ 농어촌 대표 관광명소를 발굴하여 상품화하고, 서비스 수준 향상 및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 관광명소 및 관광자원의 스토리텔링화 및 맞춤형 여행코스 개발 등을 통한 여행상품 개발 및 마케팅 강화

* G-20 연계 Rural-20(대표명소 20곳) 선정 및 여행상품 개발 경험 확산 추진

○ 문화부, 문화예술위원회, 농협, 희망재단 등 관련부처 및 기관과 협력, 잠재 전통문화 가치 발굴 및 새로운 관광자원화

- 농어촌 문화예술공연·문화교실 지원, 청소년 문화체험 등 추진

- 농어촌체험마을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관리체계 개편
 - 마을의 체험휴양 시설,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수준 등을 평가하여 수준별 등급제 도입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8월, 국회 제출)
 - 5개 부처(농식품부, 행안부 등)가 조성한 체험마을(1,675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DB구축 및 통일된 사후관리 지침 마련(6월)
- 농촌체험마을 지역간 협의체를 구성, 전국 네트워크 구축
 - 경험, 지식, 아이디어, 정보 등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구성원간 협력을 통한 패키지 여행상품 개발 활성화 유도
- 1사1촌 운동이 1교1촌 등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 활동으로 발전되도록 유도하고, 도심지 학생의 농어촌체험 기회 확대
 - 농어촌 여름휴가 페스티벌, 1사1촌 우수기업 사회공헌인증 등을 통해 농어촌 마을과 결연하는 기업체 지속 확대 유도
 - * 1사1촌 결연기업 : ('09) 7.7천 개소 → ('10) 8.2천 → ('11) 8.5천
 - 농어촌 체험 및 도농교류 저변 확대를 위해 1사1촌 운동의 교과서 반영 추진(교과부 협조)
 - 도심지 학생의 농어촌 체험교육 활성화(3~12월) 및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교육 제공을 위한 '농어촌 유학' 사업 확대
 - 도심지 초등학교와 체험마을 간 결연을 통한 체험학습 운영
 - * 전국 20개 초등학교 대상, 1교당 10백만원 지원
 - 농어촌 유학 지원사업 확대, 유학 운영자 교육 및 운영매뉴얼 제작, 대도시 학부모 홍보 추진
 - * ('10) 3개소 → ('11) 5개소

다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 공공성과 기업성이 조화된 공동체 활성화(1,100개소)를 통해 지역문제의 자율적 해결, 일자리 창출 및 소득향상 도모

□ 지역의 활력 증진을 위한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 농어촌 공동체회사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교육 등 강화

- 우수사례 발굴·보급, 안내책자 발간, 워크숍 개최 등 추진

* 양양 송천 떡마을 : 부녀자 15명, 월 평균 170만원 수준 소득

* 완주 안덕 체험마을 : 노인 15명, 월 평균 30만원 수준 소득

- 상담, 교육·컨설팅 알선, 모니터링 등을 위한 지원센터 개설(2월)

* 수시로 농촌 공동체회사의 애로사항을 청취, 제도개선 추진

○ 지역발전 기여도, 주민참여 정도 등을 심사, 공동체회사 사업 중 우수사업을 선정(54개소, 3월)하여 지원(개소당 50백만원)

○ 고용노동부와 협력, 농어촌 분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지원

* MOU체결('10.10), 모델발굴을 위한 전문가 TF 구성·운영 중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를 어촌 변화의 선도적 중심체로 육성

○ 소득창출 등 공동체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방안 마련(1월)

- 사업 다각화 및 전문 컨설팅 지원을 통한 사업 실적이 우수한 공동체를 집중 육성('11 : 5개소 → '15 : 25)

○ 자율 희망 교육 실천으로 소수 정예인력 육성(공동체당 3~5명)

- 성공모델 공동체를 통한 국내연수 프로그램 개발 보급(1월), 교육 바우처제 도입(3월)

5 보조금 지원 방식 개편

◇ 자원배분의 효율화를 통한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

- 농어가의 유형에 따라 지원방식을 차별화하고,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집행체계 개선

□ 농어가 지원은 유형에 따라 산업적 지원과 복지 지원으로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

○ 농어가 경영체의 규모에 따라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전환

- 대규모 농가 : 보조지원 단계적 폐지 및 장기저리 융자
- 소규모 농가 : 직접 지불금 및 복지지원 확대

* 복지 지원 : 저소득자 중심, 기초생활 유지를 위한 지원

□ 농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분야에 투자 확대

○ 성장동력, 위험관리, R&D, 비즈니스 모델개발 분야 등

□ 농가소득안정직불 도상연습을 거쳐 예상 문제점 보완

○ 농가소득안정직불 2차 도상연습 실시(5~10월)

* 도상연습 대상지역 · 품목 확대 : ('10) 9개소, 9개 품목 → ('11) 18, 18

□ 정책자금의 투명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집행 · 관리체계 개선

○ 농수산사업 정보시스템(AgriX)의 기능 확대 및 개선

- 수산분야 및 미 구축사업에 대한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타 부처 등의 정보 시스템과 연계체계 강화

○ 농어업경영체의 사업성 평가에 따라 신용이용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금융시스템 개선방안 검토

6 민간투자 활성화

가 농식품 모태펀드 내실화

◇ 민·관 합작투자 형태의 모태펀드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규모화 및 경쟁력 제고

○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조합을 10개로 확대('10년 : 5개, '11년 : 5개)

□ 대출위주의 농업금융시스템에서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비즈니스형 금융지원방식 확대

○ 중소형규모 농식품경영체 투자를 통한 산업기반 육성과 연관 산업간 수직계열화 및 수평조직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5개를 추가로 결성하여 다양한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 추진('11 : 500억원)

○ 투자분야는 농림축산업, 수산업, 식품산업, 프로젝트사업으로 구분

○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출자 비율 및 규모 등 설정

* '11년 '농식품모태펀드' 운용계획 수립(1월),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3월), 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 선정(4월) 및 투자조합 결성(7월)

□ 농식품분야 투자대상 지속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민간 투자 기반을 조성하여 투자 활성화 도모

○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로드쇼'(5월) 및 '지역 순회 설명회'(연중) 추진

- 우수 농식품경영체 발굴 및 투자정보 제공, 투자지원 네트워크(D/B) 구축

○ 농식품경영체를 대상으로 투자기획, 재무, 마케팅 등 사업운영 능력 배양을 위한 온·오프라인 교육 지원 실시

* 농림수산식품경영체 교육을 위한 온라인 학습 콘텐츠 개발 및 운영

나 새만금 등 간척지 활용 강화

◇ 간척지의 계획적 활용을 통해 첨단 선진농업 구현

- 새만금 지역은 복합영농단지 및 관광명소로 개발

□ 간척지를 수도작 중심에서 벗어나 첨단원예, 생명산업 등 미래 농업 및 수출전문단지로 조성

- 미처분 간척지(34천ha)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과 안정성을 갖춘 활용방안 마련(3월)

- 매각, 소규모 단기(5년) 임대 → 대규모 장기(최대 30년) 임대 등 검토

- 공구별 용도별 면적 배분 등의 절차 및 관리 규정 구체화

* 농어촌정비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개정(하반기)

□ 대규모농어업회사, 유리온실 등 첨단농업단지 조성 지속 추진

- 영산강지구 잔여부지(103ha) 활용을 위한 대규모농어업회사 사업자 지정

* 사업설명회(1월), 사업자 평가 및 선정(상반기)

- 첨단유리온실은 시범사업(화옹지구, '11년 하반기 준공)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조성

□ 새만금 지역을 수출형 복합농업단지 및 관광명소로 조성

- 시설원예, 축산 등 다원적 활용 용도를 고려하여 방수제, 도로 등 기반조성 및 내부개발 추진('11~'20)

- 방조제 다기능부지(195ha)는 민간의 창의적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 개발

* 사업협약 체결(3월), 기본·실시계획 수립(하반기)

7 협동조합 선진화

가 농협 사업구조 개편

◇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와 중앙회 신용사업의 수익성 제고를 위해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추진

- '12.3월 시행을 목표로 법령 개정 및 자산실사, 자본 확충 등을 차질 없이 준비

□ 중앙회 사업 분리 및 법인 신설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 농협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2월 임시국회)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및 중앙회 정관 등 하위법령 개정을 연말까지 완료

* 중앙회는 조합 지원·교육 등을 전담하고, 은행·보험 등 신용사업과 농축산물 판매 등의 경제사업은 각 지주회사가 담당

□ 법 개정 후 지체없이 법인 분리 등을 위한 실무 작업 진행

- 경제지주, 금융지주 등 법인 설립을 위해 자산실사, 자본금 확충방안 마련, 기존 조직 및 인력 재편계획 수립 등 준비
- 준비 과정에 농업인 입장이 반영되도록 정부, 농업인단체,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업구조개편 준비위원회 운영

□ 원활한 사업구조 개편을 위해 재정·세제 등 정부 지원 강구

-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농협 자체 조달계획에 기초하여 정부의 부족 자본금 지원계획을 수립('12년 예산안에 반영)
- 취·등록세 등 사업 분리, 법인 신설에 따른 조세 부담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 신설법인 출범 전 완료

나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 “판매중심 농협” 구현을 목표로 농협 경제사업 개편 추진

-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농협이 책임지고 판매하는 구조 정착

□ 중앙회를 전국단위 판매조직 중심으로 전면 개편

- 원예, 양곡, 축산 관련 지원 부서를 원예판매본부, 양곡판매본부, 축산판매본부 등의 품목별 사업 체제로 전환
- 경제지주 설립(12년) 후 품목별 판매자회사 신설 등 농축산물 도·소매 유통 기능을 중앙회에서 지주회사로 이관(15년 완료)

□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에 있어 농협이 적극적 역할 수행

- 전국·도 단위 품목마케팅조직 확대, 조합공동사업법인 육성 및 내실화로 산지 유통의 규모화 촉진
- 농가 조직화를 위해 회원제 공동계산조직을 집중 육성
 - * '15년까지 조합원 농가가 참여하는 공동계산조직 2천개 육성
- 농산물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농가 수취가격 안정 도모
 - 가격 등락이 심한 무, 배추, 고추, 양파 등 주요 채소류의 농협 계약 재배를 확대하고, 중앙회에 수급안정 사업단 운영

□ 중앙회 경제부문 조직 개편과 향후 투자 계획 등을 보다 구체화하여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 조합, 농업인단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하고, 경제사업 활성화위원회 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 및 평가

다 수협 경영정상화 및 경제사업 활성화

◇ 조기 경영정상화, 유통·판매사업 중심으로의 기능 전환을 통해 수협 본연의 역할인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

- 경영정상화 및 자생력 확보를 위해 지속적인 경영혁신 추진
 - 지도·경제사업 통합에 따른 경영효율 향상을 위해 직무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회의 조직·인력구조 혁신(5월)
 - * 지도·경제부문 통합으로 인사·기획 등 공통인력을 공제사업 등에 재배치
 - 부실수협(삼척, 장흥, 전남서부)은 경영목표를 미달성 시 통폐합, 부실우려 수협(39개)은 경영목표를 부여(8월)하여 경영개선 추진
- 수협 중심의 수산물 유통·가공 및 판매 역할 강화
 - 수산물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해 수산물 수매물량 확대
 - * 수매물량 : ('10) 14만톤 → ('11) 17만톤 → ('12) 20만톤
 - 가공물류센터(인천) 가동률 제고를 통해 수산식품 안전성을 강화하고, 국산 우수 수산물 대표 브랜드 “바다앓찬” 육성
 - * 가동률 제고 : ('11) 80% → ('12) 95%
-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 강화를 위한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4월)
 - 중앙회 조직을 『전국 단위 수산물 유통판매 중심』으로 재편
 - 산지 수산물 전국 판매조직망, 소비지 직거래 기반 조성, 중앙회와 조합간 연합 판매 및 구매사업 전개 등
 - 일선수협의 위판장을 『위생품질관리형 산지시장』으로 개편
 - 조합간 유통체인화를 통한 공동 수산물 판매 및 상품 공급 등

8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역량 강화

◇ 기능·업무 점검을 통한 농식품부 및 유관기관 조직·기능 개편으로 정책 효율성 제고

- 최근 구제역 등 현안에 대한 대응 미흡으로 농정 관련 조직·인력의 업무 효율성에 대한 비판 제기
 - 28개 유관기관 및 지자체(약 112천명)에서 농식품 분야 정책 기능 수행
 - * 유관기관 현황(28개 기관, 103,627명) : 외청(농진청·산림청, 3,448명), 소속기관(11개관, 4,188명), 공공기관(9개, 6,879명), 연구기관(3개, 370명), 생산자단체(3개, 88,742명)
 - * 지자체(8,205명) : 농업기술원(1,324명), 농업기술센터(6,881), 수산사무소(311)
 - 농식품부의 총괄·조정기능 및 소통 미흡으로 유관기관 간 중복·유사업무 추진 등의 문제 발생
- 농정기관의 조직·업무 점검을 통한 개선 추진
 - 비효율적인 업무 추진 상황, 잠재적 위험요소 발굴, 조직·인력의 중복 여부 등을 점검(1월)
 - 점검 결과를 토대로 농정 효율화를 위한 중복·유사 기능 개선,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2월)
- 농식품부와 농정기관을 보다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조직으로 개편
 - 개선 방안의 추진을 통해 농정조직의 위기관리 능력 제고, 미래성장 동력 확충 등 중점 추진

IV. 과제별 주요 일정

[1] 농어업 분야 위험관리 강화

1. 가축질병 대응 강화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공항만 출입국관리 강화	1월 ~
	▪ 지자체 가축방역관 교육 실시	4월 ~
	▪ 종축 분산사업소 신축 추진	1~12월
1분기	▪ 축산법 개정법률안 마련	1~2월
	▪ 양돈장 고유번호 표시 의무화 시범 운영	1~6월
	▪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및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	1~3월
2분기	▪ 축산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4월
	▪ 가축전염병예방법 하위법령 개정	4~6월
3분기	▪ 개정법률안 법제처 제출	8월
	▪ 양돈장 고유번호 표시 의무화 전면 시행	8월
4분기	▪ 축산법 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10월

2. 농수산물 가격 불안 해소

	실천과제	세부일정
1분기	▪ 채소류 계약재배 제도 개선	1월
	▪ 농안법 개정안 입안	3월
2분기	▪ 정례 직거래장터 확대 세부계획 마련	4월
	▪ 기상변화 시나리오 별 생산예측 모형 개발	5월
	▪ 가격안정대 및 위기관리 매뉴얼 마련	5월
	▪ 산지유통 시설자금 지원체계 개선	6월
3분기	▪ 불공정거래 대응 생산자 교육	7월
4분기	▪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 확대(1,000개교)	10월
	▪ 농산물 공정거래 협의회 추진	7·12월

3. 쌀 수급안정 및 가공산업 발전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쌀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R&D사업 추진	2~12월
	▪ 농기계 임대사업 및 은행사업 통합모델 발굴	5~11월
	▪ 농기계 임대사업 추가설치(25개소)	3~12월
	▪ 쌀 조기관세화 논의	2~9월
1분기	▪ 중장기 발작물 산업육성방안 마련	3월
2분기	▪ 쌀 가공산업 종합대전 개최	5월
	▪ 2015년도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6월
3분기	▪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 약정이행 사항 점검	7~9월
4분기	▪ 쌀 등급표시 의무화 제도시행	11월
	▪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비 지급(1,200억원)	12월

4. 재해 등 위험관리 강화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종합재난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4~12월
	▪ 대규모 재해발생시 특별용자 및 용자상환연기 지원	1~12월
	▪ 어선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1~12월
1분기	▪ 종합재난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	3월
2분기	▪ 저수지 및 배수장 재해대비 비상대처 현장훈련	4~6월
	▪ 농어업재해대책법(일조부족, 폭염, 야생동물) 개정	6월
3분기	▪ 재해복구비 지원단가 개정 고시	8월
	▪ 시설원예품질개선, 축사시설현대화, 원예특작 내재해형 규격 준수 등 현장점검	8~9월
	▪ (가칭)노후어선의 안전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	9월
4분기	▪ 농촌용수 종합정보시스템 유지관리계획 수립	12월
	▪ 재해보험과 재해복구 정책 통합관리방안 마련	12월

5.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에너지 절감, 지열난방 보급, 가축분뇨 사업 등 점검	5~11월
	▪ (산림청)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및 펠릿제조시설 설치	연중
	▪ (농진청)농업기상정보 웹서비스 실시 : 월 3회	5~12월
	▪ (농진청)재배지 변동 예측모형 분석	
1분기	▪ 에너지 절감시설 부실시공 방지방안 마련	1월
	▪ 지열 냉·난방시설 지원대상 확대	1월
	▪ (농진청)재배안전지대 설정을 위한 자료분석(원예)	1~3월
2분기	▪ 온실가스 배출통계 산정시스템 재정비	~6월
	▪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에 대한 4단계 컨설팅 추진	6월
	▪ (농진청)'09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6월
	▪ (산림청)산림탄소상쇄제도 시범운영 참여기업 다변화	6월
3분기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목표설정 방안 연구	~8월
	▪ (농진청)재배안전지대 설정을 위한 전자지도 분석 및 보완	8~10월
4분기	▪ 한중일 해파리 국제워크숍 개최	10월
	▪ 면세유 공급 차등화 등 합리적 방안 마련	11월
	▪ (농진청)재배안전지대 설정을 위한 전자지도 작성 완료 및 배부	11~12월

6. 농식품 안전·품질 관리 강화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녹색 식생활 교육 실시	연중
	▪ 소비자교육·소비촉진 홍보	
	▪ GAP 시설 확충	

1분기	· 광역단지 및 농업지구 사업자 선정	1월
	· 정착성 수산동식물 생산해역의 등급설정기준 고시 공포	1월
	·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 개선 협의체 구성	2월
	· '11년 친환경안전축산직접지불제사업 대상자 선정	2월
2분기	· 양식장 HACCP 지원사업 현장점검	6월
	· 국가 농식품 인증제도 개편 세부실천계획 수립	6월
	· (농진청)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농업 전문위원회 개최	6월
3분기	· 축산 항생제 사료첨가 금지	7월
	· 검역선진화 방안 수립	9월
4분기	· 농업환경 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12월
	· 친환경농산물 종합정보DB 구축	12월
	· 동물복지 돼지 농장 인증기준 초안 마련	12월

[2] 성장동력 확충

1. 농식품 R&D 개편

	실천과제	세부일정
1분기	· 농식품부 R&D 기획단 확대 개편	3월
2분기	· 성과관리종합계획 수립	6월
4분기	· 민간생산대행조직 육성	12월
	· 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정비	12월
	· 농림수산식품 R&D 총괄조정체계 확립	12월

2.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농식품 수출 확대	연중
	· 식품R&D 및 식품외식전문인력 육성	연중
1분기	· 우리술 품질인증제 시행	1월
	· 농어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 창업 매뉴얼 보급	1월
	· 식품기자재 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3월
2분기	· 플래그쉽 한식당 설립계획 마련	4월
	· SIAL CHINA 2011 참가	5월
4분기	· 「식품산업진흥지원센터」 시범 운영	10월
	· 외식산업진흥대책 마련	11월
	·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개발계획 수립	12월

3. 국제곡물 가격상승 대응 및 해외 농림어업 개발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국제곡물정보분석 협의회 개최	격월 1회
	▪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한 곡물가 동향 분석	매월 1회
	▪ 농림수산자원 협력·개발 대상국 확대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확대	
	▪ 솔로몬군도 어항개발사업 타당성조사 추진	10.12~11.10
1분기	▪ 한일 어업공동위원회 개최	2월
	▪ IOTC(인도양참치위원회) 연례회의	3월
	▪ (농진청)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 총회	3월
	▪ (산림청)감보디아 제공 조림대상지 사전환경조사	3월
2분기	▪ (농진청)신규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설치	4~5월
	▪ 곡물 현지법인 설립(미국) 및 유통시설(EL) 확보	2분기 중
	▪ 농림수산분야 ODA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2분기 중
	▪ (농진청)AFACI 집행이사회 개최	4월
	▪ 해외농업개발 사업자 상반기 모집 및 사업계획 수립	2분기 중
	▪ (산림청)아시아산림협력기구 프로그램사무국 설치 협의·운영	2분기 중
3분기	▪ 곡물 계약재배 및 현물 매입	3분기 중
	▪ 한중 어업공동위원회 개최	9월
4분기	▪ 해외곡물(콩, 옥수수) 도입	4분기 중
	▪ 필리핀 MIC 사업 착수	4분기 중
	▪ 국제연합 사막화방지협약(UNCCD) 총회	10.10~21
	▪ CCSBT(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연례회의	10월
	▪ ICCAT(대서양참치보존위원회) 연례회의	11월
	▪ 한러 어업협상	12월
	▪ WCPFC(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 연례회의	12월

4.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하위 법령 제정	연중
	▪ 해외신어장 개발	연중
	▪ 국제수산기구 규제사항을 반영한 국내 고시개정	연중
1분기	▪ 수산자원사업단 출범식	1월
	▪ 관상어산업 육성대책 마련	2월
2분기	▪ 원양산업총조사 착수	4월
	▪ 지자체 권한이양 관련 제도개선(안) 마련	6월
	▪ 어장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안 마련	6월
3분기	▪ 여수바다목장 준공식	8월
	▪ 갯벌참굴·해삼 중간육성장 등 적지선정 매뉴얼 마련	7~9월
4분기	▪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	10월
	▪ 바다숲, 바다목장 사업 최종 보고회	12월
	▪ 외해양식 면허처분(5건)	12월

5. 종자·생명산업 육성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 「종자산업 육성법」 및 「신품종보호법」 제·개정	1~12월
	▪ 생명자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1~12월
	▪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추진	1~12월
1분기	▪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1월
	▪ 종돈개량 네트워크 추진위원회 구축	1~2월
2분기	▪ 농업유전자원 다양성 확보 계획 수립(농진청)	4월
	▪ 방사선 육종연구센터 사업자 선정	5월
3분기	▪ 통합 돼지·AI 센터 구축 운영(1개소)	7월
4분기	▪ 생명산업대전 개최	11월
	▪ 도시농업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11월
	▪ 종자산업육성법(안) 및 신품종보호법(안) 국회 제출	11월

6. FTA/DDA 협상 대응

	실천과제	세부일정
1분기	▪ 축산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1월
	▪ DDA 세부원칙 잔여쟁점, 수정 세부원칙 마련 협상 대응	1.17일부터 협상재개
	▪ 한·EU FTA 대책 지역별 순회 설명회	1~2월
	▪ 양돈장 고유번호 표시 의무화 시범 운영	1~6월
	▪ 수산 보조금 협정(안)에 우리 제안인 금지보조금 최소화 반영 노력	27일부터 협상재개
	▪ 축산물등급판정 세부기준 고시안 마련	3월
2분기	▪ FTA 피해보전 제도개선관련 FTA특별법 하위법령 개정	6월
	▪ FTA 피해보전제도 품목별 사업지침 작성	6월
	▪ 돼지 및 소 도체 등급기준 개선안 시행	6월
	▪ 농장별 고유번호 표시기 사용실태 점검,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6월
	▪ 사료제조업체 종사자, 자치단체 공무원, 농업인 교육	6월
3분기	▪ 쇠고기 육질등급 표시방법 개선 시행	7월
	▪ 양돈장 고유번호 표시 의무화 전면 시행	7월
4분기	▪ 사료제조업체 종사자, 자치단체 공무원,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시 사료내 항생제 첨가금지 사항 홍보	10~11월
	▪ 농장단위 이력관리제 전환을 위한 관리체계 확립	12월

[3] 농어촌 지역 활성화

1. 인력육성 및 귀농·귀촌 활성화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계인력 양성 교육 기반 마련 및 농업교육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공모 및 운영(12월) - 농대생 영농정착교육, 농고생 현장훈련, 수산계 고교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12월)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법인단위 중심의 컨설팅 비중 확대 	연중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후계농업인 지원방식 개선 및 후계어업인 대상 확대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수산업인턴 전담운영기관 지정 	2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빈집정보 제공을 위해 민간 시스템과 연계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습장 등 교육기관 추가지정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 전문경영인력(전문 CEO)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마련 	6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귀어 교육프로그램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개설(6월) - 귀농·귀어 교육 프로그램 확대(9월)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귀어 지자체별 전담창구 구성 	9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목별 교육 프로그램 세분화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귀농·귀어인 영농·영어자금 지원(연중) 	12월

2. 농어촌 사회 안정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연금제도 시행 	연중
1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관광명소 발굴계획 수립 	2월
2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 시행계획 수립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통합형 지역개발 모형 보급 	6월
3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집고쳐주기 	7~11월
4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 정도 평가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촌 영향평가 실시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하반기 심층평가 	12월

3. 농어가 경영안정장치 확충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및 농수산경영회생자금 지원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어업재해보험(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 시범사업(18 품목) 포함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진청)농작업 편이장비 및 농기계 안전장치 개발 	연중

1분기	▪ 농어업인재해공제 보상수준 및 가입대상 확대 추진	1월
	▪ 양식재해보험(전복) 시범사업 확대	1월
	▪ (농진청)농기계 농작업 사고조사 사업설계	1~3월
	▪ (농진청)농작업 편이장비 및 농기계 안전장치 개발 사업설계	1~3월
	▪ 농작물재해보험 본사업 추진	2~3월
2분기	▪ (농진청)농기계 농작업 사고 예비조사	4~6월
	▪ (농진청)농작업 편이장비 및 농기계 안전장치 제작	4~6월
	▪ 양식재해보험(조피볼락) 시범사업 추진	5월
3분기	▪ (농진청)농기계 농작업 사고 현지조사	7~9월
	▪ (농진청)농작업 편이장비 및 농기계 안전장치 성능시험	7~9월
	▪ 양식재해보험(굴, 김) 시범사업 추진	8~9월
4분기	▪ (농진청)농기계 농작업 사고 결과분석	10~12월
	▪ (농진청)농작업 편이장비 및 농기계 안전장치 성능시험 및 보완	10~12월

4.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실천과제	세부일정
1분기	▪ 농식품부·지경부 MOU 체결 및 공동기획단 등 구성	1월
	▪ 자율관리어업공동체 발전방안 마련	1월
2분기	▪ 농어촌산업박람회 개최	6월
3분기	▪ 농어촌여름휴가페스티벌 개최	7월
4분기	▪ 농어촌 공동체회사 실태조사 및 평가	12월

5. 보조금 지원 방식 개편

	실천과제	세부일정
1분기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개발사업 계획 수립 (개발대상 사업 선정 등)	2월
2분기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개발사업자 선정 및 개발	4~11월
	▪ 보조금 지원의 기본원칙에 따른 예산 편성('12년 본예산)	6월
	▪ 농가소득안정직불 2차 도상연습	5~10월
4분기	▪ 농가소득안정직불 2차 도상연습 결과 분석·보고	12월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 개발 및 테스트	4~12월

6. 민간투자 활성화

	실천과제	세부일정
1분기	▪ 농식품모태펀드 '11년도 출자금 운용계획 공고	3월
	▪ 간척지 활용 기본방안 마련	3월
2분기	▪ 농식품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 선정	4월
	▪ 농식품모태펀드 투자로드쇼	5월
3분기	▪ 농식품투자조합 결성	7월
4분기	▪ 모태펀드 지역순회 설명회(2회)	10월
	▪ 첨단유리온실 시범사업 준공	12월
	▪ 새만금방조제 다기능부지 개발계획 수립	12월

7. 협동조합 선진화 및 경제사업 활성화

	실천과제	세부일정
연 중	▪ 농협 사업구조개편준비위원회 운영	연중
	▪ 부실 일선수협 경영정상화 추진	연중
1분기	▪ 사업구조 개편 농협법 개정안 국회통과 추진	2월
2분기	▪ 농협중앙회 자산실사	4월
	▪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	4월
	▪ 농협중앙회 경제사업활성화계획 수립	5월
	▪ 수협중앙회 조직·인력구조 개편 추진	5월
	▪ 농협중앙회 자체 자본조달계획 마련	6월
3분기	▪ '11년도 일선수협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	7월
	▪ 농협 신설법인 등에 대한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등 반영 협의	8월
	▪ 농협중앙회 자본지원 관계부처 협의 및 자본지원 계획서 마련	9월
4분기	▪ 농협법 개정 관련 하위법령 및 중앙회 정관 개정 완료	12월
	▪ 부실(우려)수협 적시지정조치 이행사항 점검	12월

8. 효율적 정책 추진을 위한 조직 역량 강화

	실천과제	세부일정
1분기	▪ 유관기관 기능·업무 점검	1월
	▪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2월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① 농어업 경영혁신·비용절감		
가. 총체적 비용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품목 경영비 분석 연구용역(5월) ○ 주요 품목별 비용절감 대책 마련(6월) ○ 비용절감 우수사례 공모 및 홍보(7~10월) ○ 전국 대표 실습장과 비용절감 운동 추진(8개소) 	완 료
나. 비용절감운동본부 및 농어업 경영 혁신단 설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수산분야 비용절감운동본부 구성(3.26) ○ 농업분야 경영혁신단 구성(5.12) ○ 경영혁신단원 워크숍(6월) 개최 및 경영 컨설팅 지원(연중) 	완 료
다. 2010년 경영비 절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분야 생산비용 절감 T/F 구성(1.21) ○ 축종별 생산비용 절감 과제(42개) 도출 ○ 맞춤형비료 비용절감 교육 홍보 및 공급 ○ 축종별 비용절감 전국 토론회(6~9월) ○ 생산비용 절감 우수사례집 배포(10월) 	완 료
② 농어업 에너지 절감		
가.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 에너지 보급 추진		
(1) 농어업용 에너지 이용 효율화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너지 이용 효율화 사업대상자 지원 (2,287농가) ○ 시설원에 품질개선 사업대상자 지원(41개) ○ 목재펠릿 난방기 사업대상자 지원(308농가) ○ 지열난방 사업대상자 지원(158농가) 	완 료
(2) 농림수산식품부 및 관련기관 실천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에너지절감 대책 수립·시행(1.21) ○ 매주 수요일 아근없는 Green-day 시행(1월) ○ 에너지절약 이행실태 점검(2회) 	완 료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나. 목재펠릿 보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펠릿보일러 보급(4,000대) 추진(12월) ○ 목재펠릿 워크숍 및 지역설명회(5회) ○ 목재펠릿 품질의무 표시제 시행(7월) ○ 목재펠릿 제조시설(5개소 완료, 3개소 조성) ○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면세 추진(12월) 	완 료
③ 농어가 소득·경영 안정		
가. 직불제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보전직불제 개편방안 마련(4월) ○ 공익형 직불제 도입방안 보고(6월)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공청회 (6~7월) ○ 농가단위 소득안정제 도상연습(4~10월) 	완 료
나. 농어가의 경영회생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및 농업 경영회생자금지원 시행지침 개정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지원대상자 선정·지원(11월까지 1,783억원) ○ 농업경영회생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11월까지, 36억원) 	완 료
다. 재해대비 경영안정 장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작물재해보험 시범사업 추진(18품목) ○ '10년 적조피해 예방대책 수립(5월) ○ 농작물재해보험 시설관련 시범사업(8월) ○ 광역 및 연안 적조예찰(8~9월) 	완 료
라.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기계 임대사업소 추가 설치(61개소) ○ 벼농사용 임대사업 발대식(3월) ○ 농작업 대행, 신규 농기계 공급상태 점검(10월) 	완 료
④ 농식품 수급안정 및 유통구조 개혁		
가. 농식품 수급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안정 대책반 구성(1월) 및 점검(연중) ○ 선행관측모형 개발 및 조기에보시스템 구축 ○ TRQ종합수급관리계획 수립·운영(2월) ○ 월동작물 계약재배 추진(10월, 358천톤) ○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 수립(12월) 	완 료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나. 유통구조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지유통 사업체계 개편(6월) ○ 사이버거래소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 조달시스템 구축(참여학교 250개교)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대책 마련(12월) 	완 료
5 녹색성장 및 농식품 R&D 혁신		
가. 저탄소 녹색산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사업 추진(17개소) ○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추진(2개소) ○ 녹색인증제 도입 및 인증평가 기관 지정 	완 료
나. 농식품 R&D 효율성·투명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D사업 심층평가제 시행(2월) ○ R&D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4월) ○ 품목별 기술협의회 시범운영(5월) ○ R&D 통합 DB 구축(12월) 	완 료
6 종자·생명산업 육성		
가. 종자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 R&D 추진계획 수립·시행(1월) ○ 육종특화대학 지정(7월) 및 육종기술 지원센터 설립·운영(4월) ○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 방안 마련(12월) ○ '10년 유전자원 증식사업(32천점) 추진 	완 료
나. 종축·수산종묘 산업		
(1) 종축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암소검정사업 대상자 선정(15개소) ○ 종축장 종합평가 및 우수종축장 인증 - 종돈장(10개소), 종계장(7개소) ○ 검정우사 신축(200두) 추진(12월 착공) ○ 한우 당대검정 확대(250두) 및 보증 씨수소 선발(20두) 	추진 중
(2) 수산종묘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자산업법(수산종묘) 하위법령 개정 ○ 육종 넙치·전복 현장효율 실험 ○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계통주 확보 ○ 수산관상생물 생산 핵심기술개발 연구 	완 료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다. 동·식물 자원의 산업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곤충산업육성법 제정(2.4) 및 시행(8.5) ○ 생명자원 통합 DB 구축 기본계획 수립(7월) ○ 생명산업 2020+ 발전전략(안) 수립(9월) ○ 곤충산업 육성 종합계획(안) 수립(9월) 	완 료
7 농정추진체계 개편		
가. 협동조합 개혁		
(1) 농협 개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협법 개정안 국회 상임위 상정(2월) 및 설명·홍보(1~12월) ○ 농협법 개정안 국회 심의 대응(연중) ○ 농협 사업구조개편 관련 정부 지원 방안 관계부처 협의 	추진중
(2) 수협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수협운동“ 추진 방안 마련(3월) ○ 부실수협 구조조정 추진(흑산도수협) ○ 일선수협 경영평가 추진(5~7월) ○ 수협법 및 하위법령 개정 시행(10월) 	완 료
(3) 산림조합의 건전한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실조합 정상화 추진을 위한 재무실사(3월) ○ 부실조합 구조개선 계획수립 추진(4월) ○ 부실조합에 대한 경영개선 이행 방안 마련(6월) 	완 료
나. 창조적인 경영주체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업교육 기본계획 수립(2월) ○ 농어업교육 및 컨설팅 실시(4월) ○ '10년 후계농업인 선정(341명) ○ 가업승계 농어업인 선발 및 지원(7월) 	완 료
다. 귀농·귀어대책 본격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농·귀촌 종합센터 운영으로 정보 제공 ○ 귀농·귀촌 사업지침 마련, 자금지원 ○ 귀농·귀촌 교육 운영체계 구축(3월) ○ 빈집정보 제공 등 생활공감정책 추진 	완 료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라. 농지·산지관리 선진화		
(1) 농지 이용 효율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매입·비축사업 추진(연중) ○ 농지연금상품 모형 설계 및 운영시스템 구축 ○ 영농여건불리농지 지정·고시(11~12월) 	완 료
(2) 산지 제도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익용산지 중복규제 완화 등을 위한 산지 관리법 개정(6월) 	완 료
마. 농정 거버넌스 선진화 및 농어가 고충해소		
(1) 농정거버넌스 선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정협의체 설립 방안 협의·토론(4회) ○ 시군단위 농어업회의소 3곳 선정(12월) ○ 전국단위 농정협의체 구성 방안 마련(12월) 	완 료
(2) 농어업인 불만처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객만족위원회 구성(4월) ○ 민원콜센터 확대 개편 및 인력채용(6월) ○ 통합콜관리 시스템 구축(6월) 	완 료
⑧ 수산업 재도약 기반 구축		
가. 수산업 재도약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안어업 제도개선” 연구용역(5~10월) ○ 외해양식어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1월) ○ 수산자원조성전문법인 ‘수산자원사업단’ 설립(11월) ○ 농수산 모태펀드를 활용, 선박금융 조성(추진중) 	추진 중
⑨ DDA/FTA 대응		
가. DDA 협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허표, SSM·관세단순화 등 이슈별 대응 ○ 민감품목 소비량데이터 검증회의 대응 ○ 수산보조금 금지범위 최소화 노력 	완 료
나. FTA 협상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아세안, 한·호주 등 FTA 협상 추진(연중) ○ 한·콜롬비아 FTA 협상 대응(4회) ○ 한·호주 FTA 협상 대응(4회) ○ 한·페루 FTA 협상타결(8월) 	완 료
다. 한-EU FTA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EU FTA 정식서명(10.6) 후 후속조치 추진중 ○ 한-EU FTA 대책 발표(11월) ○ 한-EU FTA 국회 비준 대응 	완 료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10 친환경 안전 농식품 공급		
가. 친환경 농어업기반 확충		
(1) 친환경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친환경유통센터 개장(3.4) ○ 맞춤형 비료 공급(502천톤) 및 홍보 ○ 친환경 농업 연구센터 준공(전남대, 8월) ○ 친환경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착공(12월) 	완 료
(2) 친환경 어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다목장 및 바다숲 조성(250ha/10개소) ○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 방안 마련(3월) ○ 생산해역위생관리기준 고시(안) 마련(12월) ○ ‘어장관리법’ 개정은 어촌어항법과 통합추진 	추진 중
나. 농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축산물 취급업소 위생교육 및 홍보(연중) ○ 항생제 사료첨가 금지 고시안 개정(12월) ○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 HACCP 적용확대 ○ 식품안전교육자료 발간(9월) 	완 료
다. 수입농수산물 관리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시스템 구축(2월) ○ 수입위험평가 교육기관 선정 및 교육(7월)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8월) ○ 주요 수산물 교역국 대상 위생점검 실시 	완 료
라. 가축·수산 질병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중(1월~) ○ 구제역·AI 매몰지 관리실태 점검(6월, 10월) ○ 수산동물전염병 관리대책 수립(7월) ○ AI 방역관련 CPX 실시(9월) 	완 료
11 쌀 수급 안정 및 식량자급률 제고		
가. 중장기 쌀 수급안정 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 소득기반 다양화 방안수립(6월) ○ 쌀 관세화 논의(농업인단체 등, 연중) ○ 공공비축 미곡 매입방법 개선방안 마련(9월) ○ 쌀 수급안정 대책 대통령님 보고(8월) ○ 쌀 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 마련(12월) 	추진 중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나. 밀/밀가루 공급·유통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 해외 공급망 확보 검토(2월) ○ 밀가루 생산유통 개선방안 대통령님 보고(2월) 	완 료
다. 식량자급률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목별 식량자급률 제고방안 마련(6월) ○ 품목별 자급률 점검단 회의(8월) ○ 식량자급률 목표치 재설정 연구용역(5~11월) 	완 료
12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확대		
가. 식품산업 진흥기반 확충과 전략품목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 발족·운영(3월) ○ '세계김치연구소' 출범(3월) ○ 식품·외식 정보 D/B 구축 및 제공(5월)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시행(8월) 	완 료
나.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는 한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식재단 설립(3월) ○ 해외 한식당 협의체 구축(7월) ○ 한식 조리 특성화 학교 지정(3개교, 7월) ○ KOREA FOOD EXPO 2010 개최(11월) 	완 료
다. 녹색 식생활 교육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4월) ○ 식생활 교육 시도 순회교육(4~6월) ○ 녹색식생활 교육 홈페이지 구축(8월) ○ 녹색식생활 교육 교재 보급(9월) 	완 료
라. 농식품 수출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물류체계 개선을 위한 수출물류비 총액한도제 시행(1월) ○ 농식품 홍보 재외공관 선정(2월) ○ 수출선도조직('10까지 16개 품목 19개) 육성 ○ 농식품수출 해외물류기반 구축 기본계획 수립(6월) 	완 료
13 해외 농림어업 협력 강화		
가. 협력을 통한 상생적 자원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농업개발 사업자 선정(6개국, 7개기업) ○ 국제농업투자 가이드라인 마련(4월) ○ 한-PNA 수산고위급 회의 개최(9월) ○ 해외농업개발 전문가양성 교육(6~7월) 	완 료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나. 해외 농림수산협력 시스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로벌농림수산협력추진협의회’ 구성(2월)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농업인턴 파견(3월)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설치(계속) ○ 콩고민주공화국 농촌종합 개발사업 추진(계속) 	완 료
다. 국제사회 협력증대 및 국격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AO 등 국제기구 활동에 참여(연중) ○ OECD 기후변화 수산워크숍 개최(6월) ○ 제30차 FAO 아·태지역총회 개최(9월) 	완 료
14 농어촌 산업육성		
가. 향토지역 산업화 및 도농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원(78개지구, 330억원) ○ 노후 농공단지 실태조사(77개시군, 126개단지) ○ 농어촌 관광 인프라 조성 (체험마을 77개소, 테마공원 14개지구) ○ 농어촌 산업박람회, 여름휴가페스티벌 개최(7월) 	완 료
나. 농산어촌 체험관광 글로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ral-20 프로젝트 대상지역 20개소 선정 ○ 여행코스, 스마트폰앱 등 콘텐츠 개발·홍보 ○ 외국인 체험단 운영(7~11월, 2,300명) ○ G-20 및 FAO아태총회 참석자 대상 홍보 실시 	완 료
15 지역 공동 경영체 활성화		
가. 지역공동 경영체 육성		
(1) 마을단위 농업법인 설립·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법인 시범마을 조사(6월, 3개소) ○ 운영협의체 구성 및 MOU 체결 추진 ○ 마을법인 운영 계획 및 지원대책(역량 강화 등) 마련(12월) 	완 료
(2) 자율관리어업 확산 및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관리어업 추진계획 수립 시달(1월) ○ 자율관리어업 지도자협의회 개최(2월) ○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등급 확정(7월) ○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홍보영상물 제작(10월) ○ 자율관리어업 전국대회 개최(11월) 	완 료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3) 농어촌 공동체회사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공동체회사 시범사업 추진(3개소) ○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방안 마련(5월) ○ 실태조사, 모델 및 우수사례 발굴 ○ 부처간 협력 강화를 위해 고용노동부와 MOU체결 	완 료
16 농어촌 복지·생활여건 개선		
가. 농어촌 삶의 질 향상 정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시행계획 수립 및 '09년 실적 보고서 작성 ○ 삶의 질 향상 계획 수립 우수 사례 발굴 및 보급(7월) ○ 농어촌서비스기준 세부운영방안 수립(6월) ○ 농어촌 영향관리 가이드라인 도입방안 마련(6월) 	완 료
나. 농어촌 복지지원 및 서민생활안정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경로당 세탁·청소 등 가사도우미 지원범위 확대(1,104개소) ○ 여성농업인센터 시설개선 추진(9개소) ○ 이민여성농업인 영농교육(기초563, 1:1맞춤형636) ○ 학교우유급식 지원 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 초등학교생 추가 	완 료
다. 농어촌 통합형 지역 개발 및 정주여건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포괄보조사업 모니터링 및 컨설팅(5~7월) ○ 농어촌뉴타운 시범사업 (5개소 추진중)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지원(8천동/4천억원) ○ 농어촌 취약계층 집 고쳐주기(165가구 개량) ○ 사무장 및 마을리더 교육(25회, 735명) 	추진 중
17 농림어업 생산기반 확충		
가. 농업생산기반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 내부개발 종합실천계획 수립(1월) ○ 수리시설 일제점검 및 보강계획 수립(2월) ○ 간척지의 관리·처분계획 수립(3월) ○ 새만금 방조제공사 완공(4월) ○ 새만금 내부개발을 위한 방수제 공사 착공(7월) 	완 료
나. 농업분야 4대강 살리기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4대강 55지구, 4대강 유역 밖 16지구) 착공 	완 료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다. 어촌·어항 종합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산강 하구둑 구조개선사업 추진(연중) ○ 사방댐 등 사업 시공·준공(연중) ○ 수원함량 증진을 위한 봄·가을철 나무심기 ○ 국가어항개발 등 어촌관광 인프라 구축(연중) ○ 어촌체험마을 운영활성화 지원(사무장 교육 등) ○ 국가·지방어항 건설사업 지속 추진(연중) ○ 해외어항(솔로몬) 개발을 위한 티당성 용역 	완 료
라. 산림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도사업 계획수립 및 추진(연중) ○ 사방사업 시공(연중) ○ DMZ자생식물원 공사 착공(8월) 	완 료
18 투자촉진 및 일자리 창출		
가. 금융지원 시스템 개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관련 의견수렴(6월) ○ 농림수산사업 성과평가 실시(6월) ○ 정책자금 지원체계 개선방안 검토(12월) ○ 농림어업 관련 보조금 개편 추진(12월) 	완 료
나. 투자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식품클러스터 추진단 구성(3월) ○ 농식품모태펀드 투자로드쇼 개최(5월) ○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에이전시 지정(5월)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결성 관련 시행령(규칙) 제정·시행(5월) 	완 료
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일자리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 전략회의체 구성(2.19) ○ 일자리 전략회의 등을 거쳐 과제 발굴(~3월) ○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일자리 특위 보고(3.29) ○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방안 마련(6월) 	완 료

[별첨 1]

2011년 업무계획

= 强小農 실현을 위한 농업녹색기술 개발 보급 =

2010. 12. 27.



순서

I. 2010년 추진실적 평가	129
II. 2011년 업무추진 방향	131
III. 핵심 추진과제	132
1.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기술개발	132
2. 작지만 강한 농업(強小農) 실현을 위한 현장지원 ..	136
3. 글로벌 농업기술협력	138
IV. 세부과제 추진일정	139
<참고> 2010년 업무계획 추진실적	140

I. 2010년 추진실적 평가

1. 성과

(1)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기술개발

□ '굳지 않는 떡 제조' 원천기술 개발

- 첨가물·화학처리 없이 떡 굳음 방지(6개월 이상 저장)
- * 즉석떡국, 쌀생면, 김밥용 쌀롤, 쌀 만두피 등 다양하게 적용



<굳지 않는 떡>

□ 장기 이식용 형질전환 돼지 '믿음이'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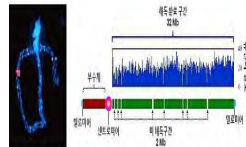
- 초급성 및 급성 면역거부반응 유전자 동시 제어 가능
- * ('09) 초급성 면역거부반응 유전자 제어 돼지 '지노' 생산



<믿음이>

□ '배추 1,2번 염색체' 세계최초 해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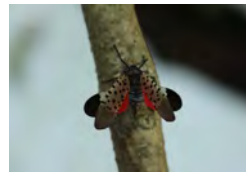
- 10개 염색체 중 가장 중요한 1,2번 염기서열 해독
- * 향후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맞춤형 배추품종 개발 가능



<배추 2번 염색체>

□ 기후변화 대응 방제약제 및 적응품종 선발

- 돌발해충 방제약제 선발 등록 및 유인방제
- * 꽃매미 : 티아메톡삼 등 10종, 미국선녀벌레 : 디노테퓨란 등 4종
- 고온에서 완전미율 감소가 낮은(△4.8%) '동안벼' 선발



<꽃매미 유인 트랩>

※ 2010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選」에 11건 선정(1위) * '09: 7건

(2)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술보급 및 애로 해소

□ 경영비 절감 및 소득화 기술 보급

- 못자리가 필요없는 벼 직파: ('08) 100ha → ('10) 6,283
- 양조용 '설갱벼' 계약재배 확대: ('09) 230ha → ('10) 370
- * ('10) 참여 294농가, 계약 370ha, 생산 2,400톤, 소득 29억원



<벼 무논 점파>

□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T.O.P 프로젝트)

- 생산매뉴얼 적용 확대(쌀, 과실, 과채 등 4,500ha)
- * 농가 자신감 향상(89%), 소득 증가(쌀 14.5%, 과수 61%)



<최고품질 쌀>

□ 농가단위 소규모 창업 지원(손맛사업, 농가맛집)

- 지역 특산물 부가가치 증진 및 농외소득 확대

* 경북의성 '지당들' : 일자리 창출(100여명), 매출액(1.5억원)



<한과창업사업장>

□ 취약분야에 대한 기술적·제도적 현장애로 해소

- '녹색기술현장지원단' 운영(복합기술민원 168건 처리)

- 농업·농촌현장 규제 및 불합리한 제도 발굴 개선

* 전직원 발굴운동(1,641건) → 75건 개선 추진(소관부처)



<녹색기술지원단>

(3) 호혜적 농업기술협력을 통한 국격제고

- '한-아시아·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운영(28개국)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확대(10개국)로 개도국 기술공여

- 외국인에 대한 영농기술 훈련(40개국, 244명)



<베트남 기술전수>

2. 반 성

□ 현장 농업인이 요구하는 기술개발 성과 미흡

- 쌀 생산 조정을 위한 벼 대체작물 개발 및 보급

- 시설채소 등의 생산비 절감 및 사료작물 자급

- 환경보전 및 안전식품 수요에 부응한 자원 순환 친환경기술 등

□ 이상기상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연구 부족

- 폭우, 폭염 등에 의한 작물 피해 방지·작황 예측기술 개발 등

□ 농자재 관리제도의 지속적 개선 부족

- 농약·비료 안전관리, 부정유통방지 관리체계 등

- 농업기계 안전관리를 위한 사후검정체계 미흡

□ 개발기술의 효과적 현장보급을 위한 중앙-지방간 업무연계 부족

- 기능적 역할분담, 인사교류, 현장지도인력 전문능력 향상

II. 2011년 업무추진 방향

“작지만 강한 농업, 꿈이 있는 농촌” 실현

전략방향

- 현장이 요구하는 ‘실용기술’ 개발 보급
- 농업부문 ‘녹색성장’ 동력 창출 및 ‘기후변화’ 대응
- 지속적·실천적 약자배려로 ‘공정사회’ 구현

<p>성장동력 창출 (R&D)</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안전관리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기술, 농식품·농자재·농작업 안전관리 ◇ 품목별 경쟁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쌀, 밭작물, 원예·특용작물, 축산물 ◇ 미래대비 녹색성장동력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소재, 생명공학, 융복합, 유전자원, 에너지, 식품 R&D ◇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실가스, 안정생산, 돌발해충 방제, 소득작물 개발
<p>强小農 육성 (기술보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경영체 역량 향상(기술보급, 소득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신기술 보급, 농촌자원 특성화 지원, 시범사업 ◇ 약자배려 현장애로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기술 현장지원단, 농촌건강장수마을 ◇ 농업인 경영마케팅 활성화 및 산업화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진단, 사례 확산, 농업기술실용화재단 ◇ 인력육성 교육 및 연구모임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즈니스 역량, 대상별 맞춤교육,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
<p>세계공헌 (국제협력) ※ G20 후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도국 기술공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륙별 농업기술 협의체 운영 ◇ 글로벌 인재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리더 파견 ◇ 해외진출 거점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맞춤형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운영

Ⅲ. 핵심 추진과제

1. 국가 신성장동력 창출 기술개발

1 | 친환경기술 확산 및 분야별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가 요구하는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 및 농작업 안전관리

친환경기술 : 자원 순환형 친환경 · 유기농업기술 확산

- 가축분뇨 자원화기술 조기 정착을 위한 현장보급 확대
* 액비성분 분석기 : ('10) 93대 → ('11) 123, 액비부숙도 측정기 : ('11) 20대
- 천적 등 화학비료·농약 절감 및 대체기술 개발
* 토양검정 활용 맞춤형비료 공급, 친환경 방제기술 실용화(천적자원·바닷물 이용 등)

농식품안전 : 농식품 안전관리 및 위해요소 관리 강화

- 농식품 중 유해물질 신속판별기술 개발 * 중금속, 유해미생물, 독소 등
- 농약·중금속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체계(GAP, HACCP) 구축
- GMO 환경 위해성 심사 강화 및 표준관리시스템 구축

농자재관리 : 품질 · 안전관리제도 개선 및 유통관리 강화

- 유기농자재 품질인증제 도입('11.7) 및 친환경비료 품질등급화 평가
- 국내사용 EU·미국 부적합 농약(158종) 재평가 : ('10) 41종 → ('11) 75
- 농기계 품질보증체계(인증·검사) 및 일괄관리시스템(등록·보험 등) 구축
- 부정·불량 농자재 유통 근절 * 판매업소 명예지도원(47명) 활용 등

재해예방 : 농업인 재해예방 “농작업 안전관리체계” 구축

- 농약살포 작업자에 대한 만성중독 및 위해성 평가기준 설정
- 농작업 안전모델마을 조성(40개소),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143개소)

벼 부산물 이용 생분해성 친환경 농자재 개발

- ◇ 왕겨, 쌀겨를 함유한 바이오 필름 특허출원('10.8)
* 경제성: 폐비닐 처리 등 일반멀칭 비닐대비 30% 절감(120만원 ↓/톤)
- ◇ 작물 및 재배조건별 분해력 · 안정성 검증 등 현장 실증('11)



<바이오필름>

2

FTA 대응 품목별 경쟁력 제고

쌀 수급안정기반 확산 및 품목별 품질 경쟁력 제고기술 개발

쌀 : 생산조정 지원 / 신수요 창출 / 부가가치 증대

- 논 이용 비 대체작물 생산기술 개발 및 현장실증 확대
 - * 논 재배 적응품종 선발(콩 등), 옥수수 논 재배 현장실증(5개시군, 20ha)
- 소비자 수요에 맞춘 용도별(밥쌀·가공·기능성) 비 품종 개발(16종)
- 식용·비식용 가공기술 및 제품 개발로 부가가치 증대

밭작물 : 자급률 제고 / 신품종 육성 / 작부체계 개발

- 밀 등 자급률이 낮은 식량작물의 확대생산기술 및 수확 후 관리체계 구축
- 콩·잡곡의 신품종 육성(장류·두부·나물용 콩) 및 건강 기능성 구명
- 고품질 조사료 전용품종 및 연중 생산을 위한 작부체계 개발

원예·특작 : 로열티 경감 / 수출확대 / 고품질·안정생산

- 신품종 개발(6품목 58종)과 보급 확대 등 로열티 경감
 - * 국산 참다래 품종 보급 확대 : ('08) 15ha → ('10) 90 → ('11) 150 → ('12) 200 이상
- 국산 화훼 수출확대 지원 * 국산 국화 수출비율 : ('09) 36% → ('11) 45
- 과수재배적지 변동 대응 및 채소 유통·저장 등 안정공급기술 개발
- 약용작물 종자 국가보급체계 구축 : 5권역 12작목

축산물 : 생산성 향상 / 산업화 / 안전성 제고

- 축종별 품질 고급화, 안전소비 및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 보급
 - * 쇠고기 연도(軟度)관리시스템 현장 적용, 젖소 생산수명 연장: ('09) 2.5마리/일생 → ('11) 2.6
- 국산종계 산업화 및 한국형 씨돼지 '축진듀록' 보급 확대(120두)
- 항생제 사료첨가 금지('11.7) 대비 항생제 대체제 개발(3종)

국산 국화 품종 수출 활성화

- ◇ 수출액 증가 : ('08) 730천달러 → ('09) 2,858 → ('10P) 4,000
 - * 국산품종 점유율 : ('08) 14% → ('09) 36 → ('10P) 40
- ◇ 국산 국화 '백마' 수출재배단지 조성 및 일본시장 주도
 - * 전북 전주 : 30농가 12ha, 일본수출액('10P) : 3,500천달러



<국화 '백마'>

3 미래대비 농업녹색기술 개발

고부가가치 생명산업기술 개발로 녹색성장 국가비전 실현

중자산업육성 : 유전자원 활용 기반기술 개발 등 중자산업 육성 지원

- 유전자원 수집확대 및 특성평가 강화 * ('10) 73.4% → ('11) 75
- 로열티 확보 및 수출국 무단증식 방지 해외출원 확대(6개국, 90품종)

에너지 / 식품 : 에너지 절감·대체에너지 개발/ 식품산업 지원 R&D

- 신재생에너지 이용 온실난방시스템 개발 * 지하공기·수열·발전폐열 이용
- LED 인공광 적용작물 실증 확대 * ('09) 11작물 → ('10) 18 → ('11) 20
- 바이오에너지 자원 개발 * 바이오매스 시범지구 조성(금강하구 10ha)
- 건강한식 조리법 발굴 및 발효 가공기술 실용화(전통주, 유산발효식품)
* 국산 농식품의 영양기능성정보 국가관리망 구축('10~'12, <http://koreanfood.rda.go.kr>)

신소재개발 : 생물자원을 이용한 기능성 신소재 개발

- (곤충자원) 누에(치주용 막, 조혈촉진 단백질), 양봉산물(식의약 소재), 소똥구리(항생제) 등 활용 * 누에실크:('09) 인공고막 → ('10) 뇌막 → ('11) 치주막
- (농축산 부산물) 감귤, 서류, 축산부산물 이용 인공피부, 화장품 등 산업소재 개발 * 감귤 바이오겔 이용 인공피부 생산기술 이전 : ('11) 10개 업체

첨단분야융합 : 고부가 농업생명공학 실용화 및 융복합기술 개발

- 고부가가치 기능성 형질전환작물 개발: ('10) 2종 → ('11) 3
* 혈전용해성분 함유 벼, 비타민 A 강화 벼, 가공적성 개량 쌀
- 형질전환 미니돼지 개발 확대 : 바이오장기(2종), 신약 생산용(1종)
- 한국형 식물공장모델 정립을 위한 기반·실용기술 개발
* 수직재배장치, 환경 모니터링 및 원격제어장치, 양액자동관리기술

식물공장 요소기술 실증용 파일럿 플랜트 건축 ('10)

- ◇ 규모 : 높이 10m(4층 구조), 바닥면적 446m²(빌딩형+수직형)
- ◇ 투입기술 : 이식·수확로봇, 지열히트펌프, LED, 원격제어 등
- * 식물생산공장시스템 : 제2회 국가녹색기술대상 국무총리상 수상



4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

기후변화 대응 농업부문 국가종합관리 지원기술 개발

온실가스 : 농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및 감축기술 개발

-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12종) 및 농산물 탄소 배출원단위 산정(30종)
 - * 발생량 산정 : 재배면적, 양분관리, 축종별 사육두수, 분뇨처리 등 발생요소 평가
-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로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지원
 - * 논 : 시비, 경운, 물관리 / 밭작물 : 시비관리 / 축산 : 반추가축 장내발효, 분뇨처리 등

기후적응 :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안정생산기반 구축

- 기상피해 예측 및 방지를 위한 작황모니터링시스템 구축(과수, 채소 등)
- 이상기상에 따른 작물 영향평가(생육, 수량성, 품질평가)
- 재배안전지대(과수) 및 재배법(맥류·두류) 재설정 연구
- 온난화, 병해충 등 기후변화 적응 품종 개발
 - * 고온기 착색양호 사과 / 이상저온 대응 만기 개화성 배 품종 등

위기대응 : 새로운 병해충 대응 조기 방제기술 개발

- 돌발병해충 방제약제 선발 및 천적 발굴 * 날개매미충류 방제약제(5종)
- 병해충 저항성 품종 개발 : ('10) 10품종 → ('11) 10
 - * 벼줄무늬잎마름병 / 밀 붉은곰팡이병 / 콩 불마름병 저항성 등

기회활용 : 온난화 적응 아열대 신소득 작물 개발

- 열대·아열대 유망 과수, 채소작물 특성 검정 및 적응기술 개발
 - * ('10) 10종(망고, 패션프루트, 오크라 등) → ('11) 23 → ('12) 30 이상

온난화 적응 신소득 작물 개발

- ◇ 국산 참다래(골드키위) 품종 재배면적 확대로 로열티 대응
 - * 재배 : ('08) 15ha → ('10) 90 / 소비자 : 뉴질랜드산 대비 39% ↑
- ◇ 열대과수 재배기술 보급 확대(망고) : ('05) 15ha → ('09) 26



<골드키위>

2. 작지만 강한 농업(強小農) 실현을 위한 현장지원

1 | 농업경영체 활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기술보급

개발 신기술 보급, 지역별 소득활동 지원 등 농업경영체 역량 강화

기술보급 :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신기술 보급

- 현장중심의 생활 공감형 신기술 보급사업 추진(57종, 846개소)
 - * 경영체의 생산, 비용절감, 시장개척 등 종합 비즈니스분야 시범 확대
- 최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을 위한 T.O.P 프로젝트 추진
 - * (쌀) 32단지 2천ha, (과실) 6과종 96개소 2,500ha, (과채류) 3품목 10개소 100ha

시범사업 :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 시범 육성

- 농가 경영개선 현장실용화 시범 : ('08~'10) 251농가 → ('11) 135
- 강소농 시범경영체 육성 및 성공모델 개발
 - * 농업경영체 역량 향상과 경영혁신 집중 지원 : '기술 + 경영 + 마케팅' 접목

애로해결 : 최일선 현장접점 기관으로 현장애로해소 · 약자배려

- 이동식 농업종합병원형 녹색기술 현장지원단 운영
 - * 생산기술 중심 민원해결 → 마케팅, 디자인,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
- 농촌노인 건강·경제활동 지원 농촌건강장수마을 운영(148개소)

소득화 : 지역별 농촌자원 특성화로 소득활동 지원

- 지역 주산작목 대상 '생산 → 유통' 지원 지역특성화사업 추진(80시군)
 - * 사업 컨설팅을 위한 「특성화 협력단」 운영(7분야 25팀 240명)
- 농가단위 소규모 창업·지역특산물 가공기술 지원 등 농외소득 제고
 - * 손맛사업 : ('06~'10) 118개소 → ('11) 17, 농가맛집 : ('07~'10) 50개소 → ('11) 14
- 농촌어메니티를 접목 체험관광 확대 지원 농촌교육농장 조성(60개소)

지역농업 특성화사업 추진효과 ('10)

- ◇ 전북 익산(농산물가공/ 특산품 매출 증가): ('09) 45억원 → ('10) 100
- ◇ 강원 정선(웰빙잡곡/ 잡곡옥수수 작부개선): ('09) 132억원 → ('10) 207
- ◇ 경기 양주(어메니티/ 농촌관광 활성화): ('09) 10억원 → ('10) 18



<익산 가공품>

2

농촌지도사업 역량 강화로 경영마케팅 활성화

강소농 육성 지도역량 강화 및 우수 농업경영체 발굴·확산

지도역량 : 주체간 협력네트워크 확대 및 지도인력 육성

- 중앙-도단위 강소농 육성 컨설팅 지원단 운영
 - * 농협, 한국농어촌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등과 경영체 역량향상 협력 MOU 추진
-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을 강소농 육성 전문가로 양성
 - * 시군센터 지도공무원 대상 경영마케팅 능력개발교실 운영(9개도)

현장진단 : 품목별·유형별 경영진단 및 처방으로 경영혁신 유도

- 품목별(60품목) 경영진단 및 처방 DB화:('99~'10) 131천호 → ('11) 7
 - * 표준진단표를 활용, 농가별 생산기반·기계화·재배관리·경영관리수준 진단
- 농가유형별 맞춤형지원을 위한 농업현장 수요조사 및 DB화

인력육성 : 비즈니스역량 향상·대상별 교육·연구모임 양성

- 농업비즈니스 역량개발 과정 : ('06~'10) 316명 → ('11) 200
- e-비즈니스 멘토링 과정 : ('07~'10) 68개소 → ('11) 29(725명)
- 경영규모별 농업인 교육 및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활성화 지원
 - * 전업농(농업인대학 127개소, 품목별 교육 158개소), 중소농(새해 실용교육)

사례확산 : 우수 경영사례 발굴·공유 및 산업화 촉진

- 우수 농가경영체 성공사례 발굴 확산 : ('06~'10) 2,427호 → ('11) 200
 - * 매년 5개 유형(기술혁신형, 마케팅형 등) 200개 우수농가 사례 확산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 및 산업화 지원
 - * 기술가치 사전평가, 패키지 기술 제공, 농업기술 지식재산권 거래 활성화 등

융복합(1차+2차+3차) 농업비즈니스모델 창출

- ◇ 여주 은아목장(우유생산 + 치즈가공 + 체험·펜션숙박)
 - * 여성농업 CEO, 1등급 우유로 수제 치즈를 가공, 새로운 가치 창출
- ◇ 예산 씨알농장(펀드유치 110억원, 한우사육+판매장, 브랜드화)
 - * 농촌 유희 노동력·축사 이용 매출 확대:('06) 30억원 → ('10) 150



<낙농체험>

3. 글로벌 농업기술협력

G20 후속 '개도국 빈곤 해결'을 위한 농업기술 지원 등 국제협력 강화

세계공헌 : 한국 주도, 기술 공여 및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체 운영

- (아시아) 농가소득 제고 및 이동성 병해충 등 다자간 현안문제 공동 해결
 - 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 확대 ('09 출범, 12국)
 - * ('10) 총회, 14개 사업 → ('11) 집행이사회, 20개 사업
 - * 태국(옥수수 종자증식기술 상업화), 스리랑카(수확후 관리기술 시범사업) 등
- (아프리카) 빈곤 해결을 위한 우리의 식량문제 해결경험 현지 전수
 -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KAFACI) 운영('10 출범, 17국)
 - * 아프리카 현지 총회 개최('11. 3월)로 국제사회에 한국의 이미지 부각
 - * 중점 지원 기술 : 서부 아프리카(벼), 동부(축산, 서류), 중남부(옥수수) 등
- (국제기관 공조) 국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기술 공여
 - * 국제미작연구소와 아시아 쌀 생산량 제고 관련 과제 추진 및 벼 품종(MS11) 보급
 - * 아프리카녹색혁명동맹(AGRA) 등과 연계, 한국의 "기술보급지원시스템" 전수

해외진출 : 해외농업 진출 발판 마련 및 글로벌 인재 양성

- 개도국 중심으로 우리 농업의 전략적 해외진출 거점 확보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확대 : ('09~'10) 10개국 → ('11) 15
 - * 현지맞춤형 기술지원과 함께 '자원도입 + 해외진출 농산업체 지원' 거점으로 활용
 - * 센터 특성화 : 캄보디아(해외농업개발), 우즈베크(유전자원 협력), 알제리(농자재 수출) 등
 - 외국인 초청 훈련 : ('10) 244명 → ('11) 350, 해외현지교육 병행 : 10,000명(KOPIA센터)
- 젊은 층 대상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농업 청년리더 파견
 - * ('10) 109명 → ('11) 250 (KOPIA센터 190, 국제기관 등 60)

한글로 쓴 인도네시아판 농사직설

- ◇ 문자가 없는 민족을 위한 농업기술 지원 추진
 - * 인도네시아 짜아찌아족을 위한 '한글표기 영농교본' 제작 · 보급으로 우리 선진 농업 현지화 및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



IV. 세부과제 추진일정

	주요 세부과제	일정
1/4 분기	▪ 강소농 실현을 위한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	1~2월
	▪ 차년도 신기술보급시범사업과제 선정심의회	2월
	▪ 에티오피아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설치	2월
	▪ 2011 농식품신기술전망대회, 농촌지도사업 종합연찬회	2월
	▪ 차년도 연구과제발굴 녹색기술 정기수요조사	2월
	▪ 제3회 생활공감 녹색기술 국민제안 공모	2~4월
	▪ 엘리트 귀농대학 개설	3월
	▪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KAFACI) 총회	3월
▪ 글로벌 해외인턴 파견	3월,8월	
2/4 분기	▪ 시설원에 에너지절감 시범사업 현장평가회	4월
	▪ 찌아찌아족 '한글표기 영농교본' 전달식 및 워크숍	4월
	▪ 대상별 귀농교육 개설(제대군인, 모범수형인)	4~5월
	▪ 신규 KOPIA센터 설치(4개국)	4~5월
	▪ 벼 직파재배, 밀 자급률 향상 생력재배단지 현장연사회	5월
	▪ 조사료 생산·이용기술 현장연사회	5월
	▪ GAP 농업위원회	6월
	▪ 고독성 농약 재평가 추진	6월
하반기	▪ 우수농자재 품질인증제 시행	7월
	▪ 차년도 지역농업특성화시범사업 대상시군 선발	9월
	▪ 녹색성장기술위원회 및 분야별 녹색기술자문단 개최	11~12월
	▪ 2011년도 농작물 직무육성 신품종 선정	11~12월
	▪ 차년도 15대 어젠다 농업연구개발사업 과제공모	11~12월
	▪ 농업부문(경종·축산) 온실가스배출량 통계 작성	12월
	▪ 2011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발	12월
	▪ 농촌진흥사업 종합보고회	12월
연 중	▪ 연구개발 어젠다 운영위원회	연중
	▪ 친환경비료 품질등급화 평가	연중
	▪ 농약 직권등록(설계심의-직권시험 수행)	연중
	▪ GAP 관리기준 고시 개선	연중
	▪ 농진청 리포트(Agrovision), 이슈리포트 발간	격주,월
	▪ 「녹색기술현장지원단」 영농현장 애로기술 지원	연중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① 품목별 경쟁력 제고기술 개발		
가. 비용절감기술 개발 보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ED 적용작물 현장실증(18작물, 20개소) ○ 트랙터용 에코드라이빙시스템 개발(9월) ○ 수입종자 대체 사료옥수수 보급(72톤) ○ 농약대체 천적이용 방제기술 개발(3종) ○ 비료대체 녹비작물 품종보호 출원(청풍보라) 	<p>완 료</p>
나. 로열티 대응 품종 육성 및 고품질 원예 작물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로열티대응연구단 운영 품종육성·보급 (품종: 딸기18종, 화훼445, 참다래10) (보급률: 딸기61%, 장미18, 국화15) ○ 과수해충 무인감시시스템 보급(8개소) ○ 도시농업전담연구팀 신설(4월) ○ 인삼 부정유통방지 판별기술 개발 ○ 토종 약초자원 기능성정보 구축(600종) 	<p>완 료</p>
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생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우 개량개선 당대검정 두수 확대(500두) ○ 한우이력추적용 SNP마커 개발(68종) ○ 실시간 대사 질병관리프로그램 개발(젓소) ○ 한국형 씨돼지 축진듀록 보급(104두) ○ 토종계 우리맛닭 보급(34천수) ○ 항생제 저감 사양관리매뉴얼 보급(12월) 	<p>완 료</p>
라. 쌀 가공 및 식량 자급률 향상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공 용도별 쌀 품종 4계통 선발(5월) ○ 쌀 가공 용도별 특산단지 조성(407ha) ○ 굳지 않는 떡 제조 원천기술 개발(세계최초) ○ 콩 논 재배 현장실증(4개소, 35ha) ○ 밀 브랜드 단지화(4개소, 600ha) ○ 풋옥수수 2기작 재배기술 개발 	<p>완 료</p>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②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가. 농업용 자재 품질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자재 품질기준 강화 및 제도개선(3월) ○ 유기질지원비료 퇴비품질등급제 시행(7월) ○ 농약활용기자재 관리제도 시행(10월) ○ EU, 미국 부적합 농약 안전성 재평가 ○ 목록공시기간 만료 친환경자재 재평가(444종) 	완 료
나. 농식품 안전관리 및 위해요소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AP 인증확대(전품목) 및 기술교육(4만명) ○ 위해요소 안전관리기준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약(900품목), 중금속(21품목) ○ 이동식 폐사가축 처리장비 개발 ○ 축종별 HACCP운영모델 보급(4월) ○ GMO 환경위해성 표준관리시스템 구축(6월) 	완 료
다. 자원 순환형 친환경 농업기술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단인근농경지 중금속 오염도 평가(7종) ○ 액비성분분석기(93대) 및 액비제조 시설(SCB) 보급(212개소) ○ 병해충 방제 바닷물 사용기준 설정(13종) ○ 버 부산물 이용 생분해성 멀칭비닐 개발 	완 료
③ 미래준비 농업녹색기술 개발		
가. 생물자원 이용 신기능성 식·의약 소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귤 부산물 이용 인공피부 소재 및 마스크팩, 치료용 거즈 시제품 개발(10월) ○ 누에실크 이용 인공고막 기술이전(10월) 및 인공뼈 특허출원(7건) ○ 인간 조혈촉진 단백질 생산용 누에 형질전환(4세대) ○ 봉독이용 화장품 기술이전(5월) ○ 인삼 뇌기능 개선 기능성 표시 등재 ○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등록(2종) ○ 돼지껍질 이용 칼슘흡수 증진제 개발 	완 료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나. 농업생명공학 실용화 및 첨단 융복합기술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성 물질 및 바이오장기생산용 형질전환 동물 개발 - 백혈구 증식인자 생산용 돼지(1마리) - 다중면역유전자 제어 돼지(8월) ○ 배추 1,2번 염색체 세계최초 해독(11월) ○ 식물공장 파일럿 플랜트 건축(12월) - 남극 세종기지 식물공장 설치 지원(1월) ○ 염류집적 시설재배토양 측정센서 개발 	<p>완 료</p>
다. 기후변화 대응 농업 부문 국가 종합관리 능력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기후변화적응 세부이행계획 수립 ○ 온실가스 배출량 평가 및 산정 ○ 온난화 적응품종 개발(호품,황옥,녹수) ○ 꽃매미 방제약제 선발(11종) ○ 아열대 신소득작목 적응기술 개발(10종) ○ 돌발 병해충 조기예찰시스템 구축(~14) 	<p>완 료</p> <p>추진중</p>
라. 종자산업 육성 기술 지원 및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유전자원 유용형질 특성검정(73.4%) ○ 유전자원 관리기관 지정 운영(91개) ○ 민간지원 육종기술지원센터 운영(4월) ○ 국산품종 국외적응성 시험(4개국 23품종) ○ 토종종자 기증캠페인(101작물 655점) 	<p>완료</p>
④ 글로벌 농업기술협력 강화를 통한 국격제고		
가. 아시아 농식품 기술 협력 협의체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AFACI 총회 개최(4월,필리핀) ○ 14개 사업 추진(범아시아2, 국별9 등) ○ 홈페이지 개통(8월), 사이버포럼(9~12월) ○ 한-아프리카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 (KAFACI) 출범(7월, 17개국) 	<p>완 료</p>
나. 개도국 현지맞춤형 농업기술공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KOPIA) 확대(10국) - 국별 기술지원 및 자원도입(1,287점) - 해외진출 한국농산업체 지원(12업체) ○ 외국인 초청훈련(40개국, 244명) ○ 글로벌 청년리더(농업인턴) 파견(109명) 	<p>완 료</p>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다. 국제 공동연구 및 농업과학기술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태식량비료기술센터(FFTC) 공동 국제워크숍(6월) ○ 아태농업연구기관(APAARI) 총회 및 국제심포지엄(10월) ○ 국외상주연구원 파견(11명) 	완 료
라. 한식 세계명품화기술 개발 및 식문화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향토음식 조리법 표준화(9월) ○ 한식명품화기술 개발 전문가협의체(9월) ○ 해외농업센터 활용 세계식문화정보 라이브러리 구축(10월) - 한식 기호도 조사(일본,프랑스,중국) ○ 고문헌속 우리술 복원(특허2, 이전1) 	완 료
5 농촌 활력화 및 현장중심의 기술보급 강화		
가. 지역 농특산물·어메 니티 접목 농촌경제 활력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농업특성화사업 지원(83시군) ○ 농촌여성 창업 손맛사업 지원(18개소) ○ 향토음식 자원화 농기맛집 조성(15개소) ○ 교과과정 연계 농촌교육농장 운영(64개소) ○ 지역전략작목 산학연협력단 운영(63개소) ○ 농촌체험마을 네트워크 구축(48개소) 	완 료
나. 푸른농촌 희망찾기 운동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과 3자매마을 교류활동(336마을) ○ 실천결의대회 및 교육(141천명) ○ 푸른농촌 건강마을프로젝트 운영(4회) ○ 국민참여 기증캠페인 전개(도서,농경유물) 	완 료
다. 기술+경영 융합 맞춤형 교육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별 귀농교육(직장인 524, 제대군인 75) ○ 농업인대학(9,826명),품목별교육(72천명) 새해농업인실용교육(345천명) ○ 우수경영체 발굴(200호), 농업비즈니스 역량(200명), e-비즈니스 멘토링(23개소) ○ 생활공감형 개발 신기술 시범사업(56종) 	완 료

[별 첨 2]

2011년 업무 계획

= 산업·경관·복지가 어우러진 녹색국가 실현 =

2010. 12. 27



순 서

I . 2010년 추진실적 평가	149
II . 2011년 여건 및 중점 추진방향	151
III . 주요 추진과제	153
1.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153
2.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	154
3. 생애주기 산림복지 실현	155
4.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156
5. 글로벌 그린리더십 구현	157
IV . 과제별 주요일정	158
<참고> 2010년 업무계획 추진실적	159

I . 2010년 추진실적 평가

□ 산불 등 3대 산림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

- (산불) 범정부차원 대응대책 추진, 산불위치 감시시스템 도입 등 체계적·과학적인 대응으로 피해 최소화
 - ('00~'08 평균) 3,987ha → ('09) 1,381ha → ('10) 233ha
 - * 지난 10년 평균의 5.8%, 전년의 16.9% 수준
- (병해충) 리·동단위 병해충 관리시스템 구축 등 방제체제 정비로 병해충 통계작성('57)이래 최소 피해 발생
 - ('00~'08 평균) 322천ha → ('09) 291천ha → ('10) 227천ha
- (산사태)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 운영, 사방댐 확충 등 사전예방을 통해 지난 10년 평균대비 71% 감소
 - ('00~'08 평균) 765ha → ('09) 250ha → ('10) 206ha

□ 산림바이오매스 이용 활성화로 녹색성장을 뒷받침

- 숲가꾸기에서 산물수집 활용까지 산림작업 일관시스템 구축
 - 산물수집 활용·확대 : ('09) 82만m³ → ('10) 110만m³
- 펠릿 제조시설 확충 및 품질표시 의무제 도입, 농산촌 주택 보일러 보급 등 목재펠릿 확대 기반 마련
 - 제조시설 : ('09) 4 → ('10) 8개소 / 보일러 : ('09) 3 → ('10) 4천대
- 국내산 목재의 지속적인 공급확대로 목재자급률 제고
 - 목재자급률 : ('08) 10.1% → ('09) 11.9% → ('10) 13%

□ 국민 삶의 질 개선 및 녹색일자리 창출

- 전국 133개 자연휴양림을 통해 920만명에게 휴양서비스 제공
- 지리산둘레길·금강소나무숲길 조성 및 등산로 정비 등 서민을 위한 산림체험 인프라 확충
- 숲가꾸기 등 13개 사업에서 서민 일자리 49천개 창출
 - * 2년 연속 예산조기집행 우수기관 선정(기재부)

□ 해외 산림자원협력 확대로 국가위상 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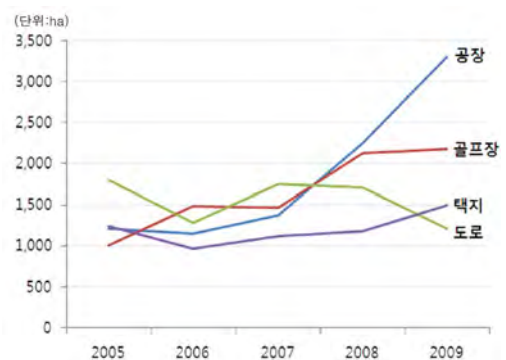
- '09년 정상외교로 확보한 인니, 캄보디아 조림대상지 사업 착수
 - 인니 : 23만ha 확보, 3.2천ha 조림 / 캄보디아 : 12만ha 확보, 1천ha 조림
- 튀니지와 MOU 체결('10.3월)로 아시아 중심에서 아프리카까지 산림협력 확대
- 제23차 세계산림과학대회(IUFRO)를 역대 최대규모로 개최(8월)

□ 매년 증가하는 산지개발수요 대응 대책 수립

- 산지관리법을 개정('10.5월)하여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및 산지복구 감리제도 도입 등 관리체계 마련
- 대규모 산지전용에 대한 자연친화적 개발기준 정립 필요



〈연도별 산지전용 면적〉



〈용도별 산지전용 면적〉

Ⅱ. 2011년 여건 전망과 정책방향

1 | 여건 전망

□ 산림자원 육성과 이용에 대한 요구 증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 확충 등 산림의 중요성 부각
- 산림의 자원가치를 높이기 위해 치산녹화기에 심은 녹화수종을 경제수종으로 교체할 시점
-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웰빙 문화 확산에 따라 목재 및 청정임산물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

□ 산림복지 서비스 및 일자리에 대한 관심 고조

- 소득수준의 향상, 고령화 등에 따라 산림을 휴양·문화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국민욕구가 증가
- 도시화율 증가로 도시숲 등 쾌적한 도시녹색공간 확대 필요
-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녹색일자리 창출 요구 지속

□ 산림생태계의 보전·관리 필요성 증대

-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 증가로 산림생태계 건강성 위협
- 산지개발수요와 함께 산지훼손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
- 생물다양성협약 나고야의정서 채택('10.10월)으로 산림생물자원 보전·이용을 위한 전략적 대응 필요

산림의 역할 강화를 위해 UN에서 2011년을 세계 산림의 해로 지정

비전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강국

전략

선진한국에 걸맞은
산림 품격 제고녹색 자원을 통한
국민행복지수 증진국제산림협력 주도로
국가 위상 강화추진
과
제

1.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2.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
3. 생애주기 산림복지 실현
4. 건강한 산림생태계 조성
5. 글로벌 그린리더십 구현

산업·경관·복지가 어우러진 녹색국가 실현

Ⅲ. 주요 추진과제

1 |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 녹화수종과 불량천연림을 경제수종으로 대체

- (녹화수종) 리기다소나무 등을 벌채하고 생장이 빠르며 가치가 높은 백합나무, 소나무 등으로 갱신
 - ('10) 12천 → ('11) 16천 → ('16까지) 180천ha 완료
- (불량천연림) 용재(用材) 가치가 우수한 침엽수 인공림으로 전환
 - 지역별로 중점 조림수종을 선정하여 집단화된 목재자원 육성



<중점 조림수종>

□ 숲가꾸기를 확대하여 경제적·환경적 가치 증진

- 경제림단지를 항구적인 목재공급 기지로 육성(450개 단지 292만ha)
- 인공림, 우량 천연림에 숲가꾸기를 집중하여 산림의 탄소 흡수능력 제고('10년 230천ha → '11년 266천ha)
- 전문가에 의한 설계·감리를 통해 숲가꾸기 품질 향상

□ 선진 한국에 걸맞은 산림경관 창출

- 주요 도로변, 가시권 지역의 덩굴류 제거 등 산림의 모습을 대대적으로 정비(권역별 패트롤 운영)
- 산림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국가산림경관벨트로 지정 관리

2

산림산업의 경쟁력 강화

□ 국산목재 공급을 확대하여 국산재 시대로 전환

○ 산림작업 일관시스템을 정착시켜 산물수집 확대

숲가꾸기	· 10ha 단위로 집단화
간벌률	· 20% → 35%
수집률	· 20% → 50%
수집방법	· 인력위주 → 기계화 수집 (0.8m ³ /1인) (4.0m ³ /1인)

<산림작업 일관시스템>



<임도변 숲가꾸기 산물수집>

- 수종갱신·숲가꾸기 산물의 수급 확대를 통해 목재공급 증대
 - 목재공급량 : ('10) 3.6백만m³ → ('11) 4.2백만m³
- 벌채지에는 일정 본수의 우세목을 남겨 산림경관 보존

□ 목재펠릿의 에너지 활용 확대

- (수요) 농가주택, 시설원에 보일러 위주에서 군부대, 우체국 등 공공시설, 마을회관, 산업체 등으로 다변화
 - 목재펠릿 난방기 : ('10) 4천대 → ('11) 5천대
- (공급) '11년말까지 22만톤/年の 생산능력 확보
 - 제조시설과 이용시설을 연계하여 단지화(8개소 시범조성)
- 목재펠릿 부가세 감면('11.1월) 및 보일러 인증제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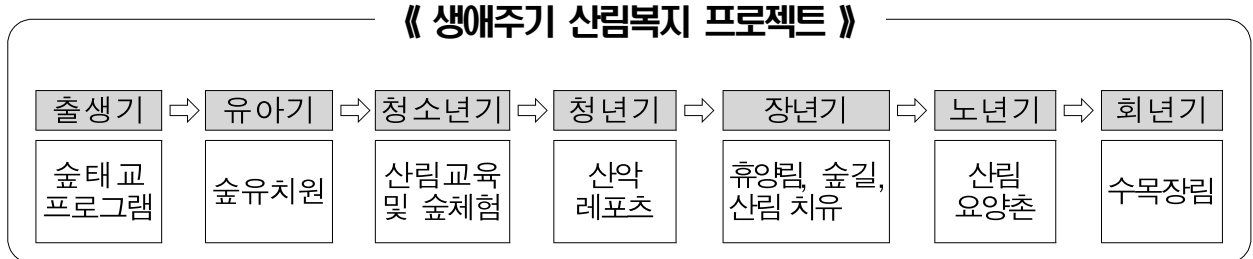
□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 생산·유통 지원

- 대단위 산림복합경영단지를 조성하여 숲가꾸기 산림사업지에 산채·약용식물을 재배(신규 15개소)
- 고소득작목인 산양삼 품질표시 및 생산이력제 도입

3

생애주기 산림복지 실현

□ 전 생애에 걸쳐 산림혜택을 누리는 산림복지 프로젝트 추진



□ 숲을 치유와 건강증진 공간으로 활용

- 도시근교 산림에 단기방문형 치유의 숲 조성
 - ('10) 국유림 3개소 → ('11) 지자체 4개소
- 치유 환경이 우수한 산간지역에 장기체류형 치유공간 조성
 - 백두대간테라피단지('09~'14), 자연휴양림내 시범사업 실시
- 트레킹 숲길 조성 확대 : ('10) 204km → ('11) 278km

□ 시민을 위한 생활권 녹색복지 공간 조성

- 도시숲, 가로수, 학교숲으로 연계되는 녹색네트워크 구축
 - * '13년까지 WHO 권고 1인당 도시녹지면적 9㎡ 확보('11년 8㎡)
- 도심내 사회복지시설 등에 소규모 공원 조성('11년 88개소)
-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가정을 위한 아세안산림휴양단지 조성('11~'13)

□ 산림서비스 등 녹색일자리 창출

- 숲해설가, 숲길조사원, 등산안내인 등 13개 사업 4만5천명 고용
- 분야별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장기·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 산림재해 유형별 저감대책 강구

- (산불) 예방과 조기진화를 위한 감시인력 3만명 운영, 감시 카메라 등 장비 확충 및 헬기 진화역량 강화
- (병해충) '13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병해충별 맞춤형 방제 및 외래해충 예찰 강화
- (산사태) 재해취약지역의 사방사업을 통해 수해피해 예방
 - * 사방댐 735개소, 계류보전사업 100km, 산지사방 107ha 등

□ 산림생물다양성 보전·관리 강화

- 식물자원 보전을 위한 수목원, 자생식물원, 생태숲 확충
 - 백두대간수목원 : 경북봉화('09~'13), '11년 설계 및 시공
- 백두대간 마루금 생태축 연결 및 독도산림생태계 복원사업 추진
- 민북지역산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민북지역 산지관리특별법」 제정 및 DMZ 일원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중점 관리

□ 자연친화적인 산지이용 제도 도입

- 나무사이에 건물을 심어 숲의 훼손을 최소화하는 생태적 산지전용 제도 마련
- 대규모 산지의 전용타당성 검토를 위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시행('11년 7월)



<생태적 산지전용 사례>

- 골프장 등 대규모 산지전용에 대한 허가기준 강화
 - 산지의 평균경사도 기준 강화 및 보전산지 편입비율 적용범위 확대

□ 해외산림자원개발 확대 및 자원외교 다변화

○ 장기안정적 목재자원 확보를 위한 해외조림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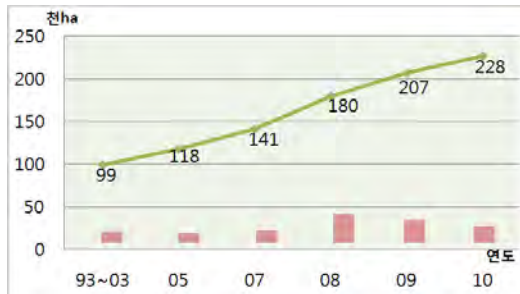
- ('93~'09) 207천ha → ('10) 20천ha → ('11) 25천ha

* '50년까지 100만ha 조림으로 국내 목재수요의 50%를 충당

○ 한-필리핀 MOU 체결 등 산림협력 강화

* 기 MOU 체결(12개국) : 인니, 뉴질랜드, 파라과이, 튀니지 등

* 한-파라과이 우호림 조성사업 완료(상반기)



<해외조림 실적>



<해외조림 진출현황('09)>

□ 국제산림협력을 주도하여 국가위상 강화

○ 아시아 최초로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 총회 개최

* '11. 10. 10(월)~21(금)까지 경남 창원에서 193개국 정부대표 등 4천여명 참석

○ 몽골 그린벨트 조림 등 사막화방지를 위한 산림녹화기술 전수

* '10년까지 아시아 3개국 5개 지역에 11,600ha의 사막화 조림 실시

○ 유엔식량농업기구('11~'13) 및 인도네시아('08~'13)와의 기후 변화 협력사업 추진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창설 준비를 위한 임시사무국 운영 및 협정안 서명

IV. 과제별 주요일정

실 천 과 제		일정
상반기	○ 목재펠릿 부가세 감면	1월
	○ 봄철 나무심기	3~4월
	○ 봄철산불조심기간 및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2~5월
	○ 제66회 식목일 기념행사 개최	4월
	○ 목재펠릿 제조시설 등 현지 지도 점검	6월
	○ 국립 치유의 숲 개장	6월
	○ 2010년 수해피해 복구사업 완료	6월
	○ 한-파라과이 우호림 조성	6월
	○ 민북지역 산지관리 특별법 제정	6월
	○ 여름철 산림재해 대책 상황관리	5~10월
하반기	○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제도 및 복구감리제도 시행	7월
	○ 숲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8월
	○ 생태적 산지전용 기준 마련	8월
	○ 산림병해충 항공방제 실시	8~10월
	○ 가을철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기간 운영	9~11월
	○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	10월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공사 착공	11월
	○ 국립백두대간테라피단지 설계	11월
	○ 아세안산림휴양단지 설계	11월
	○ 가을철산불조심기간 및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11~12월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p>□ 품격있고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p>		
<p>가. 탄소흡수원 확충 및 용재공급을 위한 산림자원 육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숲가꾸기 및 일자리사업 발대식(1월) ○ 산림탄소상쇄제도 MOU 체결(3월) ○ 제65회 식목일 기념행사 개최(4월) ○ 조림지 활착상황 조사(9월) ○ 바이오순환림 등 21천ha 나무심기(11월) 	<p>완 료</p>
<p>나. 선진한국에 걸맞는 산림경관 창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덩굴류 3만ha 제거 등 산림경관 개선(11월) ○ 숲가꾸기 23만ha 완료(12월) ○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12월) 	<p>완 료</p>
<p>□ 산림바이오매스 활용 촉진</p>		
<p>가.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위한 일관시스템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순환마을 설계 추진(3월) ○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 3천명 운영(12월) ○ 숲가꾸기 산물수집 110만m³ 완료(12월) 	<p>완 료</p>
<p>나. 목재펠릿의 체계적 수급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부대 및 수목원 펠릿난방 시범사업(1~4월) ○ 목재펠릿 품질규격 의무표시제 도입(7월) ○ 목재펠릿보일러 4천대 보급(12월) ○ 목재펠릿 부가세 감면 조특법 개정(12월) 	<p>완 료</p>
<p>다. 목재자급률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산목재 저장센터 조성 완료(6월) ○ 친환경벌채제도 도입(8월) ○ 사랑의 땀감 나누기(10월~12월) ○ '10년 목재자급률 목표(13%) 초과 달성(13.6%, 12월) 	<p>완 료</p>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 산림생태계의 효율적 보전		
가. 산림보호체계 개선 및 산림생태계 보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두대간 및 민북지역 산림복원 추진 계획 수립·시행(1월) ○ 산림보호법 시행(3월) ○ DMZ 산림생태계 41ha 복원(11월) ○ 백두대간수목원 기본계획(6월) 및 도시 관리계획 완료(12월) ○ 백두대간수목원 기본설계 완료(12월)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3천ha 지정(12월) 	완 료
나.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 등 산림재해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방지대책 본부 운영(2.1~5.15, 11.1~12.15) ○ 산불위치관제시스템 9천대 도입(5월) ○ 산림재해 대책본부 운영(5.15~10.15) ○ 여름철 풍수해 예방·복구대책 수립(5월) ○ 산림병해충 15만ha 방제 실시(10월) ○ 전국 산불진화 합동 시범훈련(11월) ○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15개 시·군 확정(12월) ○ 사방사업, 산림복원 등 산림토목사업 준공 및 평가(12월) 	완 료
□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		
가. 산림휴양치유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숲유치원 운영계획 수립·시행(3월) ○ 산림치유 관련 법적근거 마련(5월) ○ 숲태교 프로그램 운영 계획수립(6월) ○ 스마트폰용 산림휴양·등산 정보 제공(7월) ○ 백두대간 테라피단지 설계 추진(11월) ○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3개소 설계(12월) 	완 료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나.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도별 현장책임관 구성·운영(3월) ○ 새만금 그린네트워크 조성모델 개발 용역 사업 완료 (10월) ○ 백두대간트레일 조성 및 운영관리 방안 연구사업 완료(11월) ○ 도시숲·산림공원 347개소 조성(12월) ○ 가로수 597km 조성 및 숲길 204km 조성, 등산로 790km 정비(12월) 	<p>완 료</p>
다. 임업인 소득증대 및 경영기반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야양도세 감면 시행(1월) ○ 산양삼의 품질표시 및 생산이력제 도입을 위한 임측법 개정(2월) ○ 임산물 직거래 장터 e-숲으로 개설(11월) ○ 산양삼 품질관리시스템 구축(12월) ○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 10개소 설치(12월) ○ 전문임업인 산림경영모델숲 시범조성 사업 완료(12월) 	<p>완 료</p>
<p>□ 서민체감형 산지이용 합리화</p>		
가. 산지이용규제 합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전산지에서의 건축물 진입로 허용 및 공익용산지 중복규제 완화(5월) ○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제도 도입(5월) ○ 산지일시사용제도 및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 임시특례 도입(5월) ○ 산지관리기본계획 제도 도입(5월) ○ 산지복구감리제도 도입(5월) 	<p>완 료</p>
나. 국유림의 산업용 사용 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림에 지역특화 사업, 약용수종 재배가 가능하도록 국유림법 개정(1월) 	<p>완 료</p>

업 무 계 획	이 행 실 적	이행상황
□ 해외 산림자원협력 강화		
가. 산림자원외교 다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튀니지 산림협력 MOU 체결(3월) ○ 한-인니 기후변화 대응역량 강화 심포지엄(3월) 및 산림포럼 개최 (8월) ○ 한-파라과이 우호림조성 협력사업 사전조사(3월) 및 사업 확정(8월) ○ 파라과이(1월), 몽골(10월), 캄보디아(11월), 베트남(12월) 미얀마(12월) 등 5개국 양자간 산림협력회의 개최 ○ 한·몽골 그린벨트 사업 공무원 연수(12월) ○ 미얀마, 인니 등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산림교육 실시(40명, 8월) 	완 료
나. 해외조림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남미 5개국과의 조림투자 설명회(1월) ○ 해외투자기업 지원 인턴 발대식(1월) ○ 캄보디아 신규 조림착수(4월) ○ 해외조림 지도점검(5월, 11월) ○ 필리핀 조림투자 세미나(12월) ○ 해외조림 21천ha 완료(12월) 	완 료
다. 산림분야 국제협력 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AFoCO 작업그룹회의(3월) ○ UNCCD 총회 준비위원회 규정 제정(5월) ○ 한-ASEAN 산림분야 고위급 회의(7월) ○ 세계산림과학대회(IUFRO) 개최(8월) ○ UNCCD 총회관련 경남도와의 MOU(9월) ○ 사막화방지의 날 기념 심포지엄(10월) ○ UNCCD 총회 대비 제1차 준비위원회 개최 및 기본계획 확정(11월) ○ 한·아세안 산림협력워크숍 개최(12월) 	완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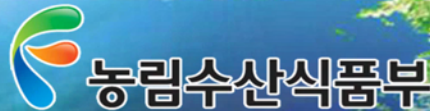
2. Presentation (PPT)

2011년 업무보고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업무계획

2010. 12. 27



오늘 바쁘신 중에도 / 우리부를 직접 방문하여 /
구제역 방역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해주신 /
대통령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식품부와 산하단체 등 전 직원은 / 대통령님을 모시고 /
내년도 업무보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을 지향하는 /
2011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업무계획을 /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I 2010년 추진실적 평가

II 2011년 핵심 정책과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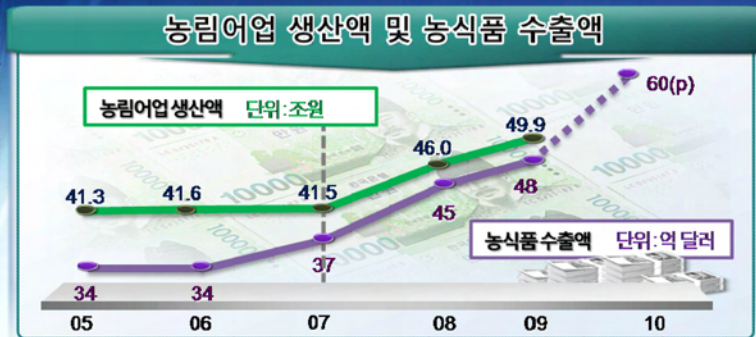
보고드릴 순서는

지난 1년간의 추진실적 평가 /
2011년 핵심 정책과제 순입니다.



I. 2010년 추진실적 평가

2010년 추진실적 평가입니다.



농어업 선진화 기본틀 마련

- 농업·어업 재해보험 통합·확충
 - 재해 보험법('10.1) / 품목 : ('07) 21개 → ('10) 41
-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 (밭)이용농가수 : ('07) 16천호 → ('10) 80
 - (벼)참여농가 농기계부채 : ('08) 953만원 → ('09) 785
- 농어업 발전 기본틀 구축
 - 유통구조·쌀 수급 개선, 보조금·R&D 개편 등

식품산업 기반강화 / 규제 완화

- 식품산업 발전기반 조성
 - 식품산업 종합대책 수립, 김치연구소 설립
- 막걸리 등 쌀 가공산업 활성화
 - 가공용 쌀소비 : ('07) 18만톤 → ('10) 30
 - 막걸리 수출액 : ('07) 290만불 → ('10) 1,900
- 농지·수산·식품 등 규제 318건 개선('08~'10)
 - * 2010년 규제개선 최우수 부처(정부 평가)

2010년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어업의 생산액과 / 농식품 수출액이 /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7년까지 / 41조원 수준에서 정체되었던 / 농림어업 생산액은 / 2009년 50조원 수준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액도 / 2007년 37억달러에서 / 2010년 60억달러로 증가하는 등 / 농식품 산업이 / 수출지향 산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농어가 선진화를 위한 / 기본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업과 어업으로 분리된/ 재해보험을 통합하고 / 적용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 농기계 임대사업도 / 활성화 하였습니다 /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구조 및 / 쌀 수급개선 대책마련 / 보조금·R&D 개편 등 / 농어업 발전을 위한 기본틀을 / 마련하는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

또한, 김치연구소를 설립하고 / 쌀가공산업을 활성화하였으며 / 농지·수산·식품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 농어업분야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위험요인에 대한 근본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

- 기상이변 대응체계 미흡으로 채소류·수산물 가격 불안정
 - 공급 과잉 / 부족에 대비한 사전적·계획적 안정화 대책 마련이 중요
- 구제역 등 가축질병 대비태세 부족
 - 일부 축산농가의 해외여행 후 소독 미실시, 법적 장치 미흡, 초동 방역체계상의 문제 등

쌀재고 과잉 및 농협법 개정 지연

- 벼의 타작목 전환, 쌀소비 확대 등을 더욱 가속화해야 할 상황
- 농협법 개정 법률안은 국회 상임위 계류 중

농림수산부문의 위험관리, 성장동력 확충 등에 정책역량 집중

그러나, 반성할 부분도 / 적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 농어촌과 농림어업을 둘러싼 위험요인에 대한 / 근본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상이변에 대한 대응체계가 미흡해서 / 채소류와 수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고 / 구제역이 확산되는 등 / 가축질병에 대한 대응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쌀 재고는 과잉상태이며 / 농협법 개정도 지연되었습니다.

쌀 과잉재고 해소를 위해 / 벼의 타작목 전환 및 소비확대 노력을 가속화 할 필요가 있으며 /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농협법 개정도 / 서둘러야 할 상황입니다.

2011년에는 / 농림수산 부문의 위험관리 / 성장동력 확충 등에 / 정책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II. 2011년 핵심 정책과제

1 농림수산분야 위험관리 강화

2 성장동력 확충

3 농어촌 지역 활성화

다음으로 / 2011년 핵심 정책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핵심과제는,

첫째, 농림수산 분야 위험관리 강화 /

둘째, 성장동력 확충 /

셋째, 농어촌 지역활성화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 농림수산분야 위험관리 강화

1 가축질병 대응 강화

2 농수산물 가격 불안 해소

3 쌀 수급 안정 및 가공산업 발전

4 재해 등 기타 위험관리 강화

먼저, 농림수산 분야 위험관리 강화입니다.

방역선진화를 통한 가축질병 최소화



방역선진화를 통해 가축질병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국경검역 강화 /

축산농가 책임성 확보 /

효과적인 초기 대응체계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국경검역 강화

- 해외여행 후 입국 신고 · 소독 의무화(법무부, 관세청과 협조)
- *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축산농가의 책임성 확보

- 축산업 허가제 도입(교육 의무화)
- 축사 출입 차량 · 인력 소독 및 기록관리 의무화
- 외국인 근로자 신고 · 교육 · 소독 의무화
- 질병 발생원인 제공시 농장 폐쇄, 보상금 삭감 등 제재 강화

초기 대응체계 강화

- 지방자치단체의 예찰 · 검사 및 초기 진단능력 제고
 - 지방 거점에 정밀검사 기능을 갖춘 진단실험실 설치, 항원 진단키트 공급
- 발생시 기동타격대(초동대응팀, 초기매몰팀) 현장 투입

국경검역을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해외여행 후 / 입국 신고와 소독을 의무화하고 / 의무위반이나 질병발생 원인 제공시에는 / 농장폐쇄 등 상응하는 제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농가의 / 책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 / 질병 발생농장의 보상금 삭감과 함께 / 축사 출입 차량 및 인력의 소독 및 / 기록관리를 의무화하고 / 외국인 근로자의 / 신고·교육·소독도 / 의무화하겠습니다.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찰·검사 및/ 초기 진단능력 제고를 위해 / 지방 거점지역에 / 가축질병 진단 실험실 설치 / 항원 진단키트 공급 등을 추진하고 / 질병 발생시에는 / 기동타격대를 즉시 현장에 투입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유통체계의 선진화·효율화

안정적 생산

- 관측 정밀화
- 계약재배 확대

실효적 비축

- 비축·저장·가공
- 상황대응 수입체계

유통구조 개선

- 농·수협
- 거래제도 개선

다음은 농수산물 가격불안 해소입니다.

농수산물 유통체계를 효율화·선진화하기 위해 /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 / 비축의 실효성 제고 /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유통구조 개선에 /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업관측 강화

- 작황·면적 중심에서 시세예측 중심으로 정밀화
 - 시세예측을 토대로 필요시 면적조정·수입 등 대책을 적기에 마련
 - 가격안정대 설정·가격구간별 대책 추진(매뉴얼 개발)
- 기상이변시 관측 횟수 확대(월 1회 → 3회 실시)

농협 등의 가격안정 기능 강화

- 산지 농협은 계약재배·수집, 농협중앙회는 판매에 집중
 - 중앙회의 광역 마케팅 조직 확대 및 학교급식 등 직거래 확대
- 수급불안 품목의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생산량의 50%까지 확대
 - (현재) 10% → ('11) 15 → ('13) 30 → ('15) 50
- 산지유통인을 법인화하고 품목전문조합으로 유도

우선 농업관측은 /
작황, 면적 조사 위주에서 / 시세예측이 가능하도록 정밀화하고 /
기상이변시 관측 횟수를 늘려 / 긴급상황에 대비하겠습니다 /

농협 등의 가격안정기능을 / 강화하겠습니다 /
산지 농협은 계약재배와 수집에 / 중앙회는 판매에 집중하도록 /
농협내의 역할분담 체계를 확립하고 /
수급불안 품목의 /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
15년까지 생산량의 50%로 확대하겠습니다.

무·배추 유통의 /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 산지유통인을 법인화하고 /
품목전문조합으로 유도해서 / 책임있는 유통주체가 / 되도록 하겠습니다.

비축·저장·가공

- 저장성 있는 양념류·수산물의 비축 물량 확대 [양념류 : (현재) 3% → ('15) 10]
- 저장성 없는 배추·무는 김치 등으로 가공 비축 [상품김치 : (현재) 40% → ('15) 60]

도매시장 제도개선

- 가격 급등락을 막기 위해 정가·수의 매매 활성화 등 경매제도 개선(농안법 개정)
- 경쟁 촉진 및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금정산조직 신설 추진

직거래 확충을 통한 유통단계 축소

- 사이버거래소 활성화 : ('10) 1,600억원 → ('11) 2,500 → ('15) 5,000
- 소비자 인근의 대형 정례 직거래장터 확대 : ('10) 2개소 → ('11) 8
- 1사1촌, 소비자단체 및 생활협동조합 등과의 직거래 확대

농수산물의 / 비축·저장·가공을 / 확대하겠습니다.

저장성이 있는 양념채소류와 / 수산물의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
저장성이 떨어지는 배추·무는 / 김치 등으로 가공하여 비축할 수 있도록 /
김치산업을 /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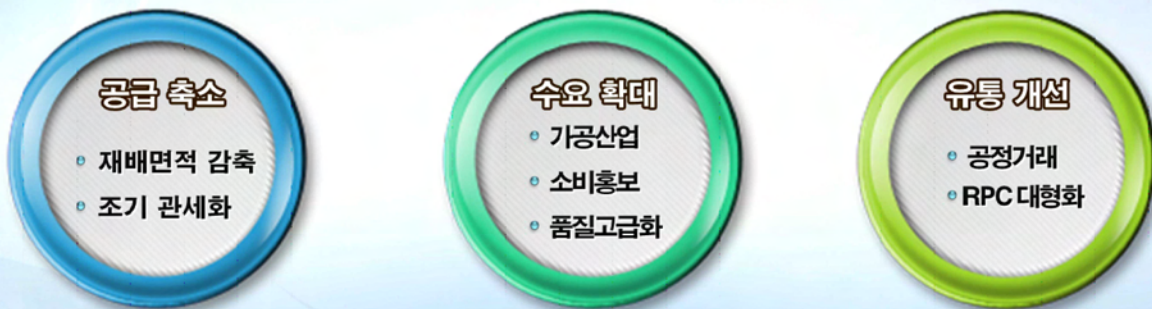
농수산물의 / 가격급등락을 막기 위해 / 농안법을 개정하여 /
정가매매·수의매매를 활성화하는 등 /
도매시장 경매제도를 / 개선하겠습니다 /

직거래 확충을 통해 / 유통단계를 축소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를 활성화하고 /
소비자 인근의 정례화된 직거래 장터를 확대하며 /
생활협 등과의 직거래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유통구조 개선대책을 / 조만간 확정하여 /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15년까지 쌀 수급균형 달성
가공용 소비를 생산량의 15%로 확대(현재 6%)



쌀 수급안정 및 가공산업 발전을 위해 /
2015년까지 / 현재 생산량의 6%인 가공용 쌀소비를 /
15%까지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쌀의 공급 축소 및 수요확대 / 유통구조 개선을 /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공급 축소 [밥쌀용 재배면적 : ('10) 86만ha → ('11) 81만 → ('15) 70만]

- '11년 중 논 4만ha 타작목 재배(쌀 20만톤 이상 감축)
 - ※ 농지매입 비축 1천ha 시범 추진('11년 예산 1,500억원)
- 관세화 논의 조기 마무리, '12년부터 관세화 전환 추진

가공수요 확대 [가공용 소비량 : ('10) 30만톤 → ('11) 36만 → ('15) 60만]

- 안정적 원료 공급 : 정부쌀 할인 + 가공용 쌀 재배단지('11:1천ha → '15:3만)
- 55개 가공 핵심기술 개발(품종·제품·기기·신소재 등)로 고부가가치화
- 쌀 수출확대 : ('11) 가공품 위주 5만톤 → ('15) 10만톤 이상
- 자금·세제 지원 및 공공기관 소비확대 유도(쌀 가공산업 진흥법 제정)

RPC(미곡종합처리장)의 시장 교섭력 제고

- RPC 통합·규모화 촉진(진입·퇴출기준 강화)
- 쌀 대표가격 형성을 위해 사이버상의 도매거래 활성화, 쌀 자조금제 도입 추진

밥쌀용 재배면적을 /

2015년 까지 70만ha로 감축하기 위한 / 공급량 축소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1년 중 논 4만ha에 / 벼 이외의 타작목을 재배토록 하고
쌀 관세화 논의를 / 조기에 마무리하여 / 2012년부터 /
쌀이 관세화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쌀 가공수요를 / 2015년까지 60만톤 수준으로 /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쌀의 할인 공급 / 가공용 쌀 재배단지 조성 /

55개 가공 핵심기술 개발 등을 통해 / 쌀가공산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RPC의 시장교섭력 제고를 위해 /

RPC 통합·규모화 촉진 / 쌀 대표가격 형성을 위한 / 사이버거래상의 도
매기능 활성화 / 쌀 자조금제 도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4. 재해 등 기타 위험관리 강화

II. 2011년 핵심정책 과제

사후 복구 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

자연재해

- 농어업기상정보 분석 및 신속한 전달 체계 구축
 - 관측센터, 농어업기상정보 담당 조직(농진청)과 기상청간 협조체계 강화
- 기후변화 적응 품종 개발(31종), 재해 보험 품목 확대(41개 → 50)

어선사고

- 노후어선 안전검사 강화 및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어선으로 대체 추진
- 모든 어선에 위치발신장치 설치, 구명뗏목·조끼 보급 확대

산불

- 산불 예방과 조기 진화를 위한 감시인력, 시설 및 장비 확충
 - 산불감시원(3만명) 집중배치, 감시카메라(762대)·신고단말기(14천대) 운영

15

농어업분야 재해 등 /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
사후복구 보다는 /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 기상청과 협조하여 /
농어업 기상정보를 / 신속하게 수집, 분석,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
기후변화 적응품종 개발 / 재해보험 품목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노후어선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
모든 어선에 위치발신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
어선사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

산불 감시인력과 / 시설, 장비 확충을 통해 /
산불예방과 조기진화에도 /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성장동력 확충

- 1 R&D 개편
- 2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 3 해외 농림어업 개발
- 4 수산/산림 자원 조성

16

다음은 / 농림수산물 산업의 / 성장동력 확충입니다.

1. R&D 개편

II. 2011년 핵심정책 과제

'14년까지 EU 수준으로 기술 경쟁력 강화

※ 농업 기술 수준(세계 최고 100 기준 : 미국 96%, EU 85, 한국 67)

투자확대

- 투자규모를 대폭 확대, 개방대비 경쟁력 확보(8,600억원, 11.2% 증가)
- 생명자원소재 산업화(10년간 1조원) 등 대형 공동프로젝트 추진

현안해결 미래준비

- 가공용 쌀, 고온적응 배추 등 신제품 개발
- 기상변화 예측, 식물공장, 기능성 식품 등 기술 개발

실용화 산업화

- 우수기술 실용화를 지원하는 기술보증제 및 산업자금 지원제 도입
 - 민간기업이 하기 어려운 연구·분석 전문기관 육성
- * 예) 네덜란드 Key Gene 社 : 해외 유명 분자마커 개발 및 분석대행 전문기업

17

농식품 분야 R&D를 개편하여 /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2014년까지 EU 수준으로 /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
R&D 투자규모를 확대하고 / 관계부처와 함께 /
생명자원소재 산업화 등 / 대형 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가공용 쌀 / 고온적응 배추 등 신제품을 개발하고 /
기상변화 예측 / 식물공장 / 기능성 식품 등의 / 기술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

우수기술의 / 실용화·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
기술보증제 및 산업자금 지원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
민간기업이 / 개별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
고난도의 분석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한 /
전문기관을 육성하겠습니다.

2.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II. 2011년 핵심정책 과제

식품산업 및 농림어업 동반 성장

식품산업 육성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12년까지 300개 육성)
-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본격 추진('14년 완공)
-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망 확충('11년, 5개소 시범 사업)

수출 확대

- '11년 농식품 수출 76억불 달성('12년 100억불 목표)
- 중국 청도에 수출전진기지 건설 및 공세적 마케팅 전개

한식세계화

- 민·관 협력 방식의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 한식 이미지 제고
- 현지인 선호 메뉴개발 및 외식업체 해외진출 촉진

18

다음은,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확대입니다.

식품산업과 / 농어업의 동반성장을 /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 2012년까지 /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하고 /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 공급을 늘려 / 급식의 품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2011년 농식품수출 76억불 / 2012년 100억불의 목표 달성을 위해 / 일본·미국 등 / 전통적인 수출시장 외에 / 중국에 수출전진기지를 건설하고 / 공세적인 마케팅을 /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

또한, 해외에 민·관 협력 방식으로 / 플래그쉽 한식당을 개설하고 / 현지인이 선호하는 / 메뉴 개발 및 외식업체 해외 진출도 / 촉진하겠습니다.

해외 농림어업 개발과 국제 협력을 연계, 개발효과 극대화

농업

- 정부간 협력을 통한 해외 농업개발(예 : 필리핀 MIC모델) 추진
 - ※ 민간기업의 해외 농장 개발 : ('10) 7개국 18기업 → ('11) 9개국 22기업
- 아시아, 아프리카 등 개도국에 대한 협력 사업 확대
 - 해외농업기술센터(KOPIA) 추가설치(5개국) 및 FAO·Gates재단과 공동 사업

수산

- 일·중·러 수산자원 외교 강화(자원확보 및 불법어업 방지)
- 페루·튀니지·솔로몬 등에 조업권과 연계한 ODA 사업 추진

산림

- 산림자원 외교 다변화로 '11년 해외조림 25천ha 실시
- UN사막화 방지 협약 총회 개최(10월) 및 아시아 산림협력기구 창설 추진

해외 농림어업 개발은 / 국제협력 사업과 연계하여 /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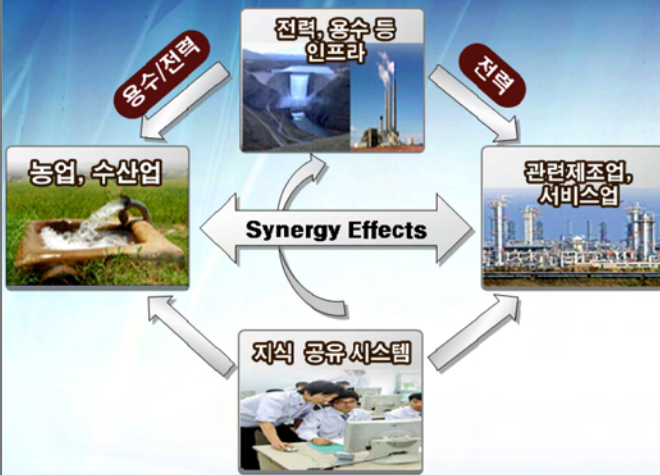
농업분야에서는 / 필리핀 MIC 사업과 같은 /
정부간 협력을 통한 해외 농업개발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수산분야는 / 일본, 중국, 러시아 등과의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
해외조업권과 연계한 ODA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산림분야에서는 / '11년 해외조림 25천 ha 조성을 추진하고 /
아시아권 최초로 UN 사막화 방지협약 총회를 개최하는 등 /
산림 자원외교를 다변화해 나가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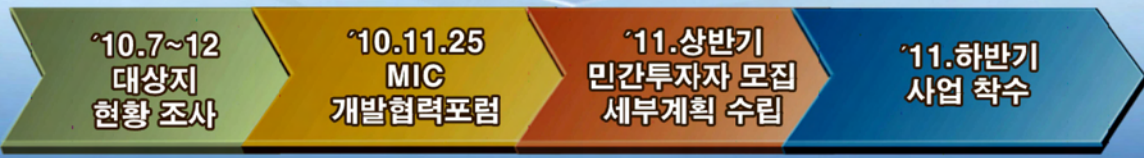
사례 : 필리핀 복합산업단지(Multi-Industry Cluster) 조성

II. 2011년 핵심정책 과제



> 정부간 협력으로 토지확보 후, 민관 협력 방식으로 추진
 - 농업 생산, 수확 후 관리시설 우선 시행
 - 바이오산업, 신재생 에너지 등으로 확대

우리의 경험 + 필리핀 잠재력 = 상생적 개발협력



20

다음은 / 2009년 5월 개최된 / 한·필리핀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추진되고 있는 / 필리핀 복합산업단지조성 사례입니다.

정부간 사전 협력을 통해 / 토지를 확보하고 / 민관협력방식을 통해 / 농업생산과 수확후 처리시설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 바이오산업,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2011년 상반기에 / 민간투자자 모집과/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 하반기에는 사업을 /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

천혜의 수산자원과 산림자원을 국가성장 동력화



- 갯벌을 활용하여 수출용 참굴, 해삼 양식 추진(25ha)
 - 대규모 자본유입 촉진을 위해 어장 임대차 허용 추진
- 외해 가두리양식장 5개소 신규 개발(참치2, 일반어류3)
 - 참치 완전양식을 위한 종묘 및 배합사료 생산기술 조기개발



- 리기다소나무 등 녹화수종을 경제수종으로 대체
- 국산목재 공급 확대(자급률) : ('10) 3.6백만^m (13%) → ('11) 4.2백만^m (15%)
- 펠릿수요 다변화 : 농가주택 위주 → 공공기관, 산업시설로 확대
- 저소득층에 녹색일자리 제공 : 6개 분야에 4만 5천명 고용

다음은, 수산 / 산림자원 조성입니다.

천혜의 수산자원과 산림자원을 / 국가 성장동력화 하겠습니다.

갯벌을 활용하여 / 수출용 참굴과 해삼 양식을 추진하고 /
외해 가두리 양식장 5개소를 / 신규로 개발하는 한편 /
참치의 완전양식을 위한 / 기술의 조기 개발에도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산업을 / 기존의 녹화수종을 경제수종으로 대체하여 /
국산목재 공급을 확대하고 /
목재펠릿의 수요를 / 공공기관과 산업시설로 확대하는 등 /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4만 5천명을 고용할 수 있는 / 녹색일 자리를 제공할 것입니다.

3 농어촌 지역 활성화

- 1 농어촌 활력 증진
- 2 농어촌 복지 지원 확대
- 3 보조금 등 지원체계 개편

22

다음은, 농어촌 지역 활성화입니다.

정예인력 육성으로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 창출(제 2의 새마을 운동)

인력 육성

- 농어촌 사회의 핵심리더 10만명 육성
- 핵심리더 주도하에 농어촌의 획기적 변화 도모
 - 의식개혁, 경영혁신, 특성화 마을 조성, 공동체 활성화 등

추진 체계

- 중앙과 지자체에 추진기구(범국민운동본부) 설치
 - 각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범국민운동 전개
- 마을에는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 운영

분위기 확산

- “(가칭)대한민국 농어촌 마을 대상” 시상
 - 잘하는 마을에 정책자금 등 집중 지원
- 1사1촌 등과 연계, 대국민 홍보 강화

정예인력 육성으로 /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겠습니다.

농어촌 사회의 / 핵심리더 10만명을 육성하고 /
핵심리더 주도하에 / 의식개혁, 경영혁신 등으로 /
농어촌의 획기적 변화를 / 도모하겠습니다. /

이를 위해 / 중앙과 지자체에 / 각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
범국민 추진본부를 설치하고 / 마을에는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
추진협의회를 운영하겠습니다. /

또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 / (가칭)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 시상 /
1사1촌과 연계한 대국민 홍보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2. 농어촌 복지지원 확대

II. 2011년 핵심정책 과제

복지지원을 통한 농어촌 사회 안정

생활안정

-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지연금(역(逆) 모기지론) 제도 시행
- 경영이양직불제 활성화 및 건강장수마을 조성('11년까지 582개소)

교육·주택

- 영유아(시설 미이용)양육비 지원 확대(35% → 45)
-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거치기간 연장(1년 → 2년)
- 농어촌주택개량(8,230호)

지역 공동체

-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적극적 복지』 실현
 - 농어촌 공동체회사 1,100개소 육성·건강한 복지 농어촌 만들기
 - * (사례) 양양 송천 떡마을 : 부녀자 참여 월 170만원 소득
 - 완주 안덕 체험마을 : 노인 참여 월 30만원 소득

24

농어촌 복지지원을 확대하여 / 농어촌 사회를 안정시키겠습니다. /

생활안정을 위해 /

농지를 담보로 하는 / 농지연금제도를 시행하고 /

경영이양직불제를 / 활성화하겠습니다. /

교육·주택 여건의 개선을 위해 /

영유아 양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

농어촌 출신 대학생의 / 학자금 용자 거치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

농어촌 주택 개량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 일자리 창출을 통한 / 적극적 복지 실현을 위해 /

농어촌 공동체회사 / 1,100개소를 육성하겠습니다. /

3. 보조금 등 지원체제 개편

II. 2011년 핵심정책 과제

보조금 개편

- 농어가 지원은 산업적 지원과 복지 지원으로 명확히 구분 운영
 - 대규모 농가 : 보조지원 단계적 폐지 및 장기저리 융자
 - 소규모 농가 : 직접지불금 및 복지지원 확대
-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장동력, 위험관리분야에 투자 확대

민간투자 촉진

-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농식품투자조합 확대('11년 10개 펀드, 2,320억원)
- 간척지에 대규모 농업회사(8개소), 수출 농업단지(15ha 완공) 조성

조직역량 강화

- 농협법 개정 조기 마무리, 사업구조 개편 본격 추진
 - '12년 출범이 가능하도록 자산실사, 자본금 확충, 조직개편 준비
- 농림수산식품분야기관간 중복·유사기능 점검, 효율화 추진

25

보조금 등 지원체제를 /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

농어가 지원은 / 산업적 지원과 복지차원의 지원으로 / 명확히 구분하겠습니다. /
대규모 농가에 대한 보조지원은 /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
장기 저리융자로 전환하며 / 소규모 농가는 /
직접지불과 복지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

농식품분야에 /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 농식품투자조합을 확대하고 /
간척지에 대규모 농업회사와 / 수출농업단지를 / 본격 조성하겠습니다.

농협법 개정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
농협사업구조 개편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

농림수산식품부 전직원은

농어촌이 잘살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전직원은 /
농어촌이 잘살고 /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 만화로 보는 업무계획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농어촌은 잘 살고,
국민들은 더
영복하게...

2011
calendar



연말연시 특집토론, '2011년 한국 농림수산식품 산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밤을 새워서라도 결말을 보고야 마는 열띤 토론이 시작됩니다!



고래 2011년은 위기요인이 많습니다! 재해와 가축질병이 잦을 것으로 보이고요. DDA 및 FTA 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 국제곡물 수급불안, 고유가 추세 지속으로 힘겨운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아~만석옹, 속사포 같은 열변에 충격을 받았나요?

마음을 가다듬은 만석옹, 침착하게 반격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가 된다는 걸 왜 생각을 못해요? 식품소비 패턴의 변화, 농어업과 농어촌의 새로운 가치에 대한 관심증가, 또 FTA를 통해 수출기회가 증가되는 면도 있잖아요.

흥! 그저 말뿐이지. 그걸 어떻게 실천할건데?

무슨 말씀, 2011년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그간의 개혁과제를 마무리하고 성과를 가시화하는 해입니다. 3분야 11개 과제를 중점추진할테니 두고 보시면 아실겁니다.



농림수산식품 분야 위험관리
성장동력 환충
농어촌 지역 활성화

뭐...뭐야?

네! 오늘 토론은 만석옹과 새농이의 완승입니다!

공정한 사회 구현,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실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잘사는 농이촌 행복한 국민

5대 분야 55개
연구개발(R&D)
과제 추진



올해도 풍년이구나
우리 부자야~
하하하하

그렇게
좋아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너무 많아서
참고가 팍팍
찾다고요...

와아~

휴..



현재 연구 중인 쌀가루 가공
기술과 쌀가루 제품 기술 개발이
완성되면 쌀의 활용 분야는 더욱
무궁무진해질 거야.

쌀과자
쌀떡
쌀로
빚은 술
우리쌀
고추장

아~

쌀 가공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리는 기술도 연구 중이랑요?



가정용과 공장용 쌀 가공기와
설비 개발이 완료되면
집에서도 다양한 쌀 요리를
즐길 수 있대요!!

차르륵

어머- 정말
편리하겠네?



걱정마
이 쌀들은 평범한 쌀이
아니라고!!

기능과 가공 적성에
적합한 맞춤형
품종이거든!!

당뇨예방
신장병치료 등
기능성 쌀

쌀가루
주류 등
가공용 쌀



그 뿐인가?
벼짚, 왕겨, 쌀 전분도
가공해서 신소재로
활용하면 고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으니
일석삼조지!!

벼농사 지어서
버릴게 하나도
없겠네요??

까아~

밥 쌀

기능성 쌀

신소재 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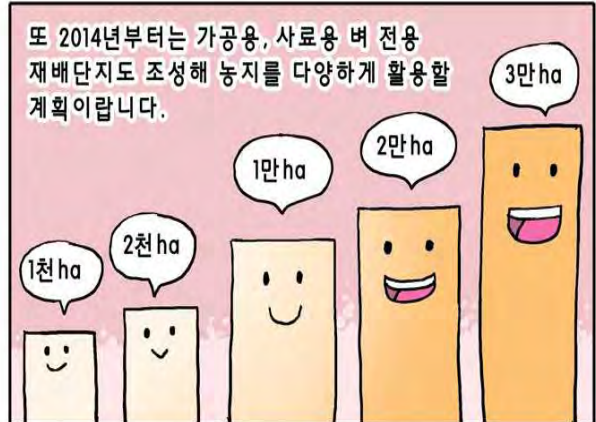
우와~
우리집 쌀부자
되겠다~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농업 다양화
적정면적 재배도모



그래서 2013년까지는 차이 나는 소득을 ha당 300만 원 기준으로 보전 지원을 하고 작물에 따라 제조비나 장비 구입비도 지원해준대요.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동반성장



성장단계별 맞춤지원과 우수기업 집중지원

창업
연상히 하자
더욱 열심히!

중소기업
연상히 하자

중견기업
연상히 하자

농업 창업 보육센터(10개소)를 활용한 융합기업 지원 확대

창업에 도와드립니다. 많은이들 오세요~

농어업과 중소기업의 융합촉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농어촌 중소기업 협력법도 제정해야겠네.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농산물 관련 공정거래 제도 정비 및 강화



농산물의 공정한 거래를 위해 판관 포청천에게 컨설팅을 의뢰하는데...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축산업 허가제 도입 등 가축질병 대응 강화



천상에도 구제역에 대한 슬픈 소식이 전해졌다.

후후후, 도대체 구제역이란
놈이 뭐길래! 우리 불쌍한
소, 돼지들은 어쩌며
축산농가들은 또 어찌할고,
애통하고 원통하구나.

이거 정말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농림수산식품부는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정말이요?
어떻게 말이요?

먼저 축산업 허가제를 시행할
것입니다. 차단방역, 환경관리
등 기본소양을 갖춘 분들만
축산업을 하게 하는 거죠.

축산농가의 질병에 관한 지식도
함양되고, 책임의식 또한 고취하려는
것이군.

가축중개상인 수송/사료차량 출입차량

외부인 (가축수송운전자 등) 축산도구,장화 인근 발생농가

또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 및 관계자에
대해 소독 및 기록관리를 의무화해서
다른 지역에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이력을 추적해
조기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축산농가 출입국 관리 및 검역 강화를
추진합니다.

축산농가가 가축질병 발생국을 방문할 경우
출국시 신고와 입국시 신고, 소독을
의무화하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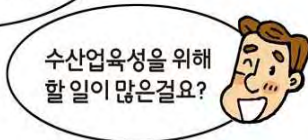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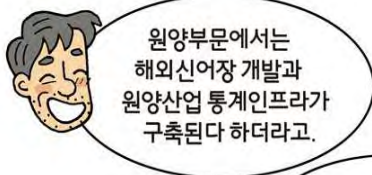
또한 구제역뿐만 아니라 악성
가축질병 발생시 초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교육을 강화하고
항원 진단키트 공급도 추진됩니다.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군요.

다시는 억울한 농업인과
가축들의 눈물이 없도록
해주시요.

잡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수산·산림 자원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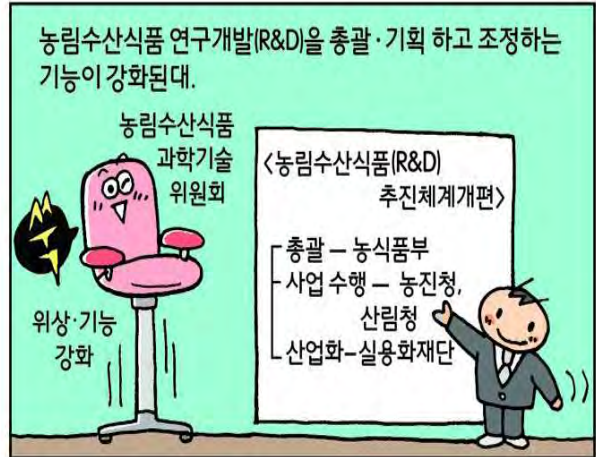


더불어 산림분야 농색일자리 창출효과가 숲가꾸기, 숲해설가 등 13개 사업에서 4만 5천여명이나 됩니다!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농림수산물 R&D 선진화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농림수산물 수출 확대

농식품 수출목표를 2011년 농림수산물 수출 목표를 76억 달러로 잡고 정부가 열심히 된다고 해.

헐! 우리 농식품이 생각보다 많이 수출되고 있네!

근데 어떻게 뛰는데?

연도	수출액 (억달러)
09	48
10	60
11	76
12	100

향후 최대수출국으로 예상되는 중국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해외수출전진기지를 구축한다.

물류와 마케팅기능 결합으로 한층레벨업!

한국농산품 중국(청도) 해외수출 전진기지 구축!

중국 최대 박람회 SIAL CHINA 2011

어서 오라해

대한민국 농산품의 우수성, 안전성, 친환경을 알릴 예정이다

아울러 안정적인 물량공급을 위해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수출업체를 양성할 거야. 그리고 품질·안전관리를 통해 신선한 농축산물을 수출하는 거지.

안전·고품질 수출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내가 탄생!

수출과정이 단순화 되어 신선한 고기를 수출!

부산 감청항내 (2013년 완공예정) 수출지향형 농어가 양성

생산자와 수출업체가 결합된 품목별 수출선도조직 확대

주력시장에는 수출을 더 확대하고 신흥시장은 마케팅 강화를 통해 시장 다변화를 노린다고 하고

직거래를 통한 대량수출

여지 대형유통업체

한국농산물 만났어요~

교민중심에서 현지인 시장으로 확산

한류 열풍을 이용한 마케팅, 유망품 발굴

시장조사, 테스트

일본, 중국, 미국 등 주력시장

ASEAN 유럽/중동 신흥시장

그리고 단순 보조성격의 수출물류비를 줄이는 대신, 신흥시장 개척 및 수출효과가 높은 품목에 집중지원을 한다는 말씀!

아하! 예를 들어 영수씨를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나에게 자네가 양보해야 한다는 말?

자네가 영수씨를 포기하게!

그건 아니지!!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온라인
직거래시장 등
신유통방식의
활성화



세상은 참 빨리 변하고 편리해지는 것 같은데
농사만큼은 변한게 없구만. 애써 농사지어 제 값
받으려면 하늘만 쳐다봐야 하니 말이야.



그걸리가 있네!
이제는
농림수산물
산업 유통도
새롭게
바뀌고 있어.

응?
어... 어떻게
말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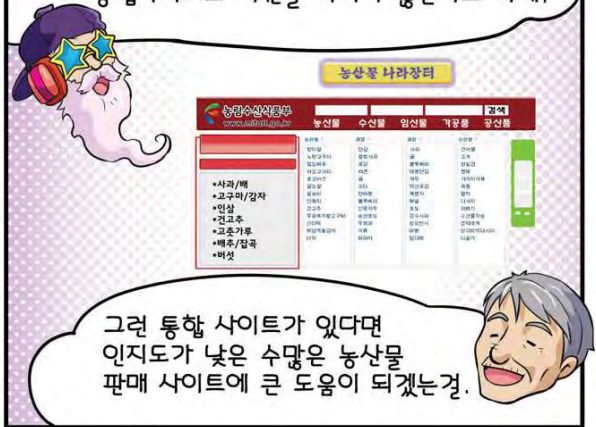


예를 들면 농산물 온라인 장터도
새롭게 부상할걸세.

에휴~
한다는 사람은
많이 봤지만 제대로
한다는 사람은 주변에서
보질 못했네.

* 현재 농산물 직거래 사이트는 2만여개가
운영되고 있으나 일부를 제외하고는 매출실적 저조

그것 때문에 정부에서는 [농산물 나라장터(가칭)]를
만들 예정이네. 소비자가 손쉽게 상품을 검색하고
다양한 농산물 쇼핑물에 접속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지. 또 농업인 단체에서 운영하는 우수
통합사이트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하네.



그런 통합 사이트가 있다면
인지도가 낮은 수많은 농산물
판매 사이트에 큰 도움이 되겠는걸.



그뿐만인가?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운동을 활성화시킨다네.
기업간 거래 활성화로 비용도
절감하고 대상도 학교급식
식재료를 조달하는 단체급식
시장으로 확대한다더군.

사이버거래소 회원중
참여회원에게 연중
일정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사전예약제도 운영할
계획이고.

듣고보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유통방식일세, 그려.



또, 농업인이 주체가 되어
지역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직거래 장터를 확충하고
우수한 사례를 찾아
확산시키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더군.

그래, 새로운 유통이
활성화돼 농업인들 모두
행복해졌으면 좋겠구만.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식품산업 인프라 강화 및 정비 제도



장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 식품산업 전략분야 지원



잡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벼와 쌀의 고부가가치화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새만금 등 간척지
활용 강화



대규모 농어업회사, 유리온실 등 첨단농업단지 조성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화옹지구 2011년 하반기 준공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

1월에 영산강 지구 잔여부지사업설명회, 상반기에 사업자 평가 및 선정!

바이오 에너지를 이용한 대규모 원예단지를 조성해 보려는데... 마땅한 부지가 없네.

뭘 망설여? 간척지가 있잖아!

새만금

더불어 새만금 지역을 수출형 복합농업단지 및 관광명소로 조성한다고 해.

- 방수제, 도로 등 기반 조성 및 내부개발이 추진되고
- 방조제 다기능부지 (195ha는 민간사업자 공모를 거쳐 주변관광자원과 연계해 개발됩니다.)

간척지를 단순 농지 중심에서 벗어나, 첨단원예, 생명산업 등 미래농업 및 수출전문단지로 조성하고

대규모 장기임대(최대 30년) 검토 및 미래형 간척지 민간투자를 유치·활용하는 방안 마련

더구나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와는 30분 거리! 대규모 장기임대까지 된다면 금상첨화네~

서두르는 게 좋을 걸?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농어촌 활력 증진



리더십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고요~

지도자 소양, 마을경영, 조직운영, 마을발전계획수립 등 교육

중앙과 지자체에 추진기구
농어촌 활력화 범국민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이장입니다~ 아침부터 반가운 소식 하나 알려드립니다.

농어촌 활력 증진을 위한 방안들이 나왔거든요.

정말?

각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범국민운동을 전개한대요. 그리고 농어촌의 마을단위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도 운영한대요.

농어촌 활력화 범국민운동본부

지역 리더, 전문가, 주민

정예인력 10만명을 육성해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화를 도모한답니다.

농어촌 활력증진

공동경영, 공동영농

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도 뽑고, 1사1촌운동을 널리 확대하는 등

진짜 신바람 나는 소리들이구먼~

농어촌의 활력있고 희망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많은 노력이 있을 겁니다.

잡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산지유통주체 육성을 통한
시장교섭력 강화



(RPC : 미국 종합 처리장)



쌀 사세요~
햅쌀이 아주
맛있어요~

틀렸어...
너무 목소리가
작아서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잖아.



그럼 우리도
RPC 연합을 만들자!!
수평적 계열화로
대형 유통회사가
되는 거야!!

일반
도정업체도
참여해도
되나요?

물론이지!
다 모여!



쌀 사세요!!
쌀이요~

규모가 클수록
인센티브는 더욱 커지고,
시장에서의 교섭력
또한 커집니다!

우루루

어서오세요~

어머나
여기에서
사봐야겠다!!



길 건너 새로 생긴
쌀 전문 조합 연합회나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RPC가 공동 출자한
대형유통회사 정도는
되어야 사람들이
알아준다고.

대형 유통센터

저기가
그렇게
싸고 편하대~

우루루~

장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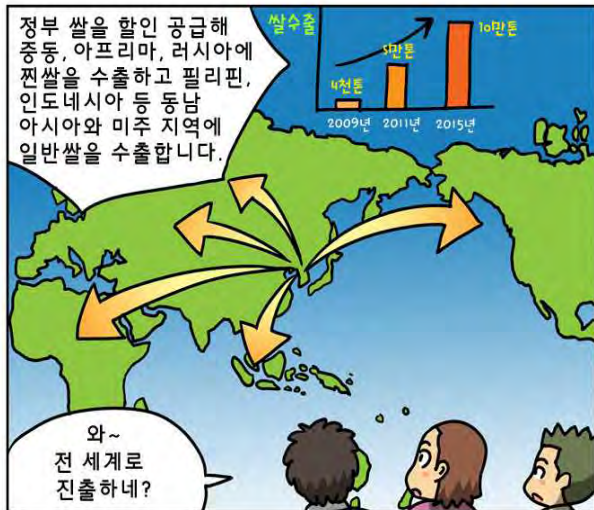


농식품 모태펀드 내실화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쌀 수출 본격 확대



장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가공원의 인형적 공급과
쌀 가공산업 경쟁력 강화



슬슬
내년 농사를
준비해야지~

영차

아버지
우리 이번엔
이 쌀로
심어보죠?



? 그게 뭔데?

정부에서 보급해 준
쌀가루 가공용 쌀인데요.
이걸 재배하는 농가와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준대요.



안정적인
쌀가루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농협 및 민간 RPC를
쌀 가공식품 생산지로
육성하고

부응~

밀가루
제분업체도
쌀가루 가공에
참여하게 유도해서
쌀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시킨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쌀 가공식품이
장래성이
있나?

「쌀 가공산업 진흥 및 촉진 법률」이
제정되면 쌀 가공업체 시설 확충 등
경영개선을 지원하고 융자 지원도
확대한다고 해요.

그리고 쌀 제품 중심
외식 프랜차이즈
사업도 육성한다니
수요가 많아질 거예요!!



그래?
그럼 나는 시내에다가
쌀 가공 식품 가게
하나 차려 볼까?

그거 좋지!!
쌀 국수집
차려줄까?
쌀 피자집을
차려줄까?

하하하

그것도 좋겠네요!!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생명자원의 확보 및 산업화



그리고 고부가 신소재 개발 등 생명산업 R&D를 확대하고
기반도 구축한다고 해. 천연색소산업화 지원센터,
곤충생산단지, 학습체험시설 등도 조성할 계획이고.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친환경 농업육성

우리 농업이 1차 산업의
한계를 벗어나

가공·유통 등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친환경
농업으로의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르르~

동영상
만드는 중

소비자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기 위해 생협과 전문유통업체 등에
지원을 늘립니다.

생산자+생협·식품·유통·외식업체까지

직거래매취자금

서로 힘을
합쳐

농협

생협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늘려봅시다.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환경도
조성합니다.

친환경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격 및 인증정보,
국내외의 수급현황 등을
한 눈에!

의무인증제

재포장
유통업체

국제화된
심사매뉴얼 (CCP)
제정·운영

친환경 농업기반을 더욱 확대해 저탄소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고,

유기질비료·토양개량제
및 녹비작물중자의
공급 확대로

-화학비료 사용을 줄여
흙을 살리자-

시·군 단위
친환경광역단지 지정확대

마을단위 친환경
농업지구 지정확대

또한 친환경·동물복지형 축산물을 생산 기반도 구축됩니다.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을
위해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고

친환경 안전
축산물 직접
직불제 대상에

오리도
추가요~

고부가가치 친환경농산물 가공산업의 기반을 확충합니다.

산·학·연·관
협력체제로
가공기술 상용화
적극 지원!

후레이크

소비자수요를 반영한
다양한제품과맞춤형가공시설
설치로 품질관리에 힘씁니다.

와아~친환경 농업
육성 동영상 올리자
마자 주문 전화가 오네?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시작된 거지~

따르릉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농식품 안전관리 시스템 강화



요즘은 좋은 음식을
찾아서 먹는데도

조금 걱정이 돼.
속이지는 않는지,
먹어도 안전한지,
해는 없는지 말야.

걱정하지 마세요.
소비자를 위한
**농식품 안전관리
시스템이 강화
된대요.**

또 위해요소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위험관리 선진화'를
추진합니다.



농작물용 고독성 농약사용 금지
축산 항생제 사료첨가 전면 중단

HACCP 적용대상을 확대 및
GAP 관리시설 확충



축·수산물에 대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 등

아울러 농수산물검역검사청이 새로 설립됨에 따라 검역을
선진화하는 방안을 수립해 추진합니다. 그리고 위험정보교류를
활성화해 소비자 신뢰를 높입니다.

과학적 원리와
국제기준에 맞는
검역제도 마련

식품안전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관련
법령 정비

GMO 등 신식품
관련국제동향
전파



첫 번째로 과학적인 안전관리의 기반이 되는 '위험평가 기능'이
대폭 강화됩니다.



중금속, 미생물,
화학물질 등
잔류허용치 재설정



품목별로 분산된
위험평가를
표준화 함

위험평가에서
관리와 정보교류까지!
어때요? 믿을만
하죠?

알았다.
밥이나 한 그릇
더 줘!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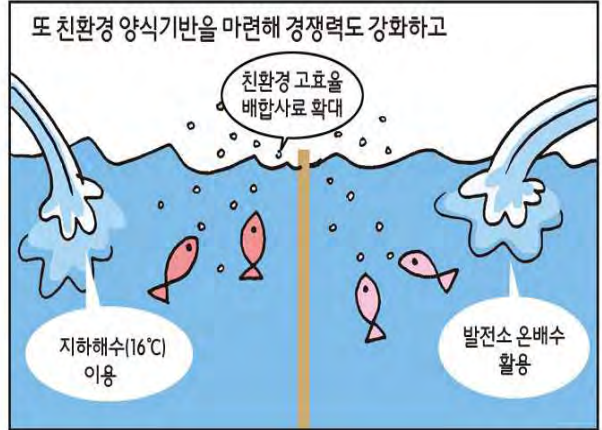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수산자원 관리강화



잡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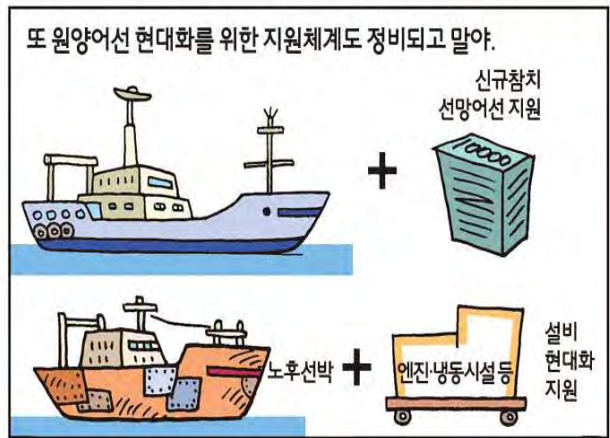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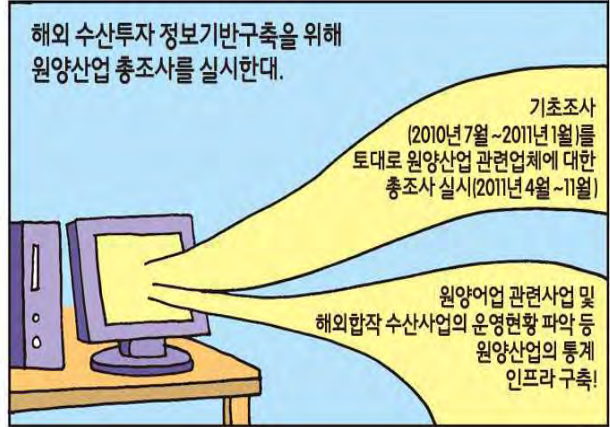
양식산업 성장동력 확충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원양산업 경쟁력 제고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도시농업 활성화



도시의 빈 공간을 활용하는 옥상농원, 스쿨팜(School Farm) 등을 조성하고 본격적인 도시농업 활성화에 들어갑니다.



도시에서도 식물이 잘 자랄 수 있게 인공 광원과 최첨단 농법에 대한 연구 개발이 확대됩니다.



자연친화적 도시환경 조성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구축됩니다.

도·농이 서로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도시농업 활성화! 곧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미래 농어업인력 육성



그래서 젊고 유능한 신규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 유인대책이 추진 중이야.

영농정착 교육과정운영

농대생 대상

안정적 후계인력 양성교육기반 마련

현장훈련 및 진학우대

농고생 대상

성장동력과 미래가치, 고부가가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

우리 농업에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뭘까?

또 후계 농어업경영인의 창업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식도 개선된다.

후계농업인 자금 지원

2억 원 한도내에서 자율신청방식으로 3년간 대출 가능!

후계어업인이 쉽게 진입할 수 있게 지원대상 확대

2010년 504명 (200억 원) → 2011년 1,000명 (400억 원)

바로 사람이지!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 농어업 인력말이야.

맞아. 사람이 최고 중요하지.

우리 마을에도 젊은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

뭐야, 우리도 미래 농어업인력 중 하나라고!

장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농어촌 관광 활성화 및
도농교류 저변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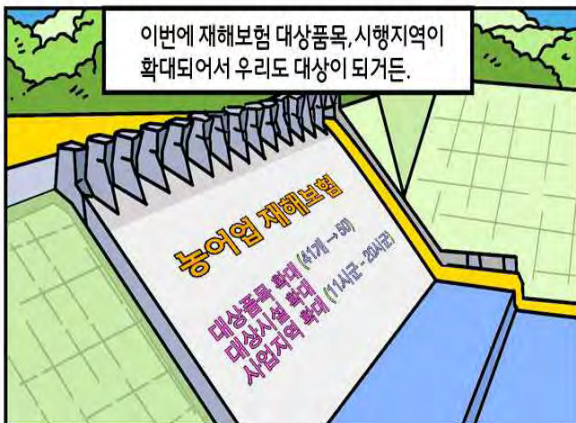
여기뿐 아니라 다른 농어촌 마을도 관광명소를 발굴해서 상품화 하는 건 물론, 서비스 수준도 높여 도시민들의 농어촌 체험기회가 늘었다는군.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농어업 경영안정장치 확충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장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농어촌 복지지원 확대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농촌 맞춤형
지역개발 및 주거여건 개선



장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쌀 제품 소비 제도화 및 홍보 강화



또 농업·지자체 등의 쌀 문화체험관, 쌀 갤러리(gallery) 설립을 지원하고 소비지 대형 유통업체에 쌀 제품 전문매코너를 설치하면 관심을 더 가지게 될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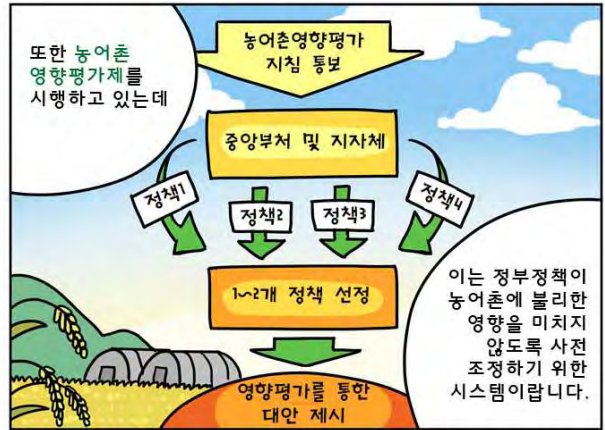


어른들에게는 쌀 면류 입맛 들이기 대중화를 추진하고 있지.



작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농어촌 공공서비스
지원정책 강화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어선 안전사고 예방



노후어선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준이 강화되고

- 선체두께 계측 등 선령별 안전검사 기준 강화
- 어업지도사무소 기능 강화와 전문 안전교육 과정 신설
- 주요 고장부위인 기관의 검사 및 전기설비의 절연성능 시험 강화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신속한 구조체계도 갖추게 된다.

길이 45m이상 어선, 13인 이상 승선 낚시어선에만 적용하던 자동위치발신장치 설치를 전체 어선으로 확대하고

구명조끼 및 구명뗏목 보급도 확대

또 선체불량으로 인한 사고발생을 막기 위해 노후어선 대체 및 기관·장비의 현대화를 추진한다고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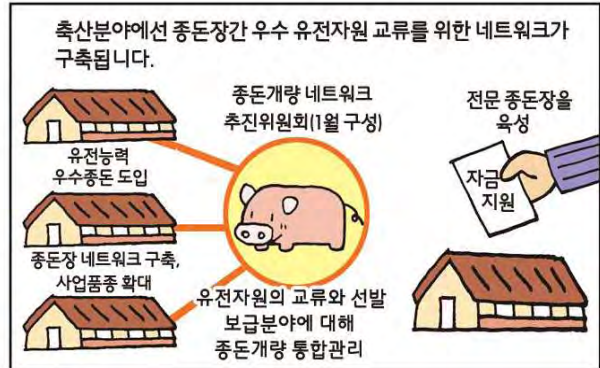
노후화된 어선은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어선으로 대체 지원 추진!

노후한 원양어선의 현대화를 위한 예산 확대 지원!



장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종자산업 육성 기반 확충



방사선육종센터가 기본·세부 설계를 끝내고, 올해부터 시설공사가 시작된다. 민간육종연구단지도 설계에 들어간다니

앞으로 민간육종 인프라 구축으로 육종의 다변화와 활성화를 기대해도 되겠네? 신품종 육종의 시너지 효과도 말아야.

수산분야에는 품종보호 시행을 대비해 해조류 신품종 개발이 확대되고, 산림분야에서는 우수산림 종자·묘목 생산으로 산지를 녹색자원화합니다.

- 수입대체 및 수출전략 품종의 이원화 체제로 개발
- 신품종 여부 확인을 위한 출원품목 표준심사기준 마련

백합나무 등 기후변화 대응 수종의 종자 및 묘목 생산확대

종자 수출과 수입대체 품종개발을 위한 R&D 투자도 확대한다던데?

종자수출 등 차별화된 성과를 위한 Golden Seed Project도 2012년부터 추진한다.

로열티 확보등을 위한 해외출원 및 국외 적용성시험도 확대됩니다.

민간육종분야 지원 확대 (2011년 242억)

2010년 192억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예정대로 척~척~ 진행된다면?

종자산업이 미래의 성장동력산업이 되는 건 이제 시간문제!

척-척-

또 유통종자의 품질 강화 등 종자산업 육성 기반이 구축됩니다.

종자보증·DNA 검정 등 종자 품질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융복합연구센터(ARC), 석·박사인턴제 등을 통한 육종인력이 양성됩니다.

농진청 육종기술지원센터 운영으로 육종기술관련 서비스가 지속됩니다.

잡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3. 도매시장

운송물류체계
유통구조 개선



도매시장은 그동안 경매위주의 거래방식으로 효율성이 낮고, 산지, 소비자간 유통환경 변화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될 운송물류체계를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출하시 파레트가 의무화된 모습이 보이시죠? 2011년 배추 품목부터 시범사업 실시 후 전 품목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2012년에는 하역효율화를 위해 하차 경매제가 도입되고 이를 위해 2011년에는 락 시설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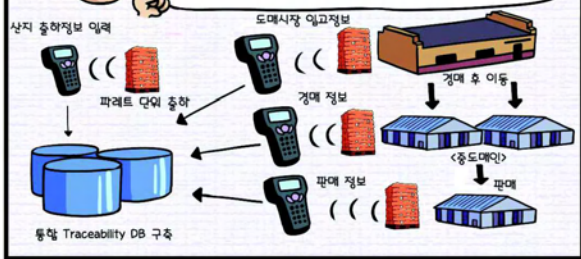
농업인, 유통업 종사자들이 모두 협조해 줘야 할텐데요...



수송차량은 지게차 하차 후 바로 현업 복귀가 가능해 효율성이 높고요. 출하자에게도 요금경감 혜택을 줘 이용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산지부터 도매지까지 RFID 등 첨단기업을 도입한 광경입니다. 물류의 실시간 운영상황이 파악되고 반입량이 자동집계되고 있죠?

이 또한 조기정착을 위해 주차로 면제, 경매우선권 부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시뮬레이션 결과 물류효율화에 큰 성과가 있지 않습니까?



도매시장 물류체계 개선에 큰 도움이 되겠군요. 물류효율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크게 기대됩니다.

장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사전적 생산조정 시스템 구축



(주)생산조정 시스템 사 이사

농수산물 수급안정 회사인 (주) 생산조정 시스템 사회 최종면접일, 치열한 경쟁을 뚫고 두 사람이 남는데~

자신이 회사에 꼭 필요한 인재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실까요.

관측 품질을 향상하고 관측한 정보의 활용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측 프로그램을 보완해 기상 변화 시나리오별 생산량 예측 모형을 개발해 활용하는 관측정보 또한 좋습니다. 조사대상도 가격변동성이 큰 채소류 중심으로 확대하고요.

기상급변기에는 수시로 발행하고 생산자 이외에 유통, 가공업체에도 정보를 제공해 활용도를 높이는 겁니다.

좋은 아이디어로군요.



뭇 좋은 얘기입니다만, 계약재배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안정적인 수급과 출하조절을 위해 계약물량을 증장기적으로 30% 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고 계약조건도 농가가 선호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금운용 또한 개선해 자금을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시는 건 어떨지요? 운용자금을 중앙회가 직접 운영하고 자금 지원기간 또한 품목별 생육기간에 맞춰 합리적으로 축소 조정하는 겁니다.

대단하십니다. 이제 최종 결과를 말씀드려야겠군요.

크옥



두 분다 합격입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제 생산조정 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된 것 같습니다. 함께 잘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농업관측 강화와 계약재배 사업의 효율성 제고, 이를 통한 사전적 생산조정 시스템 구축을 통해 농산물 수급안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잡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소비자에 대한
가격정보 제공
강화



* 농수산물 도,소매가격: 도매 75품목, 소매 64품목
* 친환경농산물 소매가격: 30품목
(12개 도시, 24개 대형마트)



이것 때문에
또 나 피곤하게
할거지...?

깡깡한 주부님,
잠시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그래,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거야.

흐음.



물론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
최저가 매장 등을
실시간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준비중입니다.

정말?!



정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지역 및 표본수도 확대
합니다. 이제는 좀 어떠세요?

* 소매: 재래시장 5개소->
34/도매: 5개소->15

깡깡한 주부도
감탄한, 더욱
빠르고 더 정확해
진 농수산물 정보
가 소비자분들을
찾아갑니다.

흐음, 좋았어.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가 격 아 저 대 미 위 기
가 노 오 초
다 계 변 수 급 아 전
노 2 노 노 노 노
매뉴얼 마 려 노
노 노

*가격안정대: 5년간 평균가격 대비
실제가격 변동율의 평균
*위기 구간: 주의->경계->위기 3단계 설정

< 위기단계 및 매뉴얼 >

위 기	예외물량 도입, 관세인하
경 계	계약물량 공급확대, TRQ수입 · 증량
주 의	수입 가능성 조사, 생육촉진, 규격외품 출하
중심가격	가 격 안정대
주 의	수출 가능성 조사, 작목전환
경 계	유통협약, TRQ수입증단, 계약물량 줄이억제, 가공용 공급
위 기	유통명령, 과잉물량 추가 폐기 · 저장, 소비확대

장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위기 대책 완비로 농산물 수급안정 대상목



새농 신경님
이게 뭐니까?

농산물 수급안정을 위해 일하다 보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하지 위기가 발생할때마다 그 호리병을 하나씩 던져 깨뜨리게나



빨간 호리병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할 때 사용해야 하네. [가격안정 명령제]를 도입하고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수의, 정가매매를 활성화하고, [출하예약제]를 시범도입하라는 내용일세.

가격안정 명령제: [가격안정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승률을 제한하는 명령을 발령하는 것

출하예약제: 사전협의를 통해 약정한 시기에 물량을 출하하는 방식/물량부족 시 계약물량 출하유도



그렇다면 가격이 폭락하고 있을때는 어찌해야 합니까?

파란 병을 던지게. 우선 2003년 이후 동결된 최저보장가격의 현실화가 시급하네. 또한 경영안정 대책으로 경계단계에서는 자율적 시장가격리를, 위기단계에서는 정부주도로 과잉물량을 시장가격리 조치해야하네.



또 자조금 단체의 소비촉진 홍보를 적극지원하고, 가격불안이 심화될 경우 유통명령을 발령해야 할것세.

알겠습니다,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호리병보다는 그냥 정책에 반영해서 실행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호리병은 무거운데다 깨뜨리면 치우기가...

또 정부는 가격안정화를 위해 비축규모를 확대하고 수입절차를 개선해 위기 경보시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뭐... 뭐야!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2. 산지단계 유통구조 개선



김치 없이는 못사는 명탐정 흠즈는 최근 배추파동에 분개해 원인을 찾아나서는데

흠즈, 원인을 찾아냈나?

물론이지, 왓슨. 기상조건이 좋지 않아 생산량이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네. 하지만 복잡한 유통구조도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겠어.

김치 못 먹은 거 생각하면 정말...

부부 부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산지에서 먼저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군. 생산자의 조직화, 규모화가 필수인데 워낙 영세한데다 산지유통인과 포전거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더군. 이것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

고민

유통비용 절감하고 거래방식 선진화하면 되는거 아냐?

탈 탈 탈 탈

헛!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건지요?

포전거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협의 비중을 키우는 거야. 반면 농어민들에게는 계약재배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또 산지유통인인 법인화에 혜택을 준다면 거래가 투명화되고 선진화되지 않겠어?

이 흠즈도 놀랄만큼 명쾌한 해답이었습니다. 경계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산지단계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농식품부 올해 정책인데? 자네들은 인터넷도 안하나?

저...저희만 몰랐군요...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생산자단체(농협)의 유통기능강화



소비지로 향하는 트럭

아우~! 내 피부
거칠어지는거 봐.
난 배추인데 파김치가
될 거 같아.

재미없거든?
그리고
도착하면
나아질테니 좀
참아!



모르는 소리!
소비지에 도착해도
다시 몇 군데를 둘러야
소비자에게 가게
된다고.

그...그게
정말이야?



유통단계가 길어질수록 농산물 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거든. 그래서 산지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빨리 가는 길을 찾아야 하는 거라고...

오~저런.



너무 투덜대지들마.
내가 얼마 전에 들으니
소비지 물류기능을 강화하고
유통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응?
정말이야?

농협의 도.소매 기능을 강화해 소비지에
도매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농협중앙회가 전국을 4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준비 중이라는군...



대형유통업체, 외식.급식업체, 가공업체에
농산물을 직접 공급할 뿐 아니라 소매상, 식당
등을 대상으로 '예약 공동구매'도 도입한다고 하니
기대해도 좋을 거야.

소비지 물류기능은
강화하고,
소매단계 유통비용은
최소화되는군.



이제야
마음이
놓이는군.

Ⅲ

보 도 자 료

1. 보도자료



Press Release

보도자료

제공일 : 2010. 12. 26.

제공자 : 농림수산물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과 장 : 김 인 중

서기관 : 박 선 우

전 화 : 500-1617, 1618

쪽 수 : 16 쪽

이 자료는 2010년 12월 27일 17:30 이후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도 농림수산물부 업무보고 -

- ◇ 구제역, 농수산물 가격불안 등 위험관리 대폭 강화
- ◇ 농식품 수출 76억불 달성 목표로 총력 대응
- ◇ 10만 정예인력 양성, 농어촌 활력창출을 위한 범국민운동 전개

- 농림수산물부(장관 유정복)는 12. 27(월) 16:00부터 농림수산물부 대회의실에서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하였음
- 이번 업무보고에서 농림수산물부는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i) 농림수산물분야 위험관리 강화, ii) 성장동력 확충, iii) 농어촌 지역 활성화 등을 핵심 과제로 보고하였음
- 이와 함께 '농수산물 가격불안 해소'를 주제로 민·관합동 심층 토론을 실시하였음
- 농림수산물부의 2011년도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구제역, 농수산물 가격불안 등 위험관리 대폭 강화

(축산업 허가제 도입 등 가축질병 대응 강화)

- 축산농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축산업 허가제 도입, 질병 발생농장의 보상금 삭감, 축사 출입 차량과 인력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 의무화,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교육·소독 의무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였음
- 또한 축산농가의 해외여행후 입국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하는 한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 발생원인 제공시에는 농장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지자체의 예찰·검사 및 초기 진단능력 제고를 위해 지방 거점지역에 정밀검사기능을 갖춘 진단 실험실 설치를 추진하고,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 항원 진단 키트를 공급하기로 하였음

(농수산물 가격 불안 해소)

- 농업관측을 재배면적·작황중심에서 시세예측 중심으로 정밀화 하고, 기상 이변시 월 1회 실시하던 관측을 3회로 늘려 실시하기로 하였음
- 주요 수급불안 품목의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현재 생산량의 10% 수준에서 '15년까지 50%로 대폭 확대하고, 저장성 있는 양념류·수산물의 비축물량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도매시장 가격 급등락을 완화(가격조정제 도입 등)하기 위한 농안법 개정을 추진하고, 거래방식도 농가의 선택에 따라 경매 외에 정가·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사이버 거래소를 활성화하고 바로마켓과 같은 소비지 인근 대형 직거래 장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및 생활협동조합 등과의 직거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쌀 수급안정)

- 쌀의 수급안정을 위해 논 4만ha에 타작목 재배를 추진하고, 정부쌀 할인공급과 가공용 쌀 재배단지 조성, 핵심가공기술 개발을 통해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RPC의 통합·규모화와 쌀 자조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또한 관세화 논의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12년 관세화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2. 농식품 수출 확대, '11년 76억불 달성 추진 ('12년 100억불)

- '11년 중국 청도에 물류 서비스 및 시장분석 등을 담당하는 수출전진기지를 건설하고, 공세적 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수출 목표 76억불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음

※ 농식품 수출 : ('07) 37.5억불 → ('09) 48.1 → ('10) 60 내외

- 또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발효식품산업, 기능성 식품과 식품소재·기자재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14년 완공을 위해 '11년부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학교 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한 시범사업(5개소)을 추진할 계획임
- 아울러 민·관 협력 방식으로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 외식업체의 해외진출 촉진 등 한식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음

3. 정예인력 10만명 육성으로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화 추진

- 농어촌의 활력화를 위해 농어촌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정예인력 10만명을 육성하고, 정예인력 주도하에 의식개혁, 경영혁신, 특성화 마을 조성,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여 농어촌의 획기적 변화를 도모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중앙과 지자체에 민간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추진기구(범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마을단위에도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임
 - 아울러 농어촌 활력화를 위한 국민운동의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1사1촌 운동 등과 연계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마을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마을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집중지원하고, 가장 활력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가칭) 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을 시상할 계획임
- 이상의 3개 과제를 포함한 2011년도 중점 추진과제(11개 과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농가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차단방역, 환경관리 등 기본 소양을 갖춘 자만이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제 도입(축산법 개정 추진 중)
-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고용 신고, 교육 및 소독 의무화, 미 이행시 5백만원 이하 과태료(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추진 중)
 - 최초 채용 및 자국 방문후 입국시 소독 및 격리기간(5일) 준수 등

□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 및 관계자(수의사, 인공수정사 등)에 대해 소독 및 기록관리 의무화(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추진 중)

- 질병 전파 방지, 발생시 신속한 이력추적 등을 위해 가축거래 상인 신고제 도입, 미신고 상인 가축 거래 금지(축산법 개정)

□ 축산농가 출입국 관리 및 검역 강화 추진

- 축산농가가 가축질병 발생국을 방문할 경우 출국시 신고와, 입국시 신고·소독 의무화(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추진 중)
 - * 입국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검사·소독 등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 벌금, 발생국 여행후 질병발생시 보상금 삭감 등
- 법 개정 전까지 출입국관리소, 세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소독필증을 받은 경우에만 공항만을 벗어날 수 있도록 조치

□ 악성 가축질병 발생시 초기 대응 체계 강화

- 지자체 가축방역관 예찰·검사 및 초기진단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지자체 위생시험소에 항원 진단키트 공급 추진
- 발생시 초동대응팀과 동시에 초기매몰처리팀 현장 투입

- 관측기능 강화 및 위기대응 체계 조성을 통한 수급안정 도모
 - 시세예측 추가 등 농업관측 기능을 강화하고 수급대책과 연계
 - 심각한 공급부족 전망 시 추가면적 확보, 해외 계약재배 등 추진
 - * 관측 발간주기 개선 : (현행) 월1회 → (개선) 기상 급변기(7~10월) 수시발행
 - 채소류 계약재배 내실화 및 양념류·수산물 비축규모 확대
 - * 채소류 계약재배 확대 : (현행) 소비량의 10% → ('11년) 15%(배추·무 20%)
 - * 비축 : 양념류 수요량의 5%(현행 3%), 수산물 1%(현행 0.5%)로 확대
 - 가격 급등락 완화(가격조정제 도입) 등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농안법 개정 추진
 - 수급불안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대(최근 5년간 가격 변동율 기준)를 설정하고, 가격 수준에 따라 주의·경계·위기 단계별로 대응
- 농산물 유통효율화를 위한 거래방식 다양화 및 유통구조 개선
 - 산지농협은 계약재배·상품화에 집중, 농협중앙회는 판매기능 강화
 - 도매시장 유통주체간 정산조직 신설 및 정가·수의 매매 활성화
 - 배추 하차경매제 시범도입 및 IT 연계를 통한 물류비용 절감
 - 사이버거래소를 통한 B2B 활성화, 정례 직거래장터 확충
-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을 위한 규정 정비 및 실효적 수단 강화
 - '농수산물 거래에 관한 고시' 신설 검토 및 공정위와 협조체계 강화
 - 생산자 교육, 불공정거래 대응 매뉴얼 배포 등 산지대응력 강화

□ 쌀 수요에 맞춰 쌀 생산량을 줄일 수 있도록 밥쌀용 벼 재배 면적을 '15년까지 70만ha 수준까지 축소

* 벼 재배면적(밥쌀/전체)(천ha) : ('10) 856 / 892 → ('11) 808 / 844

○ '13년까지 4만ha의 논에 콩, 옥수수, 조사료 등을 재배하여 매년 20만톤씩 쌀 공급량을 감축

* 타 작물 재배(40천ha) : 조사료 10천ha, 콩 8, 채소등 17, 다년생작물 5

○ 2012년 관세화를 위한 논의를 2011년에 마무리하여 '15년 이후 매년 6만톤의 수입쌀 감축

* 쌀 MMA 물량(천톤) : ('11) 348 → ('12) 368 → ('13) 388 → ('14) 409

□ 현재 쌀생산량의 6% 수준인 가공용 소비를 '15년에 일본 수준인 15%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쌀 가공식품산업 적극 육성

○ 쌀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5대 분야 55개 과제 R&D 지원

* 5대분야 핵심과제 : 기능성·가공용 품종(12종), 쌀제품 가공기술(15종), 가공기기(8종), 쌀·부산물 이용 신소재(8종), 가공제품 품질제고(12종)

○ 쌀 가공업체의 안정적 원료공급체계 구축

- (1단계) 가공업체에 정부 쌀을 3년간 할인 공급('11년 38만톤)

- (2단계) 가공용 쌀 전용재배단지 조성 : ('11) 1천ha → ('15) 30천ha

□ 산지유통주체 육성으로 시장교섭력 제고

○ 쌀 대표가격 형성을 위한 사이버 거래 활성화

○ RPC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해 규모별 유형화하고 차등지원

○ 쌀 자조금을 조성하여 자율 수급조절기능 강화

-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 선제 대응을 위해 예측·평가 능력 강화
 - 웹기반 지대별 농업기상정보 생산 및 제공 체계 개선
 - * 농업기상정보 : ('10) 월 2회, 문서서비스 → ('11) 월 3회, 웹서비스
 - 작물재배지 북상 등 재배환경 변화에 따른 적응재배기술 개발
 - 작물 주산단지 변동 모니터링 및 지도 작성, 작물별 재배적지 선정, 최적 재배관리 지침서 발간 및 보급 등 추진

-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농어업재해 제도개선 및 지원강화
 - 신종재해 출현 대응을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 추진(6월)
 - 폭염 및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농업재해 범위에 신규로 포함하고, 최근('10.1~4월) 발생한 일조량 부족 피해를 명문화

- 노후어선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조체계 구축
 - 노후어선의 선체 두께 계측 등 선령별 안전검사 기준 강화
 - 주요 고장부위인 기관의 검사 및 전기설비의 절연성능 시험 강화
 -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자동위치발신장치 설치범위 확대(어선법 개정)

- 산림재해 유형별 저감대책 강구
 - (산불) 예방과 조기진화를 위한 감시인력 3만명 운영, 감시 카메라 등 장비 확충 및 헬기 진화역량 강화
 - (병해충) '13년까지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 병해충별 맞춤형 방제 및 외래해충 예찰 강화
 - (산사태) 재해취약지역의 사방사업을 통해 수해피해 예방

- 방향성 있는 R&D 투자를 확대하고, R&D 총괄 조정·기획 기능을 강화하여 투자 효율성 제고
 - 투자규모를 대폭 확충(전년대비 11.2% 증가)하고 농정현안, 미래수요, 국가기반 연구 등 방향성 있는 R&D 투자
 - * ('10) 7,752억원(농식품부 2,377, 양청 5,375) → ('11) 8,623억원(2,797, 5,826)
 - 다부처 대형 R&D사업 공동기획을 적극 추진하고 기획역량 강화를 위하여 “부·청 공동기획단” 구성
 - * Golden Seed 프로젝트(부·청), 생명자원소재산업화-이어달리기(교과부·농진청), 바이오정보산업(국과위, 지경부·복지부), 지능형환경관리(국과위, 4개부처) 등
- 농림수산식품분야 R&D 총괄·조정(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의 위상·기능 강화를 위한 농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개정(자문기구 → 심의기구)
 - 부·청, 산하기관간의 역할 재정립 등 추진체계 개편
-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도 제고 및 우수기술의 실용·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제 구축
 - 우수기술보유 기업에 신용보증 및 저리 융자지원 도입(12년 시행)
 - 민간 R&D기반확충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제품생산 대행 조직을 육성하고 현장우수기술을 발굴·지원(10억원) 추진
 - * CRO(연구) :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예) 네덜란드 Key Gene사: 분자미커개발 등 대행
 - ** CMO(생산) :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 기능성식품, 식품소재산업 집중 육성 및 김치, 우리 술 등 전통·발효식품의 산업화 촉진
 - 건강기능성식품 인정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 확대, 식품소재 연구개발 강화 등을 통해 수입소재의 국산화 대체 강구
 - 술과 천일염에 대한 품질인증제 도입, 김치 품질 표준화 및 맞춤형 생산·공급체계 구축으로 상품 김치 소비 확대
- 식품 중소기업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
 - 식품외식종합자금('11년, 700억) 신설로 시설자금 등 저리 융자지원, '식품산업진흥지원센터' 운영으로 컨설팅·기술지도 등 지원 강화
- 식품종사 인력의 직업 교육을 활성화하여 산업경쟁력 제고
 - 식품 제조·가공, 품질·위생관리 등 교육을 수행하는 식품 산업 인력양성기관 지정
- 북미, 동아시아 중심으로 한식세계화 집중 추진
 - 고품격 한식전파를 위해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미국)
 - 국제한식조리학교 육성 및 외식기업 해외인턴제도 도입(200명)을 통해 한식세계화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
- 내년 농식품 수출목표는 올해 보다 27% 증가한 76억불로 설정
 - 해외 수출전진기지(중국 청도) 및 수산물 수출가공단지 건설(부산) 추진하고 현지 대형유통업체와 거래 확대

* 수출실적·목표 : ('09) 48억불 → ('10) 60 내외 → ('11) 76 → ('12) 100

□ 민간 중심 농림수산자원 개발과 ODA를 연계하여 상생적 개발효과 제고

○ (농업) 안정적 확보 체계 구축 및 개발 대상국가 확대

- * 예산 : ('09) 240억원 → ('10) 240억원 → ('11) 320억원
- * 진출(누계) : ('09) 5개국 10기업 → ('10) 7개국 18기업 → ('11) 9개국 22기업
- 정부간 사전 협력으로 토지확보 후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추진방식(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 도입 추진
- * '필리핀 복합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KOICA, 11.3 완료)와 연계 추진
- 아세안 및 아프리카 개도국을 대상으로 FAO, 게이트 재단 등과 공동협력사업 발굴 추진

○ (수산) 자원 외교 강화 및 해외어장 개발 확대

- 한·러간 수산분야 교류 협력 강화로 안정적인 명태 조업쿼터 확보 및 중국과의 어업협상으로 불법어업 최소화
- 아프리카 및 남미 주요 연안국과 양식기술 협력사업, 나우루협정 당사국(PNA)인 솔로몬에 어항개발 사업타당성 조사 추진

○ (산림) 산림자원 외교 다변화, 대상국 확대 추진

- 진출지역 및 자원외교 다변화로 '11년 해외조림 25천ha 실시
- * '93부터 '10년까지 228천ha 해외조림 추진(11개국 21개 기업)
- AFoCO 설립을 위한 회원국 MOU 체결 및 인력양성 등 추진
- 아시아 최초로 유엔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 총회 개최(10월)

□ 농림수산분야 ODA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

- 수원국 정책여건 등을 감안한 맞춤형 사업절차 및 매뉴얼 마련, 농림수산분야 ODA 전문가 Pool 및 사업 품질관리 체계 구축

<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

□ (연근해) 친환경적이고 자율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

- 생분해성 어구 보급 확대('11년 : 300척, 43억원) 및 어린고기 탈출 장치 개발 등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어구 개발·보급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 어업관리 시스템 구축
 - 지자체 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6월), 합리적·효과적 어업 분쟁 조정을 위한 전담기구 도입 추진
-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수산자원관리 패러다임 정착
 - TAC(총허용어획량제도) 대상 어종(11개) 중 지역성이 강한 품목의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 추진하고, 자율관리공동체 활성화
 - * '11년까지 자율관리공동체 참여 어촌계 비율 46%로 확대('10년, 38%)

□ (양식) 외해·갯벌양식 등 고부가가치 성장동력 창출

- 외해양식가두리 확대 개발 및 참다랑어 완전양식 5개년('10~14) 계획 추진
- 갯벌의 생산성과 정화능력을 활용, 수출 잠재력이 큰 갯벌 참굴과 해삼 양식(4개소, 25ha)
- 고부가가치 관상어 산업의 본격적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2월)

□ (원양) 해외 신어장 개발 및 원양산업 통계 인프라 구축

- 해외신어장 개발을 위한 해외어장 자원 조사(2개소)
- 원양산업 관련 업체에 대한 총조사 실시(4~11월), 해외 수산 투자 관련 정보기반 구축

< 가치있는 산림자원 육성 및 이용 확대 >

□ 녹화수종과 불량천연림을 경제수종으로 대체

- 리기다소나무 등을 별채하고 생장이 빠르며 가치가 높은 백합나무, 소나무 등으로 갱신('16년까지 리기다소나무림 180천ha 갱신 완료)
- 불량 천연림은 지역별로 소나무, 낙엽송 등 중점 조림수종을 선정하여 용재가치가 우수한 침엽수 인공림으로 전환

□ 경제림육성단지를 항구적 목재공급기지로 육성

- 전국 292만ha(450개 단지)의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숲가꾸기, 임도 등 산림사업을 집중하여 우량목재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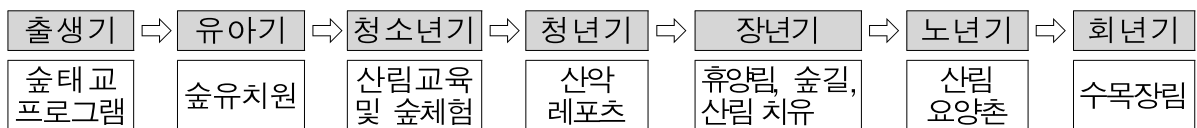
□ 숲가꾸기에서 산물수집, 이용에 이르기까지 일관시스템 구축

- 숲가꾸기 규모화(10ha), 기계화(작업능력 5배) 및 간벌률(20→35%) 제고로 산물수집을 확대('10년 110만m³→'11년 130만m³)

□ 목재펠릿 에너지 활용 확대

- 기존 농가주택, 시설원에 보일러 위주에서 군부대, 우체국 등 공공시설, 마을회관, 산업체 등으로 수요 다변화
- 목재펠릿 부가세 감면, 보일러 인증제 도입으로 소비자신뢰 확보

□ 전생애 걸쳐 산림혜택을 제공하는 생애주기 산림복지 도입



□ 산림분야 녹색일자리 창출

- 숲가꾸기, 숲해설가, 등산안내인 등 13개 사업에서 4만5천명을 고용

- ◇ 정예인력 10만명을 육성,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화 도모
 - 중앙과 지자체에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각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운동 전개

□ 정예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촌 사회 변화를 주도

○ 정예인력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

- 지도자 소양, 마을경영, 조직운영, 마을발전계획수립 등 교육

○ 정예인력 주도하에 농어촌의 획기적 변화 도모

- 의식개혁, 경영혁신, 특성화 마을 조성, 공동체활성화 등

□ 농어촌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활력을 증진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

○ 중앙과 지자체에 추진기구((가칭)“농어촌 활력화 범국민운동본부”) 설치

- 각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범 국민운동 전개

○ 농어촌의 마을단위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도록 지역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 운영

□ 농어촌의 활력있고 희망찬 분위기 확산

○ 우수사례 발굴 전파 등 대대적인 대국민 홍보 지속 추진

○ 잘하는 마을을 중심으로 정책자금 등 집중 지원

- 우수 마을을 선정, (가칭)“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 시상

□ 고령농업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관리 지원 확대

- 농지를 담보로 하는 농지연금(역(逆)모기지론) 제도 시행
 - * 70세 농업인이 2억원 농지를 담보로 가입시 매월 77만원 수령
- 경영이양직불제 활성화 및 농촌건강장수마을 조성('11까지 582)

□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

- 결혼이민여성 정착지원 : 영농교육(1,000명), 정착지원교육(1,100명)
- 영농도우미 지원요건 완화 : 10일 이상 입원 → 5일 이상
- 농어촌 주택개량 지원(8,230호)

□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적극적 복지 지원 추진

- 공공성과 기업성이 조화된 공동체 활성화(1,100개소)를 통해 지역문제의 자율적 해결, 일자리 창출 및 소득향상 도모
-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 공동체회사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 교육 등 강화
 - * 양양 송천 떡마을 : 부녀자 15명, 월 평균 170만원 수준 소득
 - * 완주 안덕 체험마을 : 노인 15명, 월평균 30만원 수준 소득
 - 지역발전 기여도, 주민참여 정도 등을 심사, 우수 공동체회사 사업을 선정(54개소) 지원(개소당 50백만원)

- 농어업 보조금 지원의 기본원칙 마련 추진
 - 농어가 유형에 따라 산업적 지원과 복지적 지원으로 차별화
 - 농어가 경영체의 규모에 따라 맞춤형 지원방식으로 전환
 - * 대규모 : 보조지원 단계적 폐지, 장기 융자 지원 / 소규모 : 복지 지원
-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5개를 추가로 결성하여 다양한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 추진('11 : 500억원)
 - 투자분야는 농림축산업, 수산업, 식품산업, 프로젝트사업으로 구분
 -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부출자 비율 및 규모 등 설정
- 간척지를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첨단원예, 생명산업 등 미래 농업 및 수출전문단지로 조성
 - 미처분 간척지(34천ha)는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과 안정성을 갖춘 활용방안 마련(3월)
-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추진 및 경제사업 활성화
 - 농협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2월 임시국회)하고, 시행령 등 하위 법령 개정을 연말까지 완료
 - 농협 개혁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부족자본금, 세제 등 지원
 - 중앙회 경제부문 조직 개편과 향후 투자계획 등을 보다 구체화 하여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 유관기관별 중점 점검 사항을 마련하고, 담당부서별로 소관 기관에 대한 점검·개선방안 마련
 - 비효율적인 업무 추진 상황, 잠재적 위험요소 발굴, 조직·인력의 적정성 여부 등을 점검

2. 2011 업무보고 관련 문답자료

2011업무보고 관련 문답자료

2010. 12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목 차

1. 축산업 허가제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263
2. 거점지역 진단실험실은 왜 필요한가?	264
3. 가축질병 발생농장의 보상금 삭감 방안은?	265
4. 가격안정대와 주의·경계·위기 단계별 조치사항은?	266
5. 정가·수의 매매 활성화의 개념 및 시행방안은?	267
6.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방안은 무엇인지?	268
7.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방안은?	269
8.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270
9. 쌀 수급안정화 대책과 효과는?	271
10. R&D 컨트롤 타워가 왜 필요한지?	272
11. R&D CRO-CMO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273
12. 해외농림어업개발의 민관합동 참여방식(PPP)은 무엇을 말하며, 필요성은?	275
12-1. 필리핀 MIC 모델은 무엇인지?	276
13. 어업분쟁전담기구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280
14. 갯벌 참굴과 해상 시범양식 추진 취지는 무엇인지?	281
15. 농식품투자조합 개요 및 운영방식, 필요성은?	282
16. 농어촌 활력 창출을 위한 범국민 운동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284
17.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방안은?	285
18. 농업관측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286
19. 농어업보조금 개편 방안은?	288

문1) 축산업 허가제 추진방안은 무엇인지?

- (도입 배경)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소홀 등으로 구제역, AI 등 악성질병이 발생하거나 인근지역으로 확산
 - 금년에 발생한 구제역은 축산농가 해외여행, 외국인 근로자 관리 소홀 등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고
 - 축사에 출입하는 사람·차량에 대한 소독 및 출입통제 미흡으로 인근 지역으로 확산
 - 악성가축질병 발생 책임이 있는 농가에 대해서도 축산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등의 적절한 제재사항이 없어 축산농가의 책임의식 및 가축방역에 대한 참여의식 결여
- (주요 내용) 기존 축산업 등록제를 축산업 허가제로 변경하여 농가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축산업 허가대상 농가뿐만 아니라 소규모농가까지 의무 교육을 도입
 - 허가 대상 : 구제역과 고병원성 AI에 감수성이 예민한 우제류, 조류를 사육하는 농가 중 사육면적이 50m²이상인 농가
 - * 우제류: 소·돼지·닭·오리·산양·면양·사슴, 조류: 칠면조·거위·메추리·꿩·타조
 - 차단방역, 환경관리, 분뇨처리 등 축산관련 기본 소양을 갖추 수 있도록 일정시간 교육 이수 의무화
- (추진 상황) 생산자단체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법률 개정(안) 마련, 내년 10월에 국회제출 계획

문2) 거점지역 진단 실험실은 왜 필요한가?

- 가축질병 발생시 신속한 초등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초기에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함
 - 특히 구제역, AI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은 그 무엇보다도 신속한 정밀검사 필요

- 현재 수의과학검역원(경기도 안양소재)에서만 재난성 가축전염병에 대해 진단이 가능한 실정임
 - 지방에서 의심축 신고가 있어도 최종 진단을 위해서는 경기도 안양으로 가검물을 이송함에 따라 일정 시간이 추가 소요
 - 또한, 검역원의 진단 시설도 검사 능력에 한계가 있어 동시 다발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검사가 지연
 - * 검역원에 시료가 도착되면 평시에 8시간 소요되지만 시료를 증가(100건이상)하면 12~24시간 소요

- 지역별 거점을 정하여 정밀 진단시설(생물학적 안전 차폐시설)을 설치, 최단기간내 검사 및 질병진단 능력 향상 도모
 -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 각 1개소씩 진단 실험실 설치 추진

문3) 가축질병 발생농장의 보상금 삭감 방안은?

-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신고, 소독, 이동제한 및 살처분명령 등 방역의무를 해태한 농가는 20~60%까지 감액 지원
 - (신고) 신고를 지연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20~60% 감액
 - (조치이행) 소독, 이동제한, 살처분명령 미이행 시 20~60% 감액
 - * 신고 및 조치이행 기준에 따른 감액요인이 중복될 경우 감액이 큰 경우 적용

- 향후, 축산농가 책임의식 제고를 위해 신고·소독 등 방역의무 미이행 시 보상금 삭감
 - 가축전염병 발생국 여행 후 신고·소독 조치 미이행 시 최대 60% 감액
 -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 및 교육·소독 미이행시 20% 감액
 - 농장을 출입한 수의사·인공수정사·동물약품·사료·분뇨·톱밥 차량 등에 대한 소독기록이 미흡한 경우 20% 감액

문4) 가격안정대와 주의·경계·위기 단계별 조치사항은 ?

□ 가격안정대와 위기구간

- 안정대 : 5년평균가격 대비 실제가격 변동율의 평균(표준편차) 이내 범위
 - 상승 : (주의) 표준편차의 1~1.5배 → (경계) 1.5~2배 → (위기) 2배이상
 - 하락 : (주의) 생산비 이하 → (경계) 중간수준 → (위기) 경영비 이하

□ 위기구간별 조치사항

① 파종전-파종 단계

	단 계	조 치 사 항
부족	위 기	○ 해외 계약재배 실시
	경 계	○ 계약재배 규모 확대
	주 의	○ 해외시장 수입 가능성 조사
과잉	위 기	○ 묘 폐기 등 재배면적 감축
	경 계	○ 타 작물 전환운동 전개
	주 의	○ 관측정보 제공 등 자율 면적 감축 유도

② 생육단계

	단 계	조 치 사 항
부족	위 기	○ 해외 계약 물량 수입계획 수립
	경 계	○ 해외시장 수입선 사전확보
	주 의	○ 계약재배 물량 출하계획 조정(등외품 출하방안 등)
과잉	위 기	○ 품목단체의 저급품 자율폐기
	경 계	○ 계약재배 물량 출하계획 조정(가공용 출하확대 방안 등)
	주 의	○ 조기수확을 통한 물량 감축(통배추→뭍음배추)

③ 출하단계

	단 계	조 치 사 항
부족	위 기	○ 수입, 할당관세, 도매가격 상승을 제한
	경 계	○ 계약물량 조기출하, 할인판매
	주 의	○ 규격외품 출하유도
과잉	위 기	○ 유통명령, 과잉물량 저장·가공
	경 계	○ 유통협약에 의한 자체 시장격리
	주 의	○ 계약물량중 저급품 출하억제, 수출

문5) 정가·수의매매 활성화의 개념 및 시행 방안은?

- (개념) 도매시장법인이 출하자의 의견을 받아 중도매인과 협상을 통해 가격을 결정(수의매매)하거나 정찰제(정가매매)로 판매하는 방법
 - (효과) 경매제에 비하여 가격진폭을 완화할 수 있고 경매대기 시간 불필요 및 하역비 등 유통비용 절감 가능
- (시행방안) 정가·수의매매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과 동등하게 규정하여 출하자(농가)가 매매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 현재 농안법에는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가·수의매매는 예외적으로 인정
- (보완조치) 정가·수의매매 확대시 거래의 불투명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전파 제공 시스템 강구 검토

문6)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공급방안은 무엇인지?

- 계약재배 및 공동구매 중심의 우수 농수산물 직거래와 사이버 거래를 활성화하여 고품질의 식재료 공급을 확대할 계획임
- 이를 위해 2011년에는 우수 농수산물의 학교급식 공급확대와 지자체 모범사례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을 우선 실시
 - (대상)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 구축이 가능한 지자체 5개소
 - * 대상 지자체는 1월중 공모를 통해 선정할 계획
 - (지원내용) 우수 농수산물 직거래 매취자금, 저온저장시설·냉장차량, 농어촌 체험·교육비용, 식재료 표준규격 컨설팅 비용 등
-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학교급식 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 (6월)을 마련하여 2012년부터 우수 식재료 공급을 확대 실시할 계획임
 - 농식품부, 교과부·교육청, 지자체, 생산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 협의체'를 구성하여 선진화 방안 마련
 - 효율적인 계약재배 및 공동구매를 위해 교과부·교육청과 협조하여 지역산 제철 농수산물을 활용한 '표준식단체' 보급을 추진할 계획임
-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 전자조달 시스템」(aT 사이버거래소) 사용을 활성화하여 식재료의 품질을 확보하고 및 안전성을 제고할 계획임
 - 전자조달 시스템은 식재료 조달 기능 뿐만 아니라 표준화된 식재료 검수 기준을 제공하고 엄격한 납품업체 관리 실시
- 중장기적으로 현행 학교 단위의 수급체계를 3~5개 시·군의 학교를 통합 관리하는 지역거점체계로 개편을 추진
 - 기존 유통·물류시설(APC·RPC·LPC,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을 지역거점 학교급식지원센터로 최대한 활용하도록 유도

문7)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방안은?

- 한식은 건강식 웰빙식으로 세계화 잠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가 이미지가 여전히 존재
 - 명품 한식과 세련된 한국 문화를 함께 홍보하고 한식 및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고급 한식당 설립이 필요
- 플래그쉽 한식당은 민관 협력방식의 공동투자를 통해 매입 방식으로 개설하고 운영이 안정화되면 민영화하는 것이 정부 방침
 - 장소는 뉴욕 등 세계 경제의 중심지인 미국내 지역으로 우선 검토
 - 또한 참여를 희망하는 현지 한식당 및 국내 외식 전문기업에 제한 없이 투자 기회를 제공
 - 운영은 전문 한식 경영업체에 위탁하여 전문성 효율성 확보
- 현재 전문기관 연구용역(세종대, '10~'11.3)을 통해 식당규모 및 입지, 식당 운영방식, 메뉴구성, 홍보방안 등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
 - 내년 4월까지 한식당 설립 계획을 수립

문8)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 도매시장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기 위한 가격조정제 등 거래 제도 개선 (농안법 개정 추진)
 - 무·배추 출하예약제 시범실시('11년 가락시장 대상)
- 유통 효율성 증대를 위한 거래제도 개선
 - 경매제 보완을 위해 정가·수의매매를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과 동등하게 규정
 - 시장도매인제 확대 기반 마련
 - 우선, 중앙도매시장에 반드시 도매시장법인을 두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여 개설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유도
 - * 시장도매인제는 유통단계를 단축(2단계 → 1단계)하여 유통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제조건인 정산조직의 운영상황과 병행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
- 거래의 공정성·투명성 확보 및 유통종사자의 경쟁촉진 강화
 - 시장도매인·상장의 품목 중도매인과 출하자 간 제3의 대금정산 조직 신설
 - 도매시장 평가제도를 현행 전국단위 평가에서 시장별·권역별 평가로 개선

문9) 쌀 수급안정 대책의 주요 내용과 효과는?

- 쌀 수급안정 대책은 “쌀 공급축소,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소비확대”를 추진하여 “과잉 생산구조 해소, 쌀 수급균형 달성” 효과를 기대
 - 쌀 공급축소를 위해 논에 타 작목재배, 조기관세화를 추진
 - ‘13년까지 매년 4만ha의 논에 콩·옥수수 등 타 작물을 재배하여 쌀 20만톤의 공급을 축소
 - 2012년 관세화를 위한 논의를 11년 내에 마무리하여, ‘15년 이후 매년 6만톤의 수입쌀 감축
 - 쌀의 생산과 공급량이 줄어드는 만큼, 국가재정부담이 감소
 - * 12년 관세화로 ‘14년까지 794억원 절감
 - * 타 작목재배로 쌀 20만톤 매입·격리에 비해 4772억원 절감효과
- ⇒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15년 밥쌀 재배면적을 70만ha로 축소하여 쌀 과잉생산구조를 해소, 수급균형 달성
-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R&D 지원, 원료공급체계 구축 추진
 - 5대 분야 55개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지원
 - * 5대분야 핵심과제 : 기능성·가공용 품종(12종), 쌀제품 가공기술(15종), 가공기기(8종), 쌀·부산물 이용 신소재(8종), 가공제품 품질제고(12종)
 - 1단계로 3년간 정부쌀을 할인 공급하고 2단계로 가공용 쌀 전용 재배단지를 구축하여 안정적인 원료 공급 달성
 - * 가공용쌀 전용재배단지 : (‘11) 1천ha → (‘13) 1만ha → (‘15) 3만ha
- ⇒ 이를 통해 가공용 쌀 소비를 15년 60만톤까지 확대하여 쌀 생산량의 15%를 가공용으로 소비

문10) R&D 컨트롤 타위가 왜 필요한지?

- 농림수산물 관련 R&D는 농식품부·농진청·산림청 등 기관별 분산 추진되어, 정책 연계성 및 효율성 저하, 중복성 문제
 - 농식품 R&D의 방향성 정립 및 미래준비를 위해 기관간 역할 분담·조정 등 필요

- 농림수산물과학기술위원회 중심으로 농식품분야 R&D 컨트롤 타위 구축
 - 농식품 R&D 주요정책, 예산투자방향, 성과관리 등 검토

문11) R&D CRO · CMO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 농식품 분야는 민간부문의 연구기반이 취약한 구조적 한계가 있어 이를 극복 할 수 있는 민간연구 서비스 제공 필요
 - 산업체가 보유한 기술을 산업화하는데 필요한 실용·산업화 연구를 대행(CRO*)하거나, 시제품의 위탁생산(CMO**)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전문조직이 필요
- *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 품질·기능성 분석, 임상시험 등 전문연구대행 조직
- ** CMO(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 시제품 생산, OEM·ODM 등 위탁생산 전문 조직
- CRO · CMO 육성을 통해 농식품 산업현장에서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로 수익이 창출되고, 다시 기술개발에 재투자 될 수 있는 R&D 선순환 구조의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농식품 R&D 정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발족(09.4.15)
 - 농식품 R&D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연구개발 사업 평가, 예산투자방향, 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 구성 : 위원장(1차관, 민간위원장), 당연직(4), 민간위원(29) 등 35명
 - 5개 분과위원회(기획조정, 생산기반, 안전유통, 종자생명, 녹색자원환경)
 - * 설치근거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시행령 제5조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 활성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분과위 기능 강화
 - 농진청·산림청 및 소속연구기관 기획담당자로 구성된 '기획조정분과' 신설로 정책연계성 제고, 기술전문분과위는 기술·산업분야를 고려하여 4개 분과위*로 재편
 - 농림수산식품 분야 R&D 예산배분 및 사업추진 내용 검토
 - 분과위 자체적인 의제를 발굴하여 상정

문12) 해외농림어업개발의 민관합동 참여방식(PPP)은 무엇을 말하며, 필요성은?

- 민관합동 참여방식(PPP : Public Private Partnership)이란
 - 민간기업의 해외농업개발 진출시 민간투자 이전에 정부간 협의를 거쳐 사업지역, 규모 등을 협의하고 민간기업이 투자를 하는 사업 모델임

- 그 필요성은
 - 민간기업이 단독으로 해외농업개발사업을 진출할 경우, 토지확보 지연, 해당국의 사업승인 지연 등의 사업 추진에 따른 리스크를 정부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모델임

문12-1) 필리핀 MIC 모델은 무엇인지?

- 농업을 중심으로 관련 제조업, 녹색 에너지 발전사업 등이 포괄된 복합산업단지(MIC:Multi-Industry Cluster)임
 - 정부間 협력으로 대규모 토지 임차 후, 지역별로 농업을 주축으로 특색 있는 산업이 결합된 단지 조성
 - 우리의 풍부한 개발경험을 활용, 필리핀의 풍부한 농업잠재력을 토대로 여타 주변 산업과 녹색에너지 발전사업 등을 발전
- 현지여건을 감안, 곡물분야부터 착수 후 점진적으로 전·후방 산업을 연계하여 규모화 복합화할 계획임
 - ※ 사업내용(안)
 - 건조·저장시설(10만톤) 조성, 농장개발(3천ha), 지역 농산물 계약재배(12천ha)·수집(15천ha), 바이오산업 등
 - * 사업규모 및 내용은 민간기업 참여도, 정부간 협의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09.5.30, 한·필리핀 정상회담 계기로 필리핀의 요청에 의해 추진 중인 “필리핀 복합산업단지(MIC)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KOICA, '10.4~'11.3)와 연계 추진 중
 - 11년도 상반기에 민간기업 모집과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하반기에 사업 착수할 계획임

1. 사업개요

KOICA에서 타당성조사('10.4~'11.3) 중인 MIC 사업지구의 일정 규모(3만ha 수준)를 정부·민간 협력방식(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으로 시범사업('11~12년) 추진

- 사업규모 : 30천ha(연간 옥수수 300천톤* 생산·유통)
 - * 30천ha의 농지에서 옥수수 2기작 재배 물량(5톤/ha/1기작 기준)
 - 개발계획 : 저장·가공 시설(10만톤 규모), 농장개발(3천ha, 10%), 계약재배(12천ha, 40%) 및 수집(15천ha, 50%)
 - 농업기술, 교육 의료, RPC, 도로 소수력발전소 건설(ODA사업)
 - 농산물 가공 유통, 연관산업(종자 농기계 등), 레저 진출(민간투자)
 - ※ 현지조사 결과, 경제성, 민간참여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고려하여 사업 규모 및 내용을 탄력적으로 조정
 - 소요예산 : 193,563백만원
 - (재원)농지관리기금, ODA(무상원조, EDCF), 수출입은행 융자, 민간투자
 - 사업기간 : 2011 ~ 2012년 (2년간, 유통시설 및 농장 기준)
 - 추진방식 : 정부·민간 협력방식(PPP)
 - 국가간 협의로 확보한 대규모 단지에 대해 민간투자자는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시설 설치 및 종자 농기계 등 연관 산업에 진출하고,
 - 정부는 ODA 사업과의 연계를 포함한 금융 외교적 지원
- ⇒ 민간투자를 토대로 정부 민간 협력 방식의 지속가능하며 상호 win-win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협력 모델 정립

2. 추진 현황

- '09.5.30, 한-필리핀 정상회담을 계기로 “필리핀 복합산업단지 (Multi-Industry Cluster) 조성 타당성 조사사업” 외교장관 간 MOU 체결
 - 필리핀의 공식요청으로 KOICA사업채택 및 사업자 선정('10.3월)
- '10.6.3, MIC 시범사업 추진계획 수립
 - 옥수수 30만톤 규모의 생산 또는 유통계획(3만ha규모) 및 ODA사업 등 종합계획수립
- MIC 적지 선정을 위한 민 관 합동의 현지 조사 실시
 - (기간) '10.7~10월
 - (참여) 농식품부, 외교부(대사관), 농어촌공사, 농경연, 농협 사료, 한진중공업, 대우인터내셔널 등
 - (조사내용) 필리핀에서 MIC후보지로 제공 가능하다고 제시한 6개주에 대한 관계자 면담 및 현지 확인
- '10.11.25, 한 필리핀 MIC 개발 협력 포럼 개최(KOICA, 서울)
 - MIC사업에 대한 대외인지도 강화 및 관련기업의 관심제고
 - * 필리핀측 상원의원, 농업부 등 60여명과 한국측 관계자 총 200여명 참석

< 필리핀 추진 현황 >

- MIC 개발을 위한 후보지 제시('10.10) : 5개주 49,174ha
 - ※ 개발가능 여부에 대하여는 세부조사가 필요
- 필리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2011~2015)”에 MIC사업계획 포함 추진
 - ※ '11.2월중순 발표를 목표로 현재 대통령 재가 중으로 세부 내용은 비공개
- MIC관련 Steering Committee 구성
 - 경제개발청, 농업부 등 관련 기관 고위급으로 MIC추진 위원회 설치 예정
 - ※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발표와 함께 가동될 것으로 예상

3. 향후 추진 계획

□ MIC 사업모델 마련 및 국내 관심기업에 대한 설명회('11.1)

○ MIC 진출 가능지역에 적합한 사업모델 마련

- 6개주에 대한 KOICA, 농촌공사의 조사 결과 활용

※ 우선 가능사업 : 농장, 건조·저장시설, 사료공장 등

○ 지역별 개발 가능 모델을 제시하고, 관심기업의 진출에 필요한 요구 사항 조사

□ 사업추진을 위한 한·필리핀 워킹그룹 구성('11.1)

○ 한·필리핀 국가별 투자유치를 위한 역할 분담 및 '11.1 Road show 협의 등

○ 향후 추진계획 협의 및 현안문제* 해결 모색(지속)

* 외국인 투자지분, 토지임대조건, 진출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수출 등

□ MIC 사업 Road Show 개최('11.2)

○ 필리핀 주관으로 MIC지역 투자에 대한 필리핀의 투자유치 전략, 투자인센티브 등 정보제공

□ 세부조사, 사업계획 수립 및 착수준비('11.6)

○ 세부조사, 사업계획 수립은 사업진출 예정 기업 위주로 실시하되, 관련 전문가 지원

※ 계획수립 후 해외농업개발사업 융자지원 절차에 따라 융자지원('11년 MIC 예산: 90억원)

○ 도로 등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반시설 발굴 및 필리핀 측과 협의(EDCF, KOICA 사업 등)

- 농업분야는 관련 공무원 초청연수, 전문가 파견(농촌개발, 농업 기술 등 전수), 농기계 지원 사업 등 추진

문13) 어업분쟁조정전담기구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 한정된 어장에서 경쟁적 조업으로 인해 갈등요인이 상존, 특히 EEZ 체제이후 조업어장의 축소로 어업간 갈등 및 분쟁 심화
 - 41개 업종 53천척의 어선이 연근해 어장에서 조업함에 따라 업종간 갈등 내재
 - 근해어선은 연안어장에서, 연안어선은 근해어장에서 조업하는 등 어업간 갈등이 고조되고, 특정어종(멸치, 오징어, 저서어류 등) 어획이 집중되어 업종간 갈등 심화
- 현행 어업분쟁 조정기구 현황
 - 현행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라 수산조정위원회(중앙, 시·도, 시·군)가 설치되어 있으나 동 위원회에 조정결과를 담보할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강력하고 적극적인 어업조정 곤란
 - '중앙 수산조정위'는 법령 제·개정, 구획어업 승인 등 법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심의 중심, '시·도 수산조정위'는 수산정책사업(계획 안) 심의 위주로 운영
 - 어업분쟁은 대부분 해역별 어업여건과 특성에 따라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성을 감안한 어업조정기구가 미비한 실정
- 어업분쟁을 예방하고, 분쟁발생시 신속한 조정을 위해 현행 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보완 및 해역별 어업조정기구 설치필요

문14) 갯벌 참굴과 해삼 시범양식 추진 취지는 무엇인지?

- 서·남해안의 우수한 갯벌자원을 활용하여 수산업의 신성장 동력 개발 및 수출 증대
 - 세계 5대 갯벌에 해당하는 우수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정착생물 채포 위주 등 소극적 이용
 - 서·남해안 갯벌 자원을 활용한 무급이(無給餌)·친환경 양식을 통해 수산업의 신성장 동력 개발
 - 특히 갯벌을 활용하여 수출 잠재력이 큰 갯벌참굴, 해삼을 시범 양식함으로써 향후 수산물 수출 증대에 기여
- 이와 더불어, 유류피해지역 어업인들에 대한 안정적 소득원 마련
 - 새로운 고부가가치 소득원 개발·보급으로 어업인 소득증대 도모
- 향후 계획
 - 종묘공급 및 양식, 가공 등에 대한 기술개발과 이를 활용한 시험 생산 후 수출까지 전 과정 시범 추진
 - 연구기관 주도, 어업인과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협력사업으로 '종묘+양식+가공+수출' 연계 복합사업모델 개발

< 조성규모 >

	계	2010년	2011년
해삼	20ha	5ha	15ha
갯벌참굴	5ha	3ha	2ha

문15) 농식품투자조합 개요 및 운영방식, 필요성은?

□ '농식품모태펀드' 개요

○ 모태펀드 개념

- 전체 출자자금을 하나의 펀드(母펀드)로 결성하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을 통해 펀드운용사가 결성하는 투자조합(子펀드)에 출자하는 펀드

※ 모태펀드(Fund of Funds)는 기업에 직접투자하기 보다는 개별펀드(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직접투자 위험을 감소시키면서 수익목적으로 운영

○ 추진경과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 및 시행('10.5.26)
-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농업정책자금관리단 지정('10.6.24)
- '농식품모태펀드' 결성('10.9.30) 및 5개 자펀드 운용사(업무집행조합원)선정 완료('10.11~12월)

○ 모태펀드 조성 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기금 등의 출자를 통해 조성
- "농업정책자금관리단"을 통해 모태펀드 자산관리 및 운용
- 조성규모 : 1조원(20년까지 출자), 존속기간 : 30년
-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는 펀드(농식품투자조합, VC, PEF 등)를 사업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농식품모태펀드에서 투자자금을 출자
- 경영혁신, 기술개발 등 민간의 선진 경영기법 도입 및 체질개선을 통해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육성

※ 농식품모태펀드 모태펀드 출자: ('10년)597억원, ('11년) 500억원

□ '농식품모태펀드' 필요성

- 농업의 규모화, 고부가가치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첨단농업, 녹색성장산업 및 식품산업 등 새로운 투자기회 발생
 - 대규모 자금수요 충족을 위해 정부주도의 재정 투융자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투자 확대 필요성 증대
- 농어업인 육성 및 농림수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다양한 자금조달 공급로 확보
-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초기단계까지는 “길을 터주는” 정부의 안내자 역할 필요
- 농어업의 특수성을 감안, 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간 기재로서의 정부의 안전판 역할 필요

□ '농식품모태펀드' 운영방식

◆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를 고려하여 모태펀드 자산을 운용
- 모태펀드의 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내에서 민간투자가 취약한 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

- 자조합 총결성액 중 정부출자비율을 일정비율(50%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투자 대상 및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출자비율을 달리 정하여 출자
 - 민간자본 유치가 비교적 수월한 분야(예: 식품)에 대해서는 출자비율을 낮게 설정하고,
 - 생산·유통 등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민간의 참여 유도
 - 농식품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조합 결성금액의 일정비율(시행령 : 60%)이상을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도록 함
 - 특히, 일부 대기업에 편중되어 투자되지 않도록 **중소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해서는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시행령: 20%) 이상을 투자
- * 상용근로자 수 100인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자(시행규칙)

문16) 농어촌 활력 창출을 위한 범국민 운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이유는?

- 농어촌은 일자리 부족으로 젊은층이 농어촌을 떠나게 되고, 이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서비스 기반 약화로 연결되어 활력이 더욱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리더를 중심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이 활성화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지역의 성공요인으로는 지역리더의 창의와 책임의식, 주민의 자발적 참여, 귀촌자의 기여 등을 들 수 있으며
 - 농어촌 유무형 자원(지역 특산물, 경관, 생태환경, 전통문화 등)의 가치를 높임으로써 일자리와 소득창출에 성공한 지역이 많음
-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자발적 창의적 도전적 의식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가치를 재발견함으로써 농어촌을 희망과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임
 - 이 운동이 성공적으로 전개되도록 자율 창의 책임의식을 갖춘 정예 인력 10만명을 육성하여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 중앙과 지자체에 범국민운동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마을 단위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위한 추진협의회를 구성
 - 이러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우수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우수마을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집중지원하고, (가칭) '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을 시상

문17) 농어촌 공동체회사 활성화 방안은?

- 지역주민이 공동체조직을 만들어 지역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여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
 - 고령화되고 소득이 낮은 농어촌 주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적극적 복지를 실현하는 의미도 있음

※ 농어촌 공동체회사 개념 : 지역주민 또는 귀촌인력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기업경영방식을 접목하여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조직

- 농어촌 공동체회사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교육 등 강화
 - 우수사례 발굴·보급, 안내책자 발간, 워크숍 개최 등 추진
 - * 양양 송천 떡마을 : 부녀자 15명, 1인당 월 평균 170만원 수준 소득
 - * 완주 안덕 체험마을 : 노인 15명, 1인당 월 평균 30만원 수준 소득
- 상담, 교육·컨설팅 알선, 모니터링 등을 위한 지원센터 개설(11.2월)
 - 수시로 농촌 공동체회사의 애로사항을 청취, 제도개선 추진
- 지역발전 기여도, 주민참여 정도 등을 심사, 공동체회사 사업 중 우수사업을 선정(54개소, 3월)하여 지원(개소당 50백만원)
 - 시·도, 공동체회사 등 의견수렴 후 사업시행지침 시달(1월)
- 고용노동부와 협력, 농어촌 분야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지원
 - MOU체결(10.10), 모델 발굴을 위한 전문가 TF 구성·운영 중

문18) 농업관측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 농업관련 전문 기상정보 생산·제공 <신설>

- 농촌진흥청과 기상청이 협조하여 농업기상정보를 생산, 농업관측 센터에 제공(월 3회, 10일 간격)

□ '농업관측기동반' 신설 및 '속보' 발간체제 개선 <신설>

- 기상변동이 심한 여름철(6-9월)에 '농업관측기동반'을 탄력적으로 현장(고랭지지역)배치하여 작황·출하동향 등을 신속·정확히 조사
- 관측기동반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속보를 신속 제공(15일→10일)

□ 시세 예측기법 제고 등 농업관측 품질·서비스 향상

- 관측 품목의 표본규모 및 조사 대상지 정비·향상(표본재설계 조정)
- 시세예측 정확도 제고를 위해 기존 중앙자문회의에 별도의 비공개 분과회의(생산자 - 유통인 - 대량 수요자)를 신설
- 기상급변 등 다양한 변동요인을 고려한 시세예측 모형(프로그램) 자체연구 및 기존 모형 개선 추진
- 농업관측관련 정보생산기관(통계청, 기상청, 농업관측센터 등)과의 워킹, 연구발표회 개최 활성화로 관계기관 협력 및 정보공유 강화

□ 목 적

- 주요 농축산물에 대하여 기상정보, 생산면적, 작황, 소비동향 등을 조사·제공함으로써 농축산물의 수급안정에 기여

□ 설립근거 및 조직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법률 제5조
 - ※ '99년 1월 KREI에 농업관측센터 설치
- 농업관측센터장 및 5개팀, 센터장을 포함 47명(위촉직 16명 포함)

□ 예산 현황(정부출연금/ 백만원)

연 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농업관측사업	3,218	3,450	3,948	4,418	4,519	5,320	5,136

□ 농업관측의 종류

- 단기관측 : 1~2개월 후의 수급과 가격전망(31개 품목)
- 중기선행관측 : 3~6개월 후의 수급과 가격전망(6개 품목)
- 중기관측 : 「농업·농촌경제동향」 매분기(연 4회)
- 장기관측 : 5~10년의 중장기 전망(매년 1월 농업전망대회 개최)

□ 관측대상 품목(31개 품목 : '10년 2개(버섯, 오리) 추가)

- 채소류 : 11개(배추, 무, 마늘, 양파, 건고추, 감자, 풋고추, 당근, 양배추, 파, 버섯)
- 과일류 : 6개(사과, 배, 포도, 복숭아, 감귤, 단감)
- 과채류 : 6개(수박, 참외, 오이, 딸기, 토마토, 호박)
- 곡물류 : 2개(쌀, 콩)
- 축산류 : 6개(한육우, 젓소, 돼지, 산란계, 육계, 오리)

□ 중기선행 관측대상 품목(6개 품목 : 배추, 무, 양파, 파, 돼지, 육계)

- ※ 2011년 10개 품목으로 확대·시행(추가 : 마늘, 고추, 오이, 호박)

문19) 농어업 보조금 개편방안은 ?

□ (현황 및 문제점) UR 타결 이후 3차례 종합대책 및 투융자계획을 수립, 추진

* 투융자 : 1차(42조, '92~'98), 2차(45조, '99~'03), 3차(119조, '04~'13)

○ 시장개방 여건하에서 생산·유통 인프라를 정비하고 영농의 규모화 진전 및 지역발전의 기초를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 정부 의존적 경향이 심화되면서 농업의 자생력이 약화되고 예산·기금 집행 및 관리체계에 비효율적 요인 등이 존재

□ (개편방안) 농어업분야 지원수준은 유지하면서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농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

① 농어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위험관리·성장동력 분야에 투자 확대

② 경영체 규모·성격에 따라 산업적·복지적 지원으로 명확히 구분 운영

- (대규모 농가) 보조지원 단계적 폐지하고 장기 저리로 융자지원,
(소규모 농가) 복지지원 확대

- (산업적 지원 : 경쟁력 강화) : 경쟁촉진, 비즈니스 모델개발, R&D 지원, 재해보험, 경영위험관리, 소득안정직불 도입 등 다양한 산업정책 개발

- (복지적 지원 : 서민대책) : 직불금 확충 등 생활안정망 구축, 농촌 사회 유지, 고령농 대책

③ 정책자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집행·관리 체계 구축

IV

언론 보도내용

아주경제

2010년 12월 28일 화요일 005면 종합



이 대통령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오후 과천정부청사 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방문해 현황보고를 받은 뒤 현장 공무원들과 화상통화를 하며 격려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이 대통령, 김형식 총리, 정승농림수산식품부 2차관.

50㎡ 이상 소·돼지 농가 허가제 도입

■ 농식품부 내년 입무보고

농가 출입 소독·기록 의무화
농수산물 가격상승폭 제한도

일정 규모 이상의 소나 돼지 염소 등을 키우려면 정부로부터 축산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농수산물 가격 급등시 도매시장의 가격상승률을 제약하는 '가격조정제'가 도입된다. 농림수산업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1년 입무보고'를 발표했다. 입무보고는 전국을 강타한 구제역 등 가축질병에 대한 관리 강화와 배추 무

농림수산업부 2011년 입무보고 주요 내용	
- 축산입 허가제 도입(2011년 10월 30일(목))	- 농산물인 차량 및 관계자 소독 의무화
- 채소류 가격제에 확대	- 가격급등률 완화 위한 도매시장 가격조정제 도입
- 사내대학 의무로 늘 3회 확대	- 쌀 가격등 소비를 6%에서 15%(2015년) 확대
- 농산물 수출 76억달러의 성장(2012년 100억달러 수혜)	- 농산물 판매액 100만명 8%성

닭 오리 등을 50㎡ 이상 사육하는 농가는 정부로부터 축산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생산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0월 정기국회 때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허가제를 통해 축산농가의 방역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취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구제역 등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축사 출입자명과 인력 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가 의무화된 다. 축산농가가 가축질병 발생국을 방문 할 경우 임국시 소독을 의무화하기로 했 다. 이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 는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 다. 구제역 등 가축질병 원인을 제공한 농가에는 농장폐쇄 조치를 취하기로 했

다.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구제역 등 질병확산에 따른 국내 축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책임의식과 환경관리능력을 갖춰야만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게 축산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수산물 가격의 불안 해소를 위한 방 안도 제시했다. 가격급등률 완화를 위해 '가격조정제'가 도입된다. 배추 무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농수산물 도매가격 이 급등할 경우 1일 가격상승폭을 제한 하는 제도다. 정부 입김이 작용하는 도매시장에서 행정력을 발동해서라도 농 수산물 물가를 잡겠다는 취지다. 수급불 안 품목에 대한 가격수준별 위기관리 대 응체계도 구축된다. 최근 5년간 가격변

동률을 기준으로 주의·경계·위기 3단계 로 나뉘 단계별로 대응책을 마련한다. 가격 급등등으로 위기경보가 내려질 경우 해외물량 도입과 가격조정명령 발 동 등으로 대응한다. 농협을 통한 채소 류 재배면적도 소비량의 10%에서 내년 에는 15%를 늘어난다. 민성적인 쌀 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재배면적 축소와 가공용 쌀 소비를 늘리기로 했다. 쌀 재 배면적은 올해 85만6000ha에서 내년 800ha, 2015년에는 70만ha로 줄일 계획 이다. 동시에 과자·라면 등 쌀 가공용 소비를 생산량 대비 현행 5%에서 2015년에는 일본 수준인 15%로 늘리 기 로 했다. 백영임 기자 ova8401@

매일경제

2010년 12월 28일 화요일 A04면 종합



영상통화하는 **李大統領** 이명박 대통령이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에 앞서 구제역 방역대책상황실을 방문해 고석웅 행정안전부 장관과 구제역 발생 현황과 관련해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 대통령, 정승 농식품부 차관. <박상선 기자>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토해양부의 2011년 업무보고를 받기 전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황식 국무총리, 이 대통령, 천영욱 도시환경연구센터 소장. 김명국기자 daunso@seoul.co.kr

축산업 허가제로... 방역의무 위반땐 보상금 감액



농림수산물부

내년부터 축산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뀐다. 신고와 소독, 이동제한, 살(殺)처분 명령 등 방역의무를 게을리 한 농가는 최대 60%까지 보상금이 깎인다.

농림수산물부부는 27일 정부 과학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을 보고했다. 양대 키워드는 올해 농축산업계는 물론 사회문제까지 비화됐던 구제역과 농산물 가격안정 대책이다.

축산업 허가제는 농가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다. 올해 발생한 구제역은 농장주나 근로자 등이 중국이

수도권·영남·호남권에 전염진단 실험실 설치
농수산물 가격 폭등땐 '가격조정제' 전격 발동

나 동남아를 다녀온 뒤 제대로 소독을 하지 않고 축사를 출입해 발생한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우제류(두 발굽 동물)나 조류를 키우는 사육면적 50㎡(약 15평) 이상인 농가는 사업 허가를 받도록 내년 10월 정기국회에 축산업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축산농가 종사자가 해외여행 후 입국신고 및 소독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위반자의 농장에서 전염병이 발생하면 보상금의 최대 60%까지 감액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신고 및 교육·소독을 하지 않아도 20%를 깎는다. 농장을 출입한 수의사와 인공수정사, 사료, 분뇨, 분뇨차량 등에 대한 소독 기록이 미흡해도 보상금의 20%를 깎을 계획이다.

지난 9~10월 무·배춧값 폭등으로 흉역을 치렀던 것을 감안해 농수산물 가격 불안 해소방안이 여럿 도입된다. 우선 '서킷브레이커' (주식매매 일

시정지 제도)와 유사한 '가격조정제'가 시행된다.

무·배추 등 가격 변동폭이 큰 농산물에 한해 장관이 긴급조정명령을 발동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예컨대 지난 5년간 12월 27일의 배추 평균값이 3000원, 5년간 가격변동률의 평균(표준편차)이 100원이라고 가정할 때 배춧값이 하루 만에 150~200원(표준편차의 1.5~2배) 움직인다면 '가격안정대'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한다.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이 경매할 때 가격안정대를 벗어난 수준에서 낙찰을 받으면 무효처리한다는 것이다. 임영일기자 argus@seoul.co.kr

구제역 예방 축산업 허가 도입 채소값 안정 가격 조정제 실시

농림수산물부

전국적인 확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구제역 사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은 농가만이 가축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된다. 농수산물의 가격 급등락을 막기 위한 가격조정제 도입 등 도매시장 거래제도 개선을 위한 '농산물 유통과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제정도 추진된다.

농림수산물부는 27일 정부 과천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최근 구제역 사태로 축산농가의 기반이 붕괴될 위험에 처하자 농식품부는 가축 질병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데 새해 업무의 중점을 뒀다. 우선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고 질병 발생 농장의 보상금을 삭감하는 등 축산농가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축사 출입 차량과 인력에 대한 소독 및 기록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교육·소독 의무화를 강력히 추진할 방침이다.

축산농가의 해외여행 후 입국 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하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 발생원인 제공시에는 농장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올가을 배추파동으로 국산 농수산물 수급 관리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가격조정제 도입을 통해

도매시장 가격 급등락을 막고 거래방식도 농가의 선택에 따라 판매 외에 정가·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해 나가기로 했다.

주요 수급불안 품목의 농협 계약재배 물량은 현재 생산량의 10% 수준에서 오는 2015년까지 50%로 대폭 확대한다. 저장성 있는 양념류·수산물의 비축물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관측은 재배면적·작황중심에서 시세예측 중심으로 정밀화하고 기상 이변시 월 1회 실시하던 관측을 3회로 늘려 실시하기로 했다.

쌀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논 4만ha에 타작목 재배를 추진하고 정부쌀 할인공급과 가공용 쌀 재배단지 조성, 핵심가공기술 개발 등을 통해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미곡종합처리장(RPC)의 통합·규모화와 쌀 자조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쌀 관세화는 오는 2012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 중국 칭다오에 물류 및 시장분석 등을 담당하는 수출전진기지를 건설하고 수출 목표 76억 달러 달성에 주력할 방침이다.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통·발효식품산업, 기능성 식품과 식품소재·기자재 산업을 적극 육성할 예정이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오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내년부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민·관 협력 방식으로 한식당 개설, 외식업체의 해외진출 촉진 등 한식세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ch21@fnnews.com | 이창환기자

축산업 내년부터 허가제로

농식품부 보고... 위생 강화하고 방역교육 받아야

대전서 구제역 의심 신고 충청권으로 번질지 긴장

구제역이 계속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27일 소·돼지·닭·오리 등의 가축을 면적 50㎡ 이상 농장에서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내년부터 허가제를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 전염병 예방 대책을 발표했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구제역(口蹄疫) 등 가축 전염병 방역에 대한 축산농가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에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축산업자는 등록만 하면 됐다.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축산업 허가제 대상은 구제역과 고병원성 AI(조류 인플루엔자)에 민감한 소·돼지나 닭·오리 등을 사육하는 농가 중 사육 면적이 50㎡ 이상인 곳이다. 허가를 받기 위해선 축사 위생 시설 등이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하고 전염병 방역 관련 교육도 일정 시간이상 받아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올해 발생한 구제역이 축산농가 주인이나 근로자의 해외여행으로 국내에 유입

되는 것으로 파악돼 허가제를 통해 구제역 발병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고 말했다.

덴마크·네덜란드·프랑스 등 유럽 축산 강국과 미국·캐나다 등은 ‘GCP(Green Certificate Program)’라는 제도를 시행,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야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가축거래상에 대해 면허제를 실시하고 있고, 대만은 축산업 시설 기준을 두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축산 농가가 질병 원인을 제공했을 때는 농장 폐쇄 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인천 서구 오류동 돼지농장, 경북 청송군 진보면 이촌리 한우농장, 경기 양평군 양평읍 신애리 한우농장 등 3곳이 추가로 구제역에 감염됐다. 또한 대전 서구 봉곡동의 한우농장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와 구제역이 국토 중앙인 충청지역으로 번졌을까 봐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이날 3곳이 추가 감염됨으로써 구제역은 경북 안동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29일간 경북·경기·강원·인천 등 4개 광역 시·도의 26개 지역(기초자치단체)으로 확산됐고, 발생건수도 56건으로 늘었다.

방현철 기자 banghc@chosun.com

내년 축산업 허가제 도입 질병발생 농장 보상금 삭감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가 27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년 업무보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구제역과 농수산물 가격 불안 등 위험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한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해 질병 발생농장의 보상금 삭감, 축사 출입 차량과 인력에 대한 소독 및 기

수도권 등 거점지역에 진단실험실

농업관측 세밀화로 가격불안 해소

육관리 의무화,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교육·소독 의무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축산농가의 해외여행 후 입국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질병 발생원인을 제공한 농장은 폐쇄할 방침이다.

지자체의 예찰·검사 초기 진단능력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거점지역에 정밀검사기능을 갖춘 진단

실험실을 설치하고,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 항원 진단 키트를 공급한다.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재난성 가축전염병은 신속한 정밀검사가 필요한데 현재 경기도 안양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만 진단이 가능해 발생 초기 최종 진단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이와 더불어 농수산물 가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관측을 재배면적·작황 중심에서 시세예측 중심으로 정밀화하고, 기상 이변 시 월 1회 실시하던 관측을 3회로 늘린다.

주요 수급불안 품목의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현재 생산량의 10% 수준에서 2015년까지 50%로 대폭 확대하고, 저장성 있는 양념류와 수산물의 비축물량도 현재 각각 수요량의 3%, 0.5%인 것을 앞으로는 5%, 1%로 늘린다.

이 밖에 2012년 쌀 관세화 전환을 추진한다. 농식품 수출은 내년 76억달러, 2012년 100억달러를 목표로 정했다.

민·관 협력 방식으로 한식당을 개설해 외식업체의 해외진출 촉진 등 한식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농어촌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정예인력 10만명을 육성한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방역·환경시설 갖춰야 축산업 허가

| **농식품부** | 외국인 채용때 신고 의무화... 쌀 매년 20만톤씩 감산

농림수산물부의 최대 현안은 구제역 등 가축질병. 27일 내놓은 2011년 업무계획의 초점도 역시 가축질병 차단에 맞춰졌다. 이명박 대통령도 예정과 달리 직접 과천 농식품부 청사를 찾아 업무보고를 받을 정도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우선 축산법을 개정해 축산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누구나 아무런 제약 없이 축산업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방역 및 환경시설을 제대로 갖춘 농가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주겠다는 것. 특히 축산농가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현실을 감안, 외국인을 채용할 때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축사에서 일하는 외국인 등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소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축사농가가 가축질병 발생국을 방문했을 때는 출국 시 사전신고는 물론 입국 시 신고와 소독을 의무화하고, 이 방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소독 필증을 받았을 때만 공항이나 항만을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가 심혈을 기울인 또 다른 분야는 농수산물 수급 불안 해소. 우선 남아도는 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3년까지 매년 4만ha의 논에 콩, 옥수수 등 타작물을 재배해 매년 20만

● **농식품부 업무보고 주요 내용**

가축질병 대응 강화	- 축산업 허가제 도입 - 질병발생농장 보상금 삭감 - 축사 출입 차량 및 인력 소독·기록관리 의무화 - 외국인 근로자 신고·교육·소독 의무화 - 축산농가 해외여행 후 입국신고 및 소독 의무화
농수산물 가격 안정	- 농업관측 강화(시세예측 중심 및 관측 횟수 확대) - 농협 계약재배 물량 10%에서 50%(2015년)로 확대 - 도매시장 가격조정제 도입 - 매년 쌀 재배면적 4ha에 타작목 재배 (매년 20만톤 축소) - 2015년까지 밥쌀용 벼 재배면적 85만6,000ha에서 70만ha로 축소 - 2012년부터 쌀 관세화 추진 - 가공용 쌀 소비 비중 6%에서 15%(2015년)로 확대
기타	- 정예농민 10만명 육성 - 농수산물 수출규모 60억달러에서 100억달러(2012년)로 확대

톤씩 쌀 공급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또 현재 85만6,000ha인 밥쌀용 벼 재배 면적을 2015년까지 70만ha 수준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무산된 쌀 조기 관세화 논의도 내년에 마무리 해 2012년 관세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쌀 생산량의 6%에 불과한 가공용 소비 비중을 2015년까지 일본과 비슷한 15%로 늘려 쌀의 소비 다각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전국을 뒤흔든 '배추 파동'을 재연하지 않기 위한 대책들도 내놓았다. 배추 등 채소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가격조정제를 도입한다. 도매시장 가격 급등락을 막기 위해 일정폭 이상

변동하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 농업 관측도 재배면적이나 작황 중심에서 시세예측 중심으로 바꾸고, 기상 이변 시에 월 1회 실시하던 관측도 2회로 늘려 실시하기로 했다. 또 주요 수급불안 품목의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현재 생산량의 10%에서 2015년에는 50%로 확대한다.

이 밖에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예인력 10만명을 육성한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이들 정예인력을 통해 농촌 의식개혁, 경영혁신, 공동체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것. 농식품 수출도 올해 60억달러에서 내년에는 76억 달러, 2012년에는 100억달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명태기자 yltbe@hk.co.kr

소·돼지 축산업 50m² 넘을 뎨허가 받아야

농림수산식품부

농협 계약재배 물량

2015년까지 생산량 50%로

구제역 등 전염병에 걸리기 쉬운 소·돼지 등의 가축을 50m² 이상 면적에서 사육하려면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내년 초 추진된다.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관계자에 대한 소독과 기록 관리도 의무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구제역 등 가축 질병 대응 강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질병 대응 강화

지난달 말 경북 안동에서 시작된 구제역은 이날 인천 서구와 경북 청송, 경기 양평 등에서도 발생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에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을 차단하기 위한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기로 했다. 우선 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는 축산업 개정안을 내년 10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를 농장에 채용할 때 신고토록 하고 교육과 소독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 관계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록



구제역 소독액도 '꽂꽂' 육군 질병들이 27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상매동에서 얼어붙은 구제역 소독액을 제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과 소독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 농수산물 가격 불안 해소

배추나 무 같은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재배 면적과 작황 중심으로 이뤄지던 농업 관측을 시세 예측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상 이변이 나타날 경우 한 달에 한 번 실시하던 관측 횟수도 3회로 늘리기로 했다.

주요 수급 불안 품목에 대해서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현재 생산량의 10% 수

준에서 2015년까지 50%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계약재배란 일정한 조건으로 사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재배를 맡기는 것이다. 도매시장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기 위해 가격조정제 등의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내년에 쌀시장 조 기 관세화 논의의 마무리지어 2012년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관세화는 쌀 수입시장을 개방하되 적정 관세를 매기자는 것이다.

◆ 보조금 등 지원체계 개편

농어업보조금도 농가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기로 했다. 대규모 농가는 보조 지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장기저리 융자를 해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대신 소규모 농가에는 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농식품 수출 규모도 내년에는 76억 달러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중국 등 오에 수출 전진기지를 건설기로 했다.

서울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내년부터 살처분 보상금 삭감

농식품부 업무보고... 축산업 허가제 등 논란 예고

정부는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소나 돼지를 키우려면 축산업 허가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구제역 등으로 살처분되는 가축에 대한 보상금액 수를 삭감한다는 계획이다. 농가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지만 반발이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정부과천 청사에서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축산법 개정을 통해 차단방역·환경관리 등 소양을 갖췄을 때만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전파 방지와 이력추적을 위해 신고하지 않은 가축 상인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축사에서 일하는 외국인은 채용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축산농가의 해외여행 뒤 입국신

고 및 소독을 의무화하고 위반했을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방안도 도입한다. 살처분한 가축에 대해 지금까지는 시가로 보상했으나 앞으로는 보상 규모를 삭감해 구제역 발생원인을 제공한 농가의 책임도 강화할 방침이다. 가축전염병의 원인을 제공한 농가는 '농장폐쇄' 등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청정지역으로 생각했던 경북, 강원까지 구제역이 발생했다"며 "대처를 철저히 해서 청정국가로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어야겠다"고 말했다.

김다슬 기자

해외방문 축산농, 소독필증 받아야 귀가 허용

농림수산식품부

내년 초부터 해외를 방문한 축산 농민은 방역 당국의 소독 필증을 받은 경우에만 공항·항만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8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출입국관리소, 세관과 협조해 소독 필증을 받은 농장주만 공항·항만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산시스템 연계 등을 고려하면 시간이 3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구제역 등 가축 질병을 막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와 가축거래 상인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축산업 허가제와 관련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차단방역, 환경관리 등 기본 소양 교육을 마쳐야만 축산업을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또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의 원인을 제공한 농가에 대해선 ‘농장폐쇄’ 등 강경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가축 질병 발생 시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의 축산 담당자 교육을 강화하고 지자체 위생시험소에 구제역 항원 진단키트를 공급하는 등의 방안도 내놨다.

올해 하반기를 강타한 ‘배추 파동’과 같은 사태를 막기 위해 ‘가격조정제도’도 내년부터 도입된다. 가격조정제는 도매시장의 경매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를 경우 생산자 소비자 유통인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익일 도매 가격 상승폭을 결정하는 제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도매시장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를 막

자는 것”이라며 “가격조정이 실시돼도 거래는 정상적으로 이뤄지며 심의위원회에서는 최상품 가격만 결정하기 때문에 최상품이 아닌 농산물은 자유롭게 거래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가격조정제에 대해선 학계와 유통 업계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학부 교수는 “산지 수입상, 경매제도, 계약 재배 등 본질적인 유통구조를 개편하는 게 오히려

가축전염병 원인 제공 농가는 농장폐쇄 등 초강경 조치

농산물 가격조정제 도입 경매 과열땀 도매가 통제

려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주요 농산물의 경우 5년간 평균가격에 비해 가격 변동폭이 심할 경우 ‘주의-경계-위기’ 경보 단계를 도입해 단계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채소류의 정부 계약 재배 면적도 2011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인 20%까지 확대된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85만 ha였던 밥쌀용 벼 재배 면적을 2011년에는 80만 ha로 줄이는 것을 시작으로 2015년까지 70만 ha로 줄이겠다고 밝혔다. 월 2회 문서 형태로 제공하던 농업기상정보는 월 3회 인터넷을 통해 제공한다. 이 밖에 내년에는 농식품 분야 연구예산이 8600억 원까지 확대되고,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농식품투자조합 5개가 추가로 운영된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구제역 퍼뜨린 농장 장기간 폐쇄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가 27일 내놓은 내년 업무계획의 핵심은 최근 번지고 있는 구제역 등 가축 질병에 대한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또 구제역을 발생시킨 농가에 책임을 지움으로써 축산인 스스로 소독과 방역의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가축 살처분·매몰에 따른 일괄적인 보상 대신에 소독 등 방역 의무를 소홀히 한 농가에는 강력한 책임을 묻기로 했다. 예컨대 소독의무를 소홀히 해 구제역 발생을 유발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해당 축산농장을 폐쇄하는 것이다.

또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해 인근 농가에 피해를 입힌 경우는 살처분·매몰 보상금을 삭감하고 생계안정비와 가축 입식자금 제공이 배제된다.

현행 축산업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

농식품부 구제역 대책

- 축산업 등록제 대신 '허가제' 도입
- 소양과 요건 심사해 허가
- 내년 10월 국회에 개정안 제출
- 축산 관계자 책임 강화
- 최초 질병 발생농장은 지원비 삭감
- 의무 소독을 확인 시 장기간 농장 폐쇄
- 방역체계 강화
- 축산농장 기록관리 의무대상 확대
- 외국인근로자 고용신고 의무 강화
- 지자체 초기 방역 대응 체계 지원

되지 않도록 배추나 무 등 노지채소에 대한 계약재배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전체 생산량의 10%에 불과한 계약재배 비중을 2015년까지 50%로 늘릴 계획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올해 배추과일을 보면 재배농민은 크게 이익이 없었다”면서 “농수산 유통과정을 단축시키고 농민이 더 이익을 보고 소비자도 이익을 보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1인당 국민소득)이 3만~4만달러가 되고 농촌 도 거기에 맞는 고부가의 유기농법을 써서 좋은 식품을 만들고 이 수요가 확대된다는 전제하에 (정부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농촌이 정부 보조를 받아서 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농촌 스스로가 고수익을 올리는 쪽으로 가야 기본적으로 농촌문제가 해결된다”고 강조했다.

김병호·이진명 기자

꾸는 것도 큰 변화다.

방역체계도 개선된다. 축산농장 소독 및 기록관리 대상을 수의사 등 모든 출입자 및 차량으로 확대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초기 진단능력을 높이기 위해 지역거점별로 진단시설을 두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수산물 가격불안 해소 △쌀 수급안정 △농식품 R&D 개편 △중자생명산업 육성방안 등도 내놴다. 정부는 배추값 폭등이 재연

축사규모 50㎡ 이상 축산업 허가제 도입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 사육면적 50㎡ 이상인 농가가 축산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도록 요건이 강화된다. 소독 등 주의의무 소홀로 가축질병을 퍼뜨릴 경우 장기간 농장 폐쇄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현행 축산업 등록제 대신 축산 관련 기본소양과 요건을 갖춘 자만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제

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우제류와 조류를 사육하는 농가 중 사육면적 50㎡ 이상인 곳이 대상이다. 정부는 축산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0월 국회에 축산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올해 구제역 대처를 철저히 해서 내년부터는 국내에 이러한 구제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면서 “벨리 청정국가로서 명예를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운 날씨에 구제역 방역에 나선 공

무원들을 격려하기도 했다. 정부는 축산인들의 잦은 해외여행에 따른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입국 시 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하고 미이행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기로 했다. 구제역을 일으킨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 입식(소나 돼지)를 새로 들여오는 것)을 제한하는 등 사실상 농장 폐쇄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관련법 개정 전에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 등과 협조해 축산 관련자는 소독필증이 있어야만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충북 충주, 경북 성주 등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고 전날 신고된 인천 서구(돼지), 경북 청송(한우), 경기 양평(한우) 등 3곳에서 양성 확진판정이 나왔다.

▶ 관련기사 A4·31면
김병호·이진명 기자

효율적 질병 관리위해 축산업 허가제로

■ 농림수산식품부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맹위를 떨치면서 축산농가에 대한 효율적인 질병 관리를 위해 축산업 허가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농수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가격 폭등(폭락) 때 도매시장의 가격 등락폭을 제한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논 4만ha에서 벼 이외의 작목을 재배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위험관리 강화, 성장동력 확충, 농어촌 지역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2011년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최근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됨에 따라 축산 방역과 관련한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기로 하고 우선 축산농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현재 신고제인 축산업을 허가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질병 농장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줄이고 축사 출입 차량과 인력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도 의무화할 계획이

농수산물 가격안정 차원

도매가 등락 제한도 추진

다. 또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교육·소독 의무화도 강력히 추진한다.

이와 함께 축산농가 역시 해외 여행 후 입국 신고와 소독을 의무화하고 위반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쌀 수급 안정과 가공산업 발전을 위해 밥쌀용 벼 재배면적을 현재 85만6,000ha에서 오는 2015년까지 70만ha로 줄인다. 2013년까지 4만ha의 논에 콩이나 옥수수·조 사료 등을 재배해 매년 20만톤씩 쌀 공급량을 줄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쌀 수입 관세화를 위한 논의를 내년까지 마무리 짓는 한편 2012년에는 현재 쿼터제를 관세화로 전환하고 2015년 이후에는 매년 6만톤

의 수입쌀을 감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쌀 생산량의 6% 정도인 가공용 소비를 2015년에는 일본 수준인 15%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5대 분야 55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농수산물 가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수급 불안 품목의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현재 생산량의 10% 수준에서 2015년에는 50%로 대폭 확대하고 저장성 있는 양념류 및 수산물 비축물량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올해 배추 값 파동을 겪으면서 채소를 비롯한 농수산물의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도매시장의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기 위해 하루 가격 상승(하락)폭을 제한하는 '가격조정제' 도입을 위해 농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거래 방식도 농가의 선택에 따라 경매 이외에도 정가·수의 매매 등으로 다양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영일기자 hanul@sed.co.kr

농식품부 업무보고 주요내용

주요품목 수급안정 시스템 구축

축산업 등록제는 허가제로 변경... 농가관리 강화

농수산물 가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가 주요품목에 대한 단계별 수급안정 시스템을 구축해 물가 안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구제역과 관련, 기존 축산업 등록제를 축산업 허가제로 변경해 농가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7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내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농업관측과 계약 재배를 통해 사전에 수급안정화를 꾀하기로 했다. 기상변화 등에 따른 시나리오별 시세예측 모형을 개발·활용해 농업관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로 한 것.

기상이 급변하는 7월~10월에 관측속보를 수시로 발행하고, 정보제공 대상은 유통업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계약재배는 농협중앙회의 참여를 확대해 2015년까지 50%수준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계약방식은 일손 부족으로 농가가 선호하는 포전매매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만약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관측되면 추가 계약 등 계약재배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또 가격 급등락이 심할때 긴급수급 조절을 통해 가격 변동폭을 완

화할 방침이다. 주식시장의 사이드카 처럼 가격조정제도를 통해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꾀하겠다는 의미다. 농식품부는 가격이 폭락하면 계약 재배 농가에 대한 최저보장가격 기준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시장접근물량 증량 및 합당 관계 적용 등 행정 절차를(기존2~3개월에서 15일이내로) 간소화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수급불안 품목에 대해 가격수준별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 평균가격 대비 실제가격의 변동률을 기준으로 가격안정대를 설정하기로 했다. 가격의 상승·하락 폭에 따라 주의·경계·위기 단계로 구분, 내년엔 배추와 무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의 활성화를 통해 대형유통업체 및 외식업체 등의 직거래를 확대키로 했다. 수요자별로 요구품목 및 물량을 사전에 예약하고 확인된 수요량에 기초해 공급자와 연결하는 생협방식의 직거래가 확산될 전망이다.

또 농업인이 주체가 되고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중심이 되는 로컬푸드 개념의 직거래장터도 확충할 계획이다. 김선국 기자 usese@



선미를 저인망식으로 개조한 기선권현망 어선의 조업 모습. 최근 남해안 일대를 중심으로 이처럼 변형된 어구·어법을 사용하는 기선권현망 어선들이 나타나면서 불법조업 여부를 둘러싸고 어민들 간에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신문 DB

어업분쟁조정 전담기구 내년 신설

농림부, 2011년 업무계획서
자원관리 권한 지자체 이양

김태경 기자 takim@kookje.co.kr

내년에 어업분쟁조정전담기구가 신설될 전망이다. 이 기구가 생기면 어장을 둘러싼 어업 갈등과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7일 정부 과학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1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수산분야에서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육성'을 위해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수산자원 관리 강화 ▷양식산업 성장동력 확충 ▷원양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일률적으로 정부가 장악해 온 수산자원관리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돼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율어업이 가능하게 된다. 농수식품부는 내년 3월 지자체로 이양할 과제를 선정한 뒤 6월까지 관련 이양을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 업종 및 지역 간 어업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분쟁조정기구를 상시 기구로 신설하고, 어업분쟁 조정법도 만들 계획이다. 지역·업종별 어업 갈등과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나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농수식품부는 내년에 어업분쟁조정법을 신설해

어업분쟁 조정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전담 직원도 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012년까지 외해가두리 양식어업 확대를 통한 수출전략품목을 육성하고, 지하 해수를 사용한 양식기술 보급 등 양식장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 고효율 배합사료 사용률을 확대하는 등 양식산업 성장동력에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농수식품부는 또 고부가가치 관상어산업 육성대책을 내년 2월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수산 투자정보 기반 구축을 위해 원양산업 총조사를 내년 4월~11월 실시하고 원양어선 현대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소·돼지·닭’ 허가받아야 키운다

축산업 허가제 어떻게 추진되나

내년 말부터 축산업에 진출하려면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배추, 무 등 농협과의 계약재배 물량은 현재 생산량의 10% 수준에서 2015년까지 50%로 대폭 확대된다. 논 4만ha에는 콩, 옥수수 등 타작목 재배가 추진된다.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7일 오후 과천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같은

구제역·AI 위험 높은 농가대상 법률개정안 마련 내년 국회제출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기존 축산업 등록제가 허가제로 변경된다. 축산농가의 차단방역 소홀 등으로 구제역, AI(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질병이 발생하거나 인근지역으로 확산된데 따른 것이다.

구제역과 고병원성 AI에 감수성이 예민한 우제류, 조류를 사육하는 농가 중 사육면적이 50㎡이상인 농가가 대상이다. 질병 발생원인 제공시에는 농장폐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생산자단체와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법률 개정안을 마련, 내년 10월에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제2의 '배추 파동'을 막기 위해 배추, 무 등 주요 수급불안 품목의 농협 계약재배 물

량을 현재 생산량의 10% 수준에서 2015년까지 50%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저장성 있는 양념류·수산물 등의 비축물량도 확대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농안법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 가격 급등락을 완화하기 위한 가격조정제 도입도 추진한다. 농업관측은 재배면적·작황중심에서 시세예측 중심으로 정밀화하고 기상 이변시 월 1회 실시하던 관측을 3회로 늘려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만성적 쌀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2013년까지 매년 논 4만ha에 콩, 옥수수, 조사료 등의 타작목을 재배해 쌀 공급량을 줄여 나가기로 했다.

정부쌀 할인공급과 가공용 쌀 재배단지 조성, 핵심가공기술 개발을 통해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미곡종합처리장(RPC)의 통합·규모화와 쌀 자조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쌀 관세화 논의는 조기에 마무리해 2012년 관세화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내년에 중국 칭다오에 물류 서비스 및 시장분석 등을 담당하는 수출전진기지를 건설하고, 공세적 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내년 농식품 수출목표 76억달러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2014년 완공을 위해 내년부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농어촌의 활력을 위해 농어촌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정예인력 10만명을 육성한다. 정예인력 주도하에 의식개혁, 경영혁신, 특성화 마을 조성,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해 농어촌의 획기적 변화를 도모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 추진 방역의무 위반땐 징역이나 벌금형

●농식품부 새해 업무보고

앞으로 축산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축산업 허가제'가 추진된다.

또 축산농들의 해외여행 후 입국 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하는 한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 발생원인 제공시에는 농장 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쌀은 2012년까지 관세화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는 2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2011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구제역 등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축산업 허가제 △질병 발생농장 보상금 삭감 △축사 출입 차량 및 인력 소독 기록 의무화 △외국인 근로자 신고·교육·소독 의무화 등이 추진된다. 또 축산농의 해외여행 후 입

지방 거점지역 실험실 추진·항원진단 키트 공급도 '가격조정제' 도입으로 도매시장 가격 급등락 완화

국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질병 발생원인 제공시에는 농장폐쇄조치까지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지자체의 예찰·검사 및 초기 진단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 거점지역에 정밀검사기능을 갖춘 진단 실험실 설치를 추진하고, 시·도가축위생시험소에 항원 진단 키트를 공급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가격 불안 해소를 위해서는 기상 이변시 월 1회 실시하던 가격 관측을 3회로 늘릴 방침이다. 주요 수급불안 품목의 농협 계약재배 물량도 현재 생산량의 10% 수준에서 2015년까지 50%로 대폭 확대하고 저장성 있는 양념류·수산물의 비축물량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도매시장 가격 급등락 완화를 위한 가격조정제 도입, 거래방식 다양화, 사이버 거래소 활성화 등의 방안도 추진된다.

특히 쌀의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2012년 관세화 전환을 목표로 관세화를 진행키로 했다.

또는 4만헥타르에 타작목 재배를 추진한다. 정부쌀 할인공급과 가공용 쌀 재배단지 조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핵심가공기술 개발을 통해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쌀 자조금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밖에 △전통·발효식품산업 △기능성 식품과 식품소재·기자재 산업 육성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망 확충시범사업(5개소) 확보 등 11개 과제가 중점 추진될 예정이다.

/정해용 기자 jhy@

매년 20만톤씩 쌀공급량 줄인다

구제역, 쌀·배추 파동, 원양어선 조난... 그레도 농어업 포기 못해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청와대를 떠나 정부과천청사를 방문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였다. 구제역 대처에 여념이 없는 농식품부를 조급이라도 더 배려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올해 농식품부는 사건·사고로 얼룩졌다. 구제역(1·4월), 이삭기온으로 인한 과수파해, 쌀 제고 파장으로 인한 가격폭락, 태풍 콘파스로 인한 배추 파해, 배추파동, 탐구해에서 조업하던 원양어선의 조난, 그리고 다시 구제역...

새해 업무보고도 이들 재난에 대한 대책이 많이 포함됐다.

◆'축산업 허가제'로 전환 = 농식품부는 축산업 종사자의 질병예방의식을 대폭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축산법을 개정해 지금까지는 누구나 계약 없이 축산업을 하던 것을 제한해 앞으로는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다.

방역과 검역 의무도 강화했다. 축산농가는 가축질병 발생국을 방문했을 때는 출국시 사전신고는 물론 입국시 신고·소독을 의무화할 계획이 다. 이 방안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소독방역을 받았을 때만 공항이나 항만을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축산농가가 외국인용 제용할 때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고 축산에 관한 교육 및 소독을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린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농림수산식품부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구제역상황실을 방문해 공무원들을 격려했다. 사진=연합뉴스

88.4%는 국가경제에서 농업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농업·농촌은 특히 안전한 식품공급, 식량의 안정적 공급, 자연환경 보전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인식에 따라 귀농·귀촌인력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02년 789명이던 귀농·귀촌 인구는 2005년 1240명, 2007년 2384명으로 거쳐 2009년 4000명으로 늘었다.

농식품부는 이를 귀농·귀촌 인력을 포함 매년 1만명의 농어촌지역 지도자를 대상으로 지도자 소양, 마을 경영, 조직운영 등을 교육해 '농어촌 정예인력 10만명'을 육성하기로 했다.

농촌마을에 활력이 있고 희망있는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마을만들기 경쟁을 추진해 매년 '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가칭)' 시상도 하기로 했다. 개발도상국 등에서 배우려고 하는 새마을운동용 현대식으로 다시 점화하는 것도 모색하고 있다.

'농어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세울 때 농어촌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지점도 마련해 내년 3월 발표하기로 했다. 학교설립을 인구기준으로 하면 농촌학교는 문을 닫아야 하므로 다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농어촌의 주거 교통 보건의료 등 8개 분야의 서비스기준을 마련해 목표에 도달했는지 평가하기로 했다.

정연근 기자
yjiung@naeil.com

원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원양어선 노후선박을 새로운 선박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잠저선망어선의 경우 건조한 지 21년 이상된 노후선박 비율이 한국은 79%, 일본은 22%, 중국은 0%다.

농식품부는 전통적인 1차산업을 2차 3차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농어업을 종자·생물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투자도 확대했다.

◆'귀농·귀촌 활성화' = 어려움 속에서라도 농어업·농어촌에 희망은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지난 10-11월 조사한 데 따르면 도시민의

본격 쌀 공급량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2012년부터 원양어선 노후선박을 새로운 선박으로 교체하는 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잠저선망어선의 경우 건조한 지 21년 이상된 노후선박 비율이 한국은 79%, 일본은 22%, 중국은 0%다.

농식품부는 전통적인 1차산업을 2차 3차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농어업을 종자·생물산업으로 부가가치를 높이는 투자도 확대했다.

◆'귀농·귀촌 활성화' = 어려움 속에서라도 농어업·농어촌에 희망은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지난 10-11월 조사한 데 따르면 도시민의

V

국회 상임위 보고(3.4)

제298회 국회(임시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2011년도 업무계획 보고

2011. 3. 4.



잘 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농림수산식품부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 목 차 ☐☐

1. 여건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	317
2. 주요 추진과제	318
가. 농어업 분야 위험관리 강화	318
나. 성장동력 확충	321
다. 농어촌 지역 활성화	325

1

여건 전망 및 중점 추진 방향

- 한·미, 한·EU FTA 및 DDA 협상 등으로 시장 개방 가속화
 - * 2011년을 DDA 타결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지 표명(G-20 정상회의)
- '10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국제곡물가격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등 전반적인 원자재 가격 강세 예상
 - * 국제 밀가격 : ('10.1) 192\$/톤 → ('10.6) 176 → ('10.12) 307 → ('11.2) 342
-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녹색성장 및 생명자원의 중요성 증대
 - * OECD 보고서('09) : 2030년 IT 혁명을 넘어서는 바이오경제시대 도래 전망
- 세계 각국의 재정건전화 추진 및 세계경제 성장속도 둔화 전망
 - * 세계경제('10 → '11) : 4.6% → 4.3(IMF) / 4.4 → 3.6(SERI) / 3.8 → 2.7(LGERI)

【 중점 추진 방향 】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

위험관리 강화

- ▶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
-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 재해 등 위험관리 강화

성장동력 확충

- ▶ 농식품 R&D 확대 및 종자·생명산업 육성
- ▶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 ▶ 지속 가능한 수산업 육성
- ▶ 농·수협 개혁 및 FTA 협상 대응

농어촌 지역 활성화

- ▶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을 통한 활력 증진
- ▶ 농어가 경영안정장치 확충 및 복지지원 확대
- ▶ 농어촌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주요 추진과제

가. 농어업 분야 위험관리 강화

1 기후변화 대응력 제고

- 이상기후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추진
 - 기후변화에 따른 생산·품질 영향평가 실시 및 예측 모형 개발
 - * 작물 영향평가 : ('10~'11) 4작목(벼, 마늘, 감자, 참다래)
 - * 예측모형 개발 : 작물별(누계) ('11) 2종 → ('15) 5 / 어종별(누계) ('11) 1개 → ('16) 5
 - 아열대화 등에 적응 가능한 신작물 도입 및 재배기술 개발·보급
 - * ('10) 망고, 패션프루트, 오크라 등 15종 → ('11) 23 → ('12) 30종 이상(누계)
 - 유해생물 발생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외래병해충 감시 시스템 구축 및 피해 경감 기술개발
 - * 외래병해충 예측시스템 : ('11)지중해 과실파리 등 5종 → ('12) 3 → ('13) 3
- 국가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 달성을 위한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추진
 - '11년 목표관리업체에 대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목표 설정(9월)
 - 감축목표 설정·관리 등 온실가스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통계 DB 구축('11~'13년)
- 농어업 분야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지원 강화
 - 농업용 온실의 다겹 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 보급 확대
 - * 보급 면적(누계) : ('10) 6,004ha → ('11) 7,154 → ('12) 8,264
 - 어선의 LED 집어등 설치 및 저효율 노후 기관 교체
 - * LED 집어등 설치('11) : 217척, 노후기관 교체('11) : 70척(500마력 기준)
 - 지열 냉·난방시설 지원 대상을 축·수산분야까지 확대(1월)

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 계약재배·직거래 등 농산물 유통에서 농협의 역할 확대

- 계약재배 확대 및 농가가 선호하는 산지유통인 계약 방식 도입
 - 계약재배 물량 : ('10) 생산량의 10% → ('11) 15 → ('15) 50
 - 농협 영농작업단(15개팀, 150여명)을 구성, 농가 영농활동 지원
 - 계약방식을 다년 계약제(3년 이상)로 변경하고 1개월 이내에 대금 지급
- 산지유통인을 정부의 수급안정 정책 대상에 포함하고, 조직화하여 품목조합으로 전환 유도('11년 중 법인화 추진)
- 유통단계 축소를 위한 농협 직거래 활성화
 - 4개 권역(수도권, 영남, 호남, 강원권)에 「전국단위 도매물류센타」 설립 추진
 - 소비지 공급망 확대를 위해 도매분사를 도매 판매조직으로 개편

□ 농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의 수급조절 기능 강화

- 농업관측은 기상 시나리오별 시세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기상 급변기(7~10월)에 관측주기 확대(월 1회 → 3회)
- 일시적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국내산 양념류(고추, 마늘) 비축물량을 확대(현재 : 3% → '15 : 10)하고 가격 변동성이 큰 배추의 저장 추진
- 정가·수의매매 활성화, 가격급등시 상승폭 완화를 위한 가격조정제 도입 등 도매시장 제도개선 추진(농안법 개정)

* 가격조정제 : 경매가격 급등시 상승폭 완화를 위해 1일 상승률을 제한

□ 대형유통업체와의 거래 확대 추세를 감안,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조체계 강화 및 농산물거래 고시 신설 추진(공정위 협조)

3 재해 등 위험관리 강화

-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농어업재해지원 제도개선 및 지원 강화
 - 신종재해 대응을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
 - 폭염 및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등을 농어업재해 범위에 포함
 - 재해복구 지원단가 현실화 및 재해발생시 경영안정자금 추가 지원
 - * 단가현실화 계획 : ('10) 65% → ('11) 70 → ('12) 75 → ('13) 80
 - 풍수해, 어선, 산불, 가축질병 등 재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대응할 수 있는 종합재난정보시스템 구축('11~'13)
- 저수지·배수갑문 등 주요시설의 안전성 제고 및 구조개선 추진
 - 홍수배제 능력이 부족한 저수지(637개소) 및 양·배수장(140개소) 등에 대해 '17년까지 기능보강 추진('11 : 400지구 시행)
 - 영산강·아산호 등 배수갑문 확장으로 홍수배제 능력 제고
 - * 영산강('09~'12), 아산호('08~'13), 삼교호('11년 예비타당성조사)
 - 상향조정된 설계과고를 적용, 국가어항 방파제 보강·관리 강화
 - * '11년 : 보강계획수립(37개 항), 정기점검(110개 항), 정밀안전점검(10개 항)
- 노후어선의 안전사고 예방 및 어선사고시 인명 피해 최소화 추진
 - 노후어선의 선체 두께 계측 등 선령별 안전검사 기준 강화
 - * (가칭) 노후어선의 안전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9월)
 -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해 자동위치발신장치 설치범위 확대(어선법 개정)
 - * (현행) 길이 45m 이상 어선과 13인 이상 승선 낚시 어선 → (개선) 전 어선
 - 사고발생시 생존율 제고를 위해 구명조끼 및 구명뗏목 보급 확대

나. 성장동력 확충

1 농식품 R&D 확대 및 종자·생명산업 육성

- 농림수산식품분야 R&D 투자규모 확대 및 효율성 제고
 - R&D 투자규모 : ('10) 7,752억원 → ('11) 8,623억원(11.2% 증)
 - 농림수산식품분야 R&D 총괄·조정(컨트롤 타워) 기능 강화
 - 자문기구인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위원회를 심의기구화
 - 농식품부 R&D 기획단을 부·청 공동기획단으로 확대 개편
 - Golden Seed 프로젝트 등 다부처 공동 R&D기획에 적극 참여
 - 실용·산업화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확대 추진
 - * ('10) 60억, 농림바이오 → ('11) 80억, 농림수산식품 분야(수산·식품 포함)
- 민간육종 인프라 구축으로 육종의 다변화 및 활성화 도모
 - 육종세대 단축, 신품종 조기육성을 위한 방사선육종센터 구축(~'13)
 -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으로 신품종 육종의 시너지효과 도모('11~'15)
 - 융복합연구센터(ARC), 석·박사인턴제 등을 통한 육종인력 양성
 - 채소류 육종연구센터 지정(서울대)·운영 중('10~'19, 연 10억원 지원)
- 고부가 신소재 개발 등 생명산업 R&D 확대 및 산업화 촉진
 - 농림수산 유전자원 확보 및 생명자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11~'13)
 - * 유전자원 확보 : ('10) 67만점 → ('11) 72 → ('20) 95
 - 생명자원인 동식물, 미생물을 활용한 천연의약 신소재 등 생명산업기술개발 연구('11 : 522억원) 및 사업화 지원('11 : 80억원)
 - 기술·정보 교류 및 홍보 등을 위한 생명산업대전 개최(11월)

2 식품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 식품외식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충을 위한 기반 조성 추진
 - 국가식품클러스터 단지개발계획 수립('11), 산업단지 착공('12)
 - 지원센터 설립 등 기업유치·지원체계 구축으로 투자유치 본격화
 - 전통·발효, 기능성식품 등의 **상품화 기술개발**에 집중('11 : 248억원)
 - 식품외식종합자금을 신설, 식품기업·외식업체 등의 시설현대화, 원료수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로 융자지원('11 : 700억원)
 - 「외식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 및 「외식산업 종합대책」 수립('11)
- 한식세계화 전략지역·품목 설정 및 지역별로 차별화된 전략 추진
 - '11년은 북미, 동아시아를 전략지역으로 선정하여 집중 지원
 - 비빔밥, 불고기, 갈비 등 기업의 해외 진출 품목을 중심으로 시장 조사·컨설팅·마케팅 및 식재료 표준화 등 지원
 - 지역별 전략 품목의 **현지화 장애요인** 발굴 및 개선방안 연구
- 농식품 수출확대를 위한 생산기반 구축 및 공세적 마케팅 전개
 - 일본·중국·미국 등 주력시장의 현지 대형유통업체와의 직거래 확대
 - 대 중국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전진기지를 구축(청도, 하반기 착공)
 - ASEAN의 한류 열풍을 활용한 마케팅 강화·유망 품목 발굴 및 유럽·중동 등 신규시장에 대한 시장 조사·시험 수출 추진
 - 안정적 물량 공급 등을 위해 품목별 수출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수출지향형 농어가의 품질관리·마케팅·검역을 지원

* 품목별 수출협의회 : ('09) 12품목 → ('10) 16 → ('11) 20

3 지속가능한 수산업 육성

- 연근해어업의 감척 위주 구조조정을 다양화하고,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 친환경·에너지 절감형 어선 신조 추진
 - 감척 외에 어업의 종류 통합·변경, 어구의 사용량 또는 규모 조정, 어선 경영규모 적정화 등 구조 개선 방식을 다양화
 - 노후어선 감척시 적정규모의 친환경 유류절감형 어선 신조 등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

-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율적 어업관리 시스템 구축
 - 정부 주도의 일률적 관리를 지양, 지자체 권한이양 추진
 - 대상 과제 선정(3월), 권한 이양을 위한 제도개선안 마련(6월)
 - TAC(총허용 어획량 제도) 대상 어종(11개 어종) 중 지역성이 강한 품목(제주소라, 흑산홍어)은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이관(12월)
 - 자율적 자원관리를 선도하는 자율관리공동체 육성
 - * 자율관리공동체 : ('10까지) 전 어촌계의 43% (863개) → ('11까지) 47 (950)

- 외해양식어업 확대 등 신성장동력 발굴 및 집중 육성
 - '12년까지 고부가가치 외해가두리 양식어장을 15개소로 확대
 - * ('10) 6개소(참다랑어4/참돔 등 기타2) → ('11) 11(6/5) → ('12) 15(8/7)
 - 갯벌을 활용하여 수출 잠재력이 큰 갯벌 참굴, 해삼 시범 양식 및 갯벌양식 활성화를 위한 제도 마련(4월)
 - 고부가가치 관상어 산업 육성대책 마련(2월)·추진
 - 건전한 낚시문화 정착과 낚시 산업 발전을 위한 「낚시관리 및 육성법」 ('11.2.18. 국회 통과) 하위 법령 제정

4 농수협 개혁 및 FTA 협상 대응

-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을 차질없이 준비
 - 법 개정 후 지체없이 자산실사, 법인 설립 준비 등 사업 분리를 위한 실무 작업 착수
 - 사업구조 개편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족자본 지원, 조세 감면 등 정부 지원 방안 마련
- 수협 중앙회·조합의 지속적 경영혁신 및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
 - 중앙회의 조직·인력구조 혁신(5월), 부실수협(삼척, 장흥, 전남서부) 및 부실우려 수협(39개)의 통폐합·경영개선 추진
 - 산지위판장 및 소비지 물류센터를 연계하는 수산물 물류 체계 구축 등 수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4월)
- FTA 협상은 국내 농정여건 및 농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 협상단계부터 민감성 반영 및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
 - (호주, 뉴질랜드 FTA) 쇠고기, 낙농품 등 민감품목에 대하여 협상력을 집중하고, 농어업분야 교류·협력 확대
 - (콜롬비아 FTA) 주요 민감품목(쇠고기, 낙농품, 열대과일, 화훼 등)에 대한 콜측의 높은 관심을 감안, 양허협상에 신중히 대응
 - (중국 FTA 사전협약) 농수산물의 민감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적극 강구 및 사전적 대응 강화
 - * 한·중 FTA 협상 개시 전 민감분야 처리방안 사전 협의(1차 '10.9월, 2차 미정)
 - 한·미 및 한·EU FTA 발효에 대비, 소득보전직불·폐업 지원제도 개선(시행기간 연장 등)을 위한 FTA특별법 개정 추진

다. 농어촌 지역 활성화

1 농어촌 정예인력 육성을 통한 활력 증진

- 마을별 핵심리더를 육성하여 농어촌 사회 변화를 주도
 - 핵심리더 육성을 위한 지도자 소양, 마을경영, 조직운영, 마을발전계획수립 등의 맞춤형 교육 강화
 - 핵심리더를 중심으로 각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국민적인 농어촌 활력 창출 운동 전개
 -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추진기구 설치 및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마을단위 협의체 구성·운영
 - 마을간 경쟁 촉진을 위해 (가칭)“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 시상
- 젊고 유능한 신규인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 유인대책 추진
 - 농대생 대상 영농정착교육과정 운영, 농고생 대상 현장훈련 및 진학우대 등 안정적 후계인력 양성교육 기반 마련
 - 농수산업 인턴제 전담운영기관 지정 등 관리시스템 내실화
 - 후계농어업인 지원을 자율신청방식으로 전환하고 지원대상 확대
 - * 인원 및 지원규모 : ('10) 2,104명, 1,080억원 → ('11) 2,600, 1,280
 -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농촌유치를 위해 지자체별 전담창구를 구성하고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 귀농귀촌 설계, 정보제공 등을 담당할 (가칭) '귀농 귀촌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등 귀농인의 농촌정착을 지원
 - 농지구입, 시설설치, 양식장구입, 어선구입, 주택신축 등 초기 영농 영어기반 마련을 위한 융자 지원('11 : 600억원)

2 농어가 경영안정장치 확충 및 복지지원 확대

□ 농어업재해보험 등 농어가 경영안정장치 지속 확충

○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상품개선으로 위험관리 내실화

- 재해보험 대상품목 : ('10) 41개 → ('11) 50
- 과수 품목은 종합위험 보장방식으로 연차적으로 전환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품목확대 : ('10) 2개 → ('11) 5
- * ('10) 넙치, 전복 → ('11) 넙치, 전복, 조피볼락, 굴, 김

○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11 : 2,400억원), 농수산경영회생자금('11 : 700억원)을 통한 경영위기 농가의 경영회생 지원

○ 농업인 재해공제 보상수준을 지속 확대하고, 어업인 재해공제 가입대상을 배우자까지 확대

- * 사망시 공제금(백만원) : ('10) 40~60 → ('11) 50~70 → ('14) 100

□ 농지연금·학자금융자 등 농어업인을 위한 복지지원 확대

○ 고령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농지연금제도 시행('11 : 1,530백만원)

- 영농경력 5년이상, 소유농지 3만㎡이하인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에게 농지를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원

○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지원강화 및 영유아 양육비 부담 경감

- 대학 졸업 후 취업난 등을 감안, 학자금 융자 거치기간 연장(1→2년)
- 취학전 시설 미이용 아동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35% → 45) 확대

○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영농교육 및 농촌정착지원 과정 운영

○ 영농 도우미 지원조건을 개선(10일 이상 입원 → 5일 이상 입원)

3 농어촌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농어촌 주민의 생활권역과 동선을 고려한 맞춤형 지역개발 추진
 - 산업·정주 등을 포괄하는 통합형 지역개발 모형을 보급(6월), 지역별로 유형별 개발전략(도시·농촌·도농연계형 등) 수립 유도
 - 중심지와 배후마을 개발전략을 포괄하는 시군 단위 5개년 중장기 계획('10~'14)을 시행하고, 모니터링·평가체계 구축
 - 주택개량(8천호) 지원 및 농어촌뉴타운(5개소) 주택건축 착수('11년)

- 농어촌서비스기준·농어촌영향평가제 운용
 - 시군별 서비스기준 달성 정도를 평가(10월), 삶의 질 계획에 반영
 - 농어촌영향평가제 대상정책 선정(4월), 개선방안 제시(12월)

- 향토자원의 산업화 촉진 및 농어촌 공동체 활성화 추진
 -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농가단위 창업보육지원센터'로 육성하고, 농어촌산업박람회(6월)를 개최하여 안정적 판로 확보 지원
 - * 창업보육 지원센터 : ('10) 4개소 → ('11) 8 → ('12) 12
 - 지역 활력 증진을 위한 농어촌 공동체회사 지원체계 구축
 - 상담, 교육·컨설팅 알선, 모니터링 등을 위한 지원센터 개설(2월)
 - 공동체회사 사업 중 우수사업을 선정(54개소)·지원(개소당 50백만원)

- 자연 생태자원 등 부존자원을 활용한 농어촌 관광 활성화 추진
 -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기존 체험마을과 연계 가능한 거점 지역에 향토음식, 생태자원 등을 활용한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
 - * 한우 테마 불고기팜(울주군), 정원생태공원(합천군) 등 11개 지구 신규 조성 착수
 - 농어촌체험마을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등급제 도입(12월)